



2008

대학(원)생

제27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통일논문집

제27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 대학(원)생 통일논문집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 목 차

## ■ 최우수

-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SNA)을 활용한 ..... 3  
북한의 주요 인물 연결망분석  
이 정 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3학기)  
예 동 균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4학기)

## ■ 우수

- 북한군수산업의 변화가능성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 45  
김 경 산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4학기)
- 김정일 통치시기의 북한 군부 엘리트 집단 구성 변화 및  
성향 분석 ..... 83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시기를 중심으로 -  
최 형 민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4학기)

## ■ 장려

- 남남갈등해결을 위한 인터넷 토론의 발전적 향후 과제 ..... 115  
- 복잡계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을 통한 대안의 모색 -  
정 미 선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4학년)
-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검토 ..... 145  
- 경제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  
김 흥 근 (서울대학교 화학과 4학년)
-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대남 비난 태도 분석 ..... 191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을 중심으로 -  
김 지 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2학기)

〈 최우수 〉

##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SNA)을 활용한 북한의 주요 인물 연결망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3학기 이정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4학기 예동균

###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사회연결망이론과 분석 도구
- III. 북한의 주요 인물 연구 설계
- IV. 북한의 주요 인물 연결망분석(2006년~2008년 상반기)
- V.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SNA)을 활용한 북한의 주요 인물 연결망분석

북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북한의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고, 그동안 매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의 주요 인물을 밝혀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정성적인(qualitative)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방법을 탈피하여 북한의 주요 인물과 인물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한 실험적인 연구(experimental study)이다.

북한의 주요 인물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도구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다. 이 기법은 개인의 개별적인 속성(attribute)보다는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y)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회연결망이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매년 새로운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사회연결망분석을 더욱 용이하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분석프로그램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은 북한의 주요 인물 연구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북한의 사회체제가 폐쇄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도 개인과 개인, 기관과 기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권력층은 김정일 정권의 정권 유지와 후계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매우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또 변화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많은 간부들이 숙청되거나 새롭게 등장하기를 반복하는 현상을 보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주요 인물들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의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 자료를 토대로 북한 주요 인물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원자료(raw data)로는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주간 북한동향』을, 컴퓨터를 통한 인물 네트워크 중앙성 지표의 분석과 이것의 시각화에는 KnowledgeMatrix와 NetMiner3, 일부 통계적 분석에는 SPSS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6년에는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재일이 주요 인물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리재일은 연결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지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군부 소속 장성급 인물들의 결집이 두드러졌음을 확인하였다. 박재경, 리명수, 황병서, 현철해 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심으로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

2007년에는 노동당 비서 김기남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내각 총리 김영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남기가 네트워크의 변방에 등장하였다. 반면 2006년 주요 인물 네트워크의 정점에 위치하였던 리재일은 2007년 들어 쇠퇴하였고, 리제강과 장성택의 노동당내 경쟁구도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2008년 상반기에도 김기남은 위세를 유지하며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였고,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이 새롭게 인물 네트워크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소속기관별로는 북한의 선군정치 전면에 있는 ‘국방위원회’ 소속 인물들이 견고한 인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되었던 2006년 최고의 권세를 누렸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노동당 소속 인물들은 꾸준히 인물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리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내각, 최고인민회의, 기타 분야 소속 인물들은 대부분 네트워크의 변방으로 물러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북한의 주요 인물 서열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서열 1위는 박재경, 2007년에는 김기남, 2008년 상반기에는 현철해가 선정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연결망분석만을 통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정성적인 분석을 가미한 결과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 연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신뢰도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점차 보완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은 북한의 주요 인물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 I. 서론

## 1. 연구목적

북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북한의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폐쇄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인물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힘겨운 작업을 감내하도록 만들었다. 때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특정 엘리트 계층 인물의 신상정보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큰 연구 성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보다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국가구조, 1인 혹은 1당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감안한다면 북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북한은 물론 앞으로의 북한 사회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up>1)</sup> 특히 향후 북한의 후계 체제 성립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의 숙청과 재발탁 여부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는 대학이나 연구소 소속의 개별 연구자 외에도 정부기관, 언론사, 각계 민간 연구소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

1) 2007년 4월 11일 개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가 소환되고 김영일 육해운상이 발탁되었다. 경제전문가였던 박봉주 대신 김영일이 신임 총리로 발탁된 것은 첫 번째, 북한의 경제정책과 에너지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 북한에서도 '출신성분'보다는 실력이 개인의 고위층 진출, 즉 '출세'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여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엘리트”라는 연구 카테고리로는 많은 수의 학위 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과 단행본이 발간되었으며,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매일 북한의 신문, 방송, 기타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각 ‘북한인물2)’, ‘주요인물3)’이라는 형태로 웹사이트를 통해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등의 언론사에서도 북한 정보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의 북한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북한 주요 인물 연구는 인물들의 신상정보와 상황적 추론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방법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북한 주요 인물 연구는 단순한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황적 추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결국 북한 사회가 가지는 폐쇄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인물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연구자들이 우선 북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일부4), 국가정보원 등의 웹사이트나 단행본 형태로 발간되는 ‘인물사전5)’ 등에서도 노동당이나 내각 소속의 주요 인물들 중 일부는 출생지나 학력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6)가 많아 해당 인물들에 대한

- 2) 통일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현재 총 242명의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국가정보원의 북한 ‘인물정보(<http://www.nis.go.kr/app/north/majorperson/list>)’는 북한 주요 인물들의 출생일, 출생지, 직책, 학력, 경력 및 최근 동정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 형태로 축적하고 있으며 통일부에 비해 양적으로 풍부한 인물정보(총 614명)를 제공하고 있다.
- 4) 현재 통일부 웹사이트에 제공되고 있는 ‘북한인물’ 항목에는 북한의 노동당, 내각, 국방위원회 등과 같은 주요 기관 소속 인물들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노동당 지방당 소속의 인물이나 사회문화 분야 인물들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 5) 연합뉴스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인물사전’은 북한 인물사전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종류의 인물사전에 등록된 북한 인물정보는 질적인 면에서 웹사이트에 제공되고 있는 인물정보와 크게 차별점이 없다.
- 6) 2007년 10월 16일 북한 내각 부총리로 임명된 태종수의 경우 출생일, 출생지, 학력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완전한 정보를 얻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통하거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유추를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특정 언론이나 개인에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북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연구자의 왜곡되거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될 수 있어 한계점을 가진다.

두 번째, 현재까지의 주요 인물 연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북한의 주요 인물 각 개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 정치체제가 가지는 특성과 북한에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권력계층도 각각의 소속 기관과 개인, 개인과 개인이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내각 외무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다면, 외무성의 외무상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주요 인물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주요 인물 연구를 위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물론 그 주위의 주요 인물들이나 노동당, 내각 등의 소속기관 인물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주요 인물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의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한 ‘양적 분석방법(quantitative analysis)’을 사용하여 주요 인물들간의 관계와 지위를 분석해보고자 하며, 주요 분석도구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II에서는 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도구로 활용한 사회

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III에서는 인물자료의 선정 및 수집 방법을 통한 연구의 설계, IV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요 인물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 기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에 수행자로 참석한 인물들에 주목하여 주요 인물연결망을 분석하였다. 현지도에 주목한 이유는 북한에서 현지도가 가지는 중요성과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인물들간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한 분석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현지도에 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행자로 참석했다는 보도 자체는 북한 언론을 통해 발표되지만 비교적 왜곡 여부가 가장 적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되었다. 하지만 이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양적 분석방법(quantitative analysis)’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전체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일반적으로 연구되어온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바로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일부 현지도의 경우 수행자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북한의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내세운 이후부터는 주로 군부대 현지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방위원회 소속 인물들이 현지도에 더 많이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 수행자들 중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고작 6회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에 동행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한 주요 인물연결망에서는 매우 미약한 위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영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외하면 형식상 북한의 최고지도자이므로 김정일 위원장과는 독자적으로 대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즉, 김영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에 많이 동행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의 주요 인물 범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의 한 부분인 각 인물들의 출생연도, 출생지, 학력, 주요 경력을 통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에 따른 인물들간의 결속 정도, 가능성을 측정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06년 중앙일보에 의해 한국의 주요 인물들을 출신지역, 학력, 경력별로 분석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sup>7)</sup> 그러나 이 연구를 위한 조사 과정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 수행자에 포함된 대다수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매우 빈약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은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한 ‘양적 분석방법’으로 주요 인물들의 연결망을 분석하였고, 여기에 중앙성(centrality) 지표의 개념을 사용하여 관계의 연결정보를 분석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7) 중앙일보,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서울 : 중앙일보사, 2006)

## II. 사회연결망이론과 분석 도구

### 1. 사회연결망이론

이 논문에서 북한의 인물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론적 기초를 이루는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은 사회연결망이론이다. 개인의 개별적 속성(attribute)에서 개인의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y)으로 설명의 중심을 옮긴<sup>8)</sup> 사회연결망이론은 사회학에서 파생되었고, 전문적인 분석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축구 선수들 사이의 패스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경기 내용을 분석<sup>9)</sup>하거나, 광고대행사와 제작사의 거래 관계를 분석<sup>10)</sup>할 수도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은 실증 자료를 통해 구조를 밝혀내고 네트워크 각 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연결망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노드(node)와 링크(link)로, 노드는 인간, 사물, 사건 등과 같은 행위자를 의미하며, 링크는 행위자간에 측정 가능한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관계는 행위자의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속성(attributes)과는 다른 것이다.<sup>11)</sup> 관계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는 간접연결, 빈도, 안정성, 다중성, 강도, 방향, 대칭성, 호혜성 등이 있다.

[표 1]은 사회연결망에서 관계의 형태를 정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온 자료의 수집문제를 완화시키기

8) 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서울 : 박영사, 2004), p.54.

9) 김혜진,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analysis : SNA)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분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제9권 1호, (서울 :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05)

10) 홍석민, 윤태일, 이기홍, 『광고 대행사와 제작사의 사회연결망 분석-광고 대행사의 소유형태와 규모가 거래관계에 미친 영향』, 『광고연구』 제66호, (서울 :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11) 박진서, 『과학기술 지식네트워크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줄기세포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p.20.

위해 주로 빈도(frequency)와 강도(strength)를 내재하고 있는 네트워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 사회연결망에서 관계의 형태

측정	정의	사례
간접 연결 (indirect link)	두 행위자 사이의 경로(path)가 하나 이상의 다른 행위자에 의해 중개되는 경로	A와 B가 연결되어 있고, B와 C가 연결되어 있다면, A는 B를 통해 C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빈도(frequency)	연결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A는 B와 일주일에 10번 대화를 한다.
안정성(stability)	시간에 따른 연결의 존재	A는 B와 5년 동안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중성 (multiplexity)	두 행위자가 하나 이상의 관계로 연결된 범위	A와 B는 '친구'이며 서로 '자문'을 구하고 함께 '일'한다.
강도(strength)	시간의 양, 감정의 집약도, 친밀도, 상호 서비스 등(연결의 강도에 대한 측정으로 자주 이용되는 빈도 혹은 다중성)	A와 B는 친한 친구, 혹은 A와 B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방향(direction)	한 행위자로부터 다른 행위자로의 연결 범위	A와 B로 작업이 흐르나 B에서 A로는 흐르지 않는다.
대칭성/호혜성 (symmetry/reciprocity)	관계(relationship)가 양 방향을 갖는 범위	A가 B에게 조언을 구하고 B도 A에게 조언을 구한다.

\* 출처 : Brass, D. J.,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Networks in the Knowledge Econom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2. 중앙성(centrality)<sup>12)</sup> 지표

사회연결망분석은 결속<sup>13)</sup>, 중앙성,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브리지, 브로커 등의 주제로 구별할 수 있다.<sup>14)</sup>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중앙성 지표만을 도입하였으며, 현지지도 수행자 네트워크 데이터의 규모 문제로 인해 계산된 중앙성 지표의 의미가 미약할 경우는 논문에서 생략하거나, 선별적으로 제시하였다.

### 1) 연결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

사회연결망분석에서 연결정도(degree)는 한 결점(node)이 맺고 있는 다른 결점의 숫자로서 정의된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나 혹은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연결정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정보의 흐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up>15)</sup> 즉, 연결정도 중앙성이 높을수록 정보를 많이 소유할 가능성 역시 높아져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연결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이 높을수록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 인물들 중에서 인간관계의 폭이 넓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사이 중앙성은 한 결점이 연결망 내의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한 결점이 다른 결점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선, 즉 최단 경로(geodesic) 위에 위치하면 할수록 그 결점의 사이 중앙성은 높아진다.

12) 각 지표의 자세한 계산식은 Freeman(1979 : p.250~256), Wasserman & Faust(1994 : p.177~192), 손동원(2002 : p.111~114)을 참조하면 된다. NetMiner3는 이 계산식을 적용하여 입력받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한다.

13) 결속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포괄성(inclusiveness), 연결정도(degree), 밀도(density) 등이 있다.

14)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 박영사, 2007), p.37.

15) 김용학, 위의 책, p.38.

즉, 사이 중앙성은 다른 결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sup>16)</sup> 이 분석에서는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이 높을수록 최고지도자와 기타 측근 인물들 사이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의 중요도가 높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위세 중앙성(eigenvector)

연결정도 중앙성이 연결 수를 중시하고, 사이 중앙성이 남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중시한다면, 위세 중앙성은 연결된 상대방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준다. ‘호랑이를 쫓아가는 여우에게 호랑이의 위엄이 이전되듯이’ 강자와의 단 하나의 연결이 다른 여러 행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위세 지수 (prestige index) 또는 위세 중앙성(eigenvector)이다.<sup>17)</sup>

## 3. 사회연결망분석 프로그램

사회연결망분석은 기본적으로 계량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컴퓨터의 힘을 빌려야 한다. 소규모 네트워크의 분석은 직관적인 관찰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네트워크의 규모가 장기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사회연결망분석 관련 이론들과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는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규모 자료 처리를 연구자의 수작업이 아니라 컴퓨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은 연구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매우 유리한 사회연결망분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

16) 김용학, 위의 책, p.42.

17) 김용학, 위의 책, p.43.

18) 조일현, 『GBS 학습 환경 하에서 상호작용 연구를 위한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의 적용』,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6권 제2호, (서울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3), p.90.



[표 2] 사회연결망분석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명	버전	목표	개발국가	개발기관	유/무료
NetDraw	1.0	시각화	미국	개인	무료
NetMiner	3.3.0	시각적 분석	한국	(주)사이람	유료
Netvis	2.0	시각적 분석	미국	개인	무료
STRUCTURE	4.2	구조적 분석	미국	개인	무료
Pajek	1.23	대규모 시각화	슬로베니아	개인	무료
UCINET	6.55	포괄적인 분야	미국	개인	유료
KnowledgeMatrix	0.9.06	데이터마이닝	한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무료

\* 출처 : Mark Huisman, Marijtje A. J. van Duijn,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271~272의 표를 재구성

위의 [표 2]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연결망분석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UCINET은 사회연결망과 유사도 자료의 분석을 위해 가장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자주 사용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활용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고 시각화 기능이 다른 SNA 프로그램에 비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NetDraw는 시각화 전용 프로그램으로 UCINET과 함께 제공되는 자매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NetMiner<sup>20)</sup>의 경우 한국의 사회연결망분석 전문기업인 (주)사이람<sup>21)</sup>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강력한 시각화 기능은 물론 사회연결망이론에 근거한 매우 다양한 지표들을 계산하는 분석기능이 탁월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연결망 연구자

19) Mark Huisman, Marijtje A. J. van Duijn,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Chapter 13,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275.

20) NetMiner 홈페이지([http://www.netminer.com/NetMiner/home\\_01.jsp](http://www.netminer.com/NetMiner/home_01.jsp))

21) (주)사이람 홈페이지(<http://www.cyram.com/front.php>)

들이 UCINET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UCINET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최신의 지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한글 처리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 논문에서는 사회연결망이론에 근거한 다양한 지표의 계산과 시각화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sup>23)</sup>.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처리가 완벽할 뿐만 아니라 사회연결망 지표 계산과 시각화에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NetMiner3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분석센터<sup>24)</sup>에서 자체 개발한 Knowledge Matrix<sup>25)</sup>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Knowledge Matrix는 논문 및 특허의 서지정보를 분석하여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행렬 생성, 클러스터링,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 (visualization)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sup>26)</sup>, 이 논문에서 실험적으로 분석한 북한 인물정보 원자료(raw data)를 사회연결망분석 프로그램에 필요한 행렬로 변환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VantagePoint<sup>27)</sup>, BibTechMon<sup>28)</sup>과 같은 외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달리 한글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22)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 박영사, 2007), p.140.

23) NetMiner는 현재 3.3 버전까지 출시되었으며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이 논문의 작성을 위해 NetMiner3 3.3.0 학생용 버전을 구입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http://www.kisti.re.kr>)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특히 정보분석센터는 미래 유망기술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분석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KnowledgeMatrix를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과학기술분야 계량정보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5) KnowledgeMatrix 웹페이지(<http://miso.yeskisti.net/wsp/infoOutline.jsp>)

26) 이방래, 여운동, 이준영, 이창환, 권오진, 문영호, 『계량정보분석시스템으로서의 Knowledge matrix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호, (서울 : (사)한국콘텐츠학회, 2008), p.69.

27) VantagePoint는 美조지아텍 대학에서 개발한 TOAC를 Search Technology社가 상용화한 것으로, 행렬생성과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 강력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8) BibTechMon는 오스트리아 연구회(Austrian Research Center)에서 개발하였으며, 강력한 시각화 기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연결망분석 프로그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네트워크 자료는 소규모 네트워크일 경우 연구자가 직접 행렬자료를 입력하는 수작업이 가능하지만 이 논문에서 활용한 인물정보 자료가 30개월 동안 등장하는 70여 명 분량의 중규모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NetMiner3, Knowledge Matrix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일부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12K 버전을 활용하였다.

### Ⅲ. 북한의 주요 인물 연구 설계

#### 1. 네트워크 자료의 선정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원자료(raw data)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 수행자 명단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북한 주요 인물과 변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주석단 서열과 현지도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주석단 서열은 공개되는 횟수가 극히 적고 주석단 서열이 실제 권력 서열과 직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락된 인물들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sup>29)</sup>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현지도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구는 현지도도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현지도도의 변화 동향에 따라 북한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였다. 북한에서 ‘현지도도’는 최고지도자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군부대 등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을 뜻한다.<sup>30)</sup>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도에 동행한다는 것은 동행자가 최고지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거나,

29) 서석민,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연구-총원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7), p.20.

30) 홍민, 『북한의 현지도도와 경제 운영-계획경제와 ‘교시경제’의 변주곡』, 『정치비평』 하반기, (서울 : 한국정치연구회, 2002), p.173.

비교적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인물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지도도 수행자 네트워크<sup>31)</sup>를 토대로 주요 인물관계를 추출해내고자 하였다.

한편, 현지도도에 동행한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통일부에서 매주 발간하고 있는 ‘북한동향’을 선정하였다. 이 보고서의 ‘V. 주요인물 동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주요 인물로 파악된 인물들의 주간 동정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현지도도에 동행한 모든 인물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제공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내부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매우 신뢰도가 높은 인물 동향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현지도도 수행자 자료의 수집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도 수행자 네트워크를 통한 주요 인물 추출을 위해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sup>32)</sup>의 통일부 ‘북한동향’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수행자를 추출하였고, 아래 [표 3]과 같은 형태로 정리하였다.

분류항목은 크게 방문지역, 방문장소, 수행자, 분야, 방문일자로 구분하였다. 방문지역은 시, 군 단위로 제한하였고, 방문장소는 방문한 공장이나 기업소, 군부대의 고유한 명칭을 입력하였다.

---

31) 본 연구에서는 ‘현지도도’의 의미를 매우 넓게 포괄하였다. 현지도도는 일반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공식 활동을 분류하였을 때 하위의 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현지도도 수행자만을 수집하였을 경우 실제로 최고지도자와 지근거리에서 밀접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관람 등과 같은 활동이 제외되고, 이것은 본 연구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자료는 양적으로 풍부할수록 더욱 뚜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문, 시찰, 현지도도, (내외빈) 접견, (공연, 작품, 경기) 관람, 기념사진 촬영, 행사 참석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모든 공식 활동에 동행한 인물을 모두 자료로 수집하였다.

32) 772호(2006년 1월 9일 발간)~898호(2008년 7월 7일 발간)

[표 3] 현지도 수행자 자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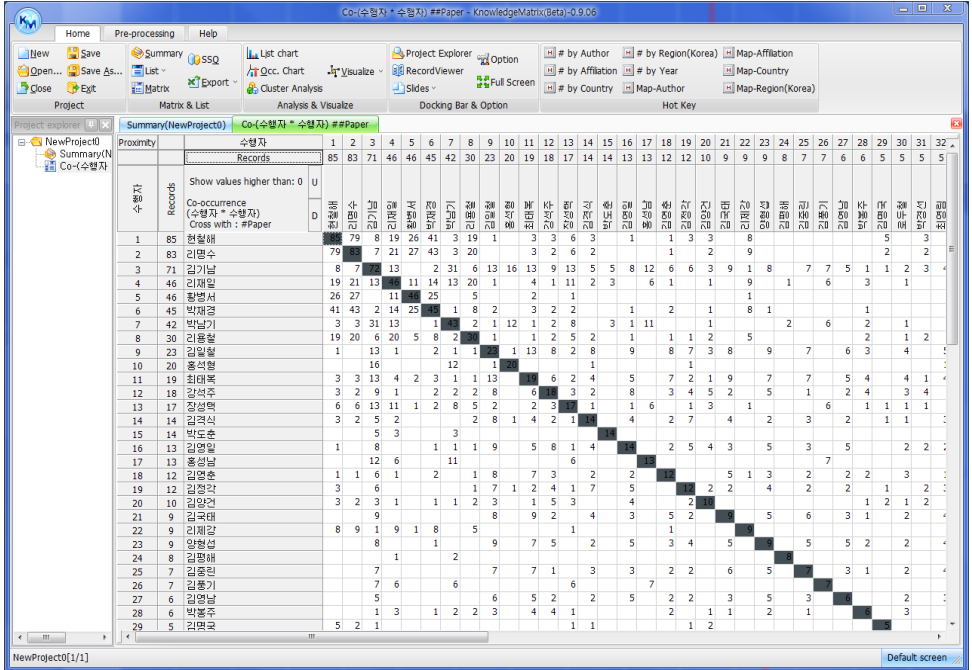
항 목	내 용
방문지역	금야군
방문장소	금야강발전소
수행자	리명수 ; 리재일 ; 리제강 ; 박재경 ; 현철해
분야	산업경제
방문일자	2006.09.12

방문한 장소의 해당 분야는 정치사상, 국방외교, 산업경제, 교육과학기술, 사회문화, 보건의료 이상 6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군부대 소속의 소규모 산업시설을 방문한 경우는 ‘산업경제’로 분류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에 동행했던 인물은 모두 70명, 방문한 지역은 32개 지역, 방문한 장소는 189개소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분류할 경우 국방외교 분야가 101회, 산업경제 분야가 64회, 사회문화 분야가 27회, 정치사상 분야가 20회, 교육과학기술 분야가 9회, 보건의료 분야가 1회로 나타났다.

### 3. 현지도 수행자 네트워크자료의 생성

텍스트 파일 형태로 수집한 현지도 수행자 자료를 [그림 1]과 같이 Knowledge Matrix에서 동시발생행렬(co-occurrence matrix)을 사용하여 행렬 자료(matrix data)로 변환(transform)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추출된(export) 파일을 활용하여 북한의 주요 인물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그림 1] Knowledge Matrix를 활용한 행렬자료(matrix data) 생성 화면



#### IV. 북한의 주요 인물 연결망분석(2006년~2008년 상반기)

##### 1. 리재일의 등장과 군부 출신 인물들의 결집(2006년)

2006년 한 해 동안 총 36명의 인물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를 수행하였다. 다음 [표 4]는 NetMiner3를 이용해 2006년 한 해 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에 동행하였던 모든 인물들의 연결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앙성(Eigenvector)을 계산한 것이다.

[표 4] 2006년 북한 주요 인물들의 중앙성 지표

번호	성명	연결정도 중앙성	사이 중앙성	위세 중앙성	소속 <sup>3)</sup>
1	박재경	0.485714	0.038653	0.516269	국방위원회
2	리명수	0.371429	0.013089	0.512045	국방위원회
3	황병서	0.285714	0.020735	0.353953	노동당
4	현철해	0.371429	0.013089	0.492263	국방위원회
5	리재일	0.742857	0.209635	0.252677	노동당
6	김기남	0.571429	0.05187	0.044739	노동당
7	리용철	0.571429	0.033408	0.138007	노동당
8	장성택	0.542857	0.035018	0.040516	노동당
9	최태복	0.628571	0.046233	0.042988	최고인민회의
10	김영춘	0.542857	0.061496	0.022046	국방위원회
11	리제강	0.314286	0.002614	0.107625	노동당
12	박남기	0.285714	0.005509	0.018711	노동당
13	김풍기	0.142857	0	0.016041	노동당
14	박봉주	0.542857	0.018804	0.01439	내각
15	홍성남	0.142857	0	0.016041	노동당
16	강석주	0.571429	0.072585	0.009393	내각
17	김일철	0.542857	0.041271	0.010018	국방위원회
18	김국태	0.285714	0	0.002715	노동당
19	로두철	0.514286	0.015769	0.005103	내각
20	리광호	0.342857	0.001261	0.006302	노동당
21	김기룡	0.228571	0	0.028393	중앙통신사
22	양형섭	0.314286	0.001316	0.00532	최고인민회의
23	차승수	0.228571	0	0.028393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4	김경호	0.057143	0	0.00416	노동당
25	김동운	0.028571	0	0.001738	노동당
26	김양건	0.314286	0	0.003632	노동당
27	김영일	0.028571	0	0.000065	내각
28	김중린	0.285714	0	0.001096	노동당
29	김태중	0.314286	0	0.003632	노동당
30	림영일	0.314286	0	0.003632	-

번호	성명	연결정도 중앙성	사이 중앙성	위세 중앙성	소속 <sup>33)</sup>
31	오금철	0.114286	0	0.012825	국방위원회
32	전병호	0.285714	0	0.001096	노동당
33	전일춘	0	0	0	내각
34	조명록	0.057143	0	0.000222	국방위원회
35	주학심	0.057143	0	0.00416	노동당
36	최통해	0	0	0	노동당

중앙성 지표 분석 결과 2006년 북한의 주요 인물들의 관계에서 크게 두 가지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리재일<sup>34)</sup>이 가장 높은 연결정도 중앙성(0.742857)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7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한 해 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도를 활발하게 수행하였던 것은 물론 노동당, 국방위원회, 내각 등 각 분야의 주요 인물들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비록 이러한 관계가 현지도도에 동행할 때만 형성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지도도 자체가 지근거리에서 최고지도자와 대동하는 형태임을 감안할 때 리재일의 권세가 대단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위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3위는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용철, 노동당 비서 김기남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 중앙성 지표를 통한 분석 결과에서도 리재일이 압도적인 우위(0.209635)로 1위를 차지하였다. 리재일은 2006년 현지도도 회수(33회)에서는 박재경(42회), 리명수(41회), 황병서(40회), 현철해(39회)에 이어 5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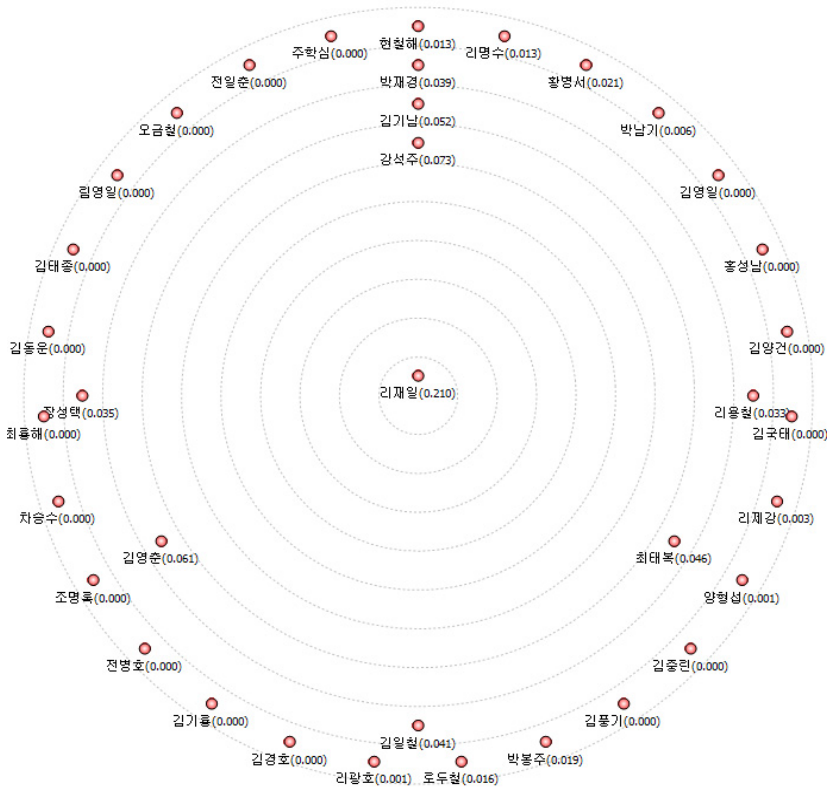
33) 각 인물들의 소속은 통일부 웹사이트의 ‘북한인물’ 정보, 국가정보원 웹사이트의 북한 ‘주요 인물’ 정보, ‘한국인물사전 2007(연합뉴스)’을 교차검증(cross-checking)하였다.

34) 현직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1935년 출생하였다(출생지 미상). 1992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001년 출판지도국 국장을 역임하였고 2004년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2005년에는 연형묵 국가장외위원회 위원에 포함되기도 하였다(출처 : 통일부 북한 인물정보).



하였으나, 노동당, 군부, 내각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현지도도를 동행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리재일은 현지도도 분야별로 산업경제 11회, 국방외교 11회, 교육과학기술 5회, 정치사상 5회, 사회문화 1회를 동행하여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리재일이 불과 2005년 5월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도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sup>35)</sup>을 감안해 볼 때 2006년 들어 최측근으로서 위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는 리재일의 사이 중앙성 지표 분석 결과를 동심원(concentric)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2] 리재일의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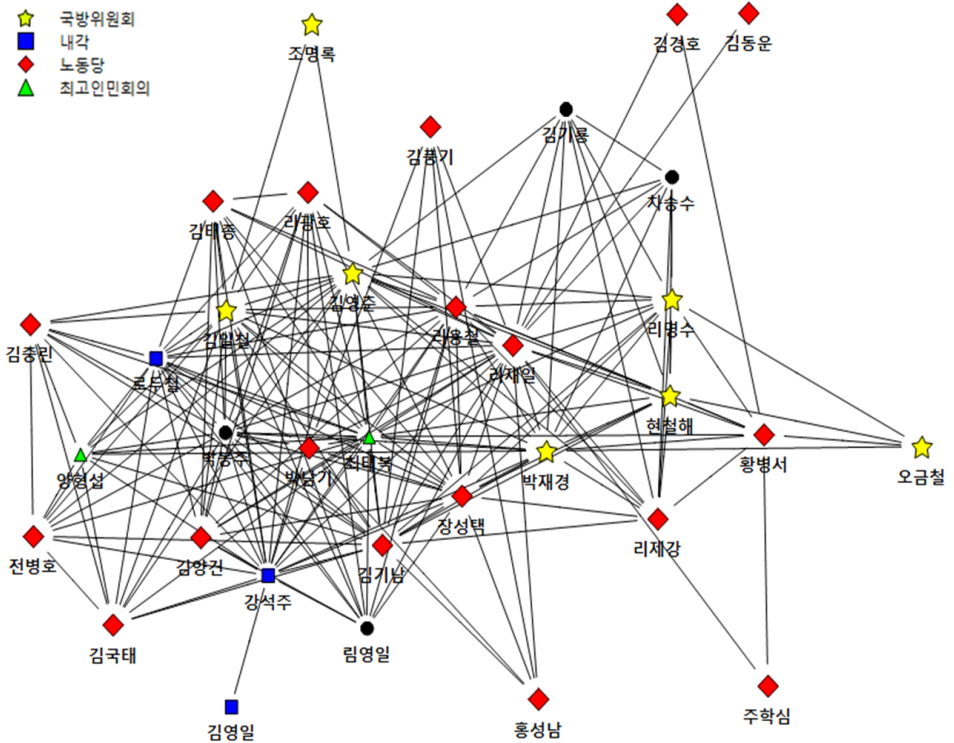


35) 중앙일보 2005년 6월 13일자, “김정일 집권 후 실세 30명 중 26명 새 얼굴”

두 번째, 위세 중앙성(eigenvector) 지표 분석 결과 2006년에는 군부 출신 주요 인물들의 결집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세 중앙성 지수 0.3 이상의 인물은 박재경(0.516), 리명수(0.511), 현철해(0.492), 황병서(0.353)로 총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 중 황병서는 나머지 3명이 국방위원회 소속인 것과 달리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군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군부 출신 인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황병서는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출신이다. NetMiner3를 활용해 시각화한 [그림 3]을 보면 이들 4인방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2006년 북한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



다만 2006년 군부 주요 인물들의 결집과 10월 9일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의 관계 유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으로 밝혀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기로 한다.<sup>36)</sup>

한편, 2007년 1월에 발표된 중앙일보의 기획탐사보도<sup>37)</sup>에서도 2006년에 북한의 군부 출신 인물이 약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북한의 파워엘리트 그룹 468명의 개인 신상·경력, 공식 행사 주석단 명단, 김정일 위원장 현지도도 동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현지도도 수행자 네트워크만을 중심으로 지표를 산출하였으므로 당시의 보도 내용과는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중앙일보의 2007년 1월 4일자 보도에서 공개된 ‘2006년 북한 파워 그룹 50명 서열’에서는 박재경, 리명수, 현철해, 황병서가 각각 서열 19위, 32위, 18위, 28위에 랭크되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명록이 김정일 위원장에 이어 서열 2위로 발표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조명록의 위세 중앙성 (eigenvector) 값은 0.000223<sup>38)</sup>으로 나타나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2006년 주요 인물로 평가된 리재일 역시 2007년 1월 보도된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선정한 서열에서는 권력 서열 27위에 랭크되었다.

36) 이것은 군부대 현지도도시 방문한 부대의 소재 지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군부대의 소재 지역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이들 군부 출신 인물들의 동행 지역을 역추적하여 핵실험과의 연관관계를 미약하나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37) 중앙일보 2007년 1월 4일자, “북한 파워 그룹 대해부 상”, 중앙일보는 2006년 11월부터 통일부, 국가정보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의 인물DB를 활용해 북한의 파워 그룹 468명의 권력 서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내용을 2007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연속 보도하였다.

38) 중앙일보의 분석과 심한 격차가 발생한 또 다른 이유는 중앙일보는 권력 서열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6년까지 소급하여 적용한 반면, 본 연구는 2006년 1년 동안만 발생한 요소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 2. 김기남의 지위 강화와 김영일의 등장(2007년)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2006년 대비 63% 증가) 총 59명의 인물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도를 수행하였다. 다음 [표 5]는 NetMiner3를 이용해 2007년 한 해 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도에 동행하였던 모든 인물들의 연결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앙성(eigenvector)을 계산한 것이다.

[표 5] 2007년 북한 주요 인물들의 중앙성 지표

번호	성명	연결정도 중앙성	사이 중앙성	위세 중앙성	소속
1	김기남	0.706897	0.276902	0.552833	노동당
2	현철해	0.396552	0.060201	0.352046	국방위원회
3	박남기	0.310345	0.100952	0.307663	노동당
4	리명수	0.344828	0.041155	0.313825	국방위원회
5	김일철	0.568966	0.078489	0.25043	국방위원회
6	리재일	0.224138	0.034179	0.130654	노동당
7	홍석형	0.12069	0.00324	0.136702	노동당
8	리용철	0.258621	0.007249	0.159869	노동당
9	김영일	0.586207	0.085679	0.215094	내각
10	박도춘	0.103448	0.005812	0.045859	노동당
11	강석주	0.413793	0.064127	0.155508	내각
12	김격식	0.465517	0.046549	0.139988	국방위원회
13	최태복	0.482759	0.039006	0.177966	최고인민회의
14	김양건	0.293103	0.01275	0.079477	노동당
15	김정각	0.396552	0.025222	0.116295	국방위원회
16	홍성남	0.051724	0.001109	0.065921	노동당
17	김영남	0.413793	0.012254	0.125383	최고인민회의
18	양형섭	0.327586	0.001473	0.130965	최고인민회의
19	황병서	0.137931	0.035396	0.041024	노동당
20	김국태	0.327586	0.001473	0.110535	노동당

번호	성명	연결정도 중앙성	사이 중앙성	위세 중앙성	소속
21	김중린	0.310345	0.000299	0.106052	노동당
22	김평해	0.068966	0.002077	0.009952	노동당
23	박경선	0.275862	0.025673	0.075353	노동당
24	강동윤	0.103448	0.000645	0.030056	노동당
25	김영춘	0.396552	0.0112	0.061669	국방위원회
26	장성택	0.258621	0.013987	0.071521	노동당
27	최영림	0.344828	0.005551	0.08245	최고인민회의
28	김명국	0.103448	0.001695	0.026938	국방위원회
29	김영대	0.327586	0.001473	0.075164	조선사회민주당
30	리득남	0.068966	0	0.02503	노동당
31	박재경	0.224138	0.015094	0.041014	국방위원회
32	박필준	0.068966	0	0.02503	노동당
33	정태근	0.137931	0.000309	0.034367	국방위원회
34	최기룡	0.068966	0	0.02503	노동당
35	최부일	0.206897	0.011517	0.042703	국방위원회
36	곽범기	0.37931	0.008556	0.03985	내각
37	김계관	0.189655	0.002804	0.032291	내각
38	김승연	0.017241	0	0.001048	최고인민회의
39	김윤심	0.086207	0	0.023459	최고인민회의
40	로두철	0.37931	0.008556	0.03985	내각
41	리용무	0.310345	0.000299	0.054309	국방위원회
42	윤정린	0.086207	0	0.02536	국방위원회
43	강능수	0.034483	0	0.008575	내각
44	강창욱	0.189655	0	0.012024	조선농업근로자동맹
45	김경호	0.189655	0	0.012024	노동당
46	김양곤	0.051724	0	0.002935	노동당
47	김진식	0.051724	0	0.00403	노동당
48	김풍기	0.034483	0	0.007758	노동당
49	렴순길	0.189655	0	0.012024	직업총동맹
50	리봉익	0.051724	0	0.00403	최고인민회의
51	리제강	0.051724	0	0.010029	노동당

번호	성명	연결정도 중앙성	사이 중앙성	위세 중앙성	소속
52	마철수	0.103448	0	0.011159	주베트남대사관
53	박순희	0.189655	0	0.012024	조선민주여성동맹
54	유미영	0.293103	0	0.027827	천도교청우당위원회
55	전병호	0.293103	0	0.027827	노동당
56	전승훈	0.189655	0	0.012024	내각
57	조명록	0.293103	0	0.027827	국방위원회
58	지재룡	0.051724	0	0.002935	노동당
59	태중수	0.086207	0	0.009105	내각

중앙성 지표 분석결과 2007년 들어 북한의 주요 인물들 중에서 크게 두 각을 나타낸 인물은 김기남<sup>39)</sup>, 김영일<sup>40)</sup>, 박남기<sup>41)</sup>로 나타났다.

김기남의 연결정도 중앙성, 사이 중앙성, 위세 중앙성은 각각 0.706, 0.276, 0.552로 나타나 모든 중앙성 지표가 59명의 인물 중 1위로 분석되었다. 중앙성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김기남이 2007년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기남은 김정일 위원장의 각별한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전 분야의 귀재로 불리고 있다.

2007년 4월 내각 총리로 임명된 김영일은 연결정도 중앙성이 0.586으로 김기남에 이어 2위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7년 김영일의 현지도 수행 횟수는 12회로 현철해(32회), 박남기(29회), 리명수(28회) 등에 비해 크게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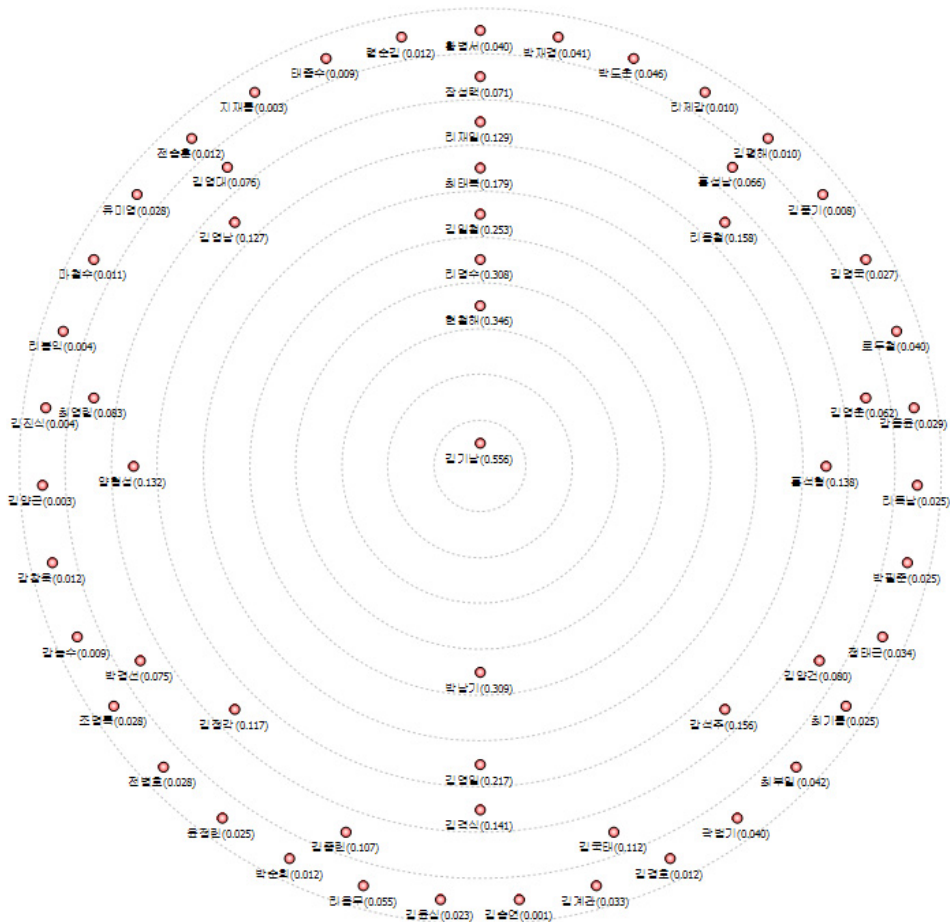
39) 현직 노동당 비서로 1976년 노동신문 책임주필, 1985년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장을 역임하였다. 강원도 원산 출생으로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국제대학교를 졸업하였다.(출처 : 통일부 북한 인물정보)

40) 2007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5차회의에서 내각 총리로 임명되었다. 1944년생으로 함북의 나진해운대학을 졸업, 1998년부터 내각 총리 임명 직전까지 내각 육해운상을 역임하였다.(출처 : 통일부 북한 인물정보)

41) 현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1934년 출생하여 김책공업대학, 레닌그라드공대를 졸업하고 주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였다. 1994년에는 김일성 국가장외위원회 위원(37)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출처 : 통일부 북한 인물정보)

떨어진다. 연결정도 중앙성이 다양한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을수록 지표가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일이 내각 총리로 임명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현지도에 동행하면서 각 분야 주요 인물들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내각 총리로 임명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현지도에 동행 하도록 계획되어 기존의 주요 인물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림 4] 김기남의 위세 중앙성(eigenvector)



2006년에는 전혀 위세를 보이지 않던 박남기도 2007년 들어 급격하게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 중의 한 명이다. 박남기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29회의 현지도에 동행하였고, 위세 중앙성 지수는 0.309로 현철해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박남기는 2004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재기용되었고, 올해 74세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 김정일 위원장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2006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주요 인물로 평가되었던 리재일은 2007년 들어 현지도 동행 횟수(13회)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동시에 연결 정도 중앙성은 29위, 사이 중앙성은 11위, 위세 중앙성은 13위로 평가되었다. 또한 2006년 군부 출신 인물들의 결집이 2007년에는 일부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세 중앙성 지표 분석 결과 2006년 군부 출신 인물로 막강한 위세를 누렸을 것으로 분석되었던 군부 소속 인물 4인방 중 박재경과 황병서는 위세 중앙성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각각 28위, 31위를 기록하였다. 반면 현철해(2위), 리명수(4위)는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2007년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리제강과 장성택의 경쟁구도 역시 변화를 보였다. 2006년에는 리제강(0.107)이 장성택(0.04)보다 높은 위세 중앙성을 보이며, 갓 현직에 복귀하였던 장성택을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2007년 들어 이 지수가 역전되며 장성택(22위)이 리제강(50위)을 완벽하게 따돌렸다. 2007년 8월경 장성택이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승진하고, 노동당의 ‘사회정화’ 작업을 담당하게 된 것<sup>42)</sup>을 보아도 이러한 경쟁구도의 변화는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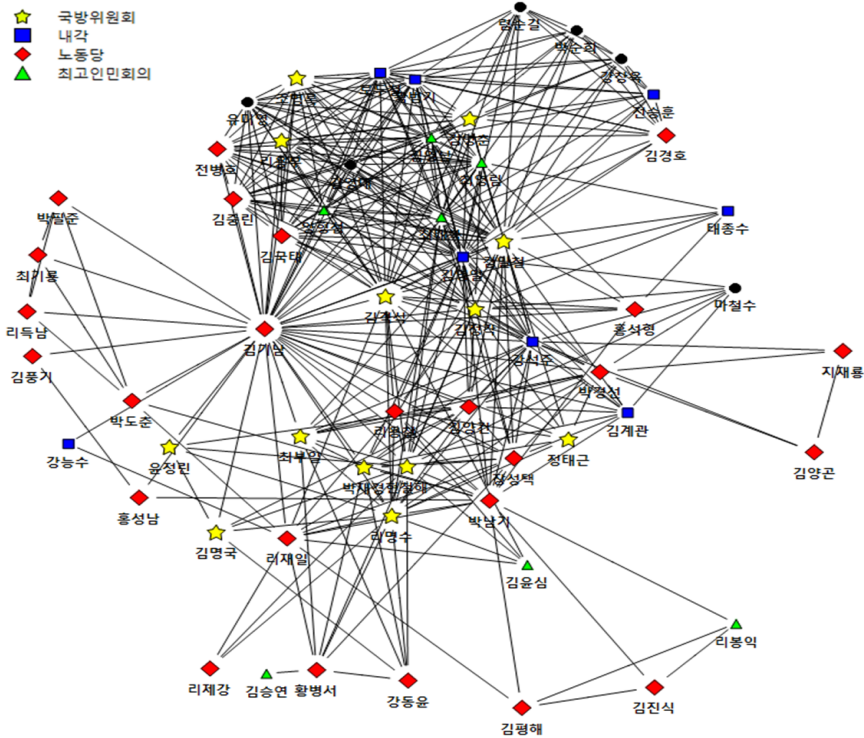
[그림 5]는 2007년 현지도 수행자들의 관계를 시각화한 것이다. 김기남이 노동당, 내각, 국방위원회 등 모든 주요 기관 인물들의 중심에 있고, 김기남을 중심으로 각 기관 소속 인물들이 원형으로 포진되어 있다.

---

42) 동아일보 2007년 11월 21일자, “‘김정일 매제’ 장성택 부활”



[그림 5] 2007년 북한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



### 3. 김기남의 지위 유지와 김정각의 등장(2008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에는 총 23명의 인물들이 현지지도를 수행하였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제(15회), 국방외교(13회), 사회문화(9회), 정치사상(1회), 교육과학기술(1회)로 총 39회의 현지지도 및 각종 대외활동이 시행되었다. 2008년 자료의 경우 상반기 현지지도 수행자 네트워크만을 추출하였으므로,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경향이 2008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다음 [표 6]의 중앙성 지표 계산 결과는 2006년, 2007년의 결과에 비해 비교적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표 6] 2008년 상반기 북한 주요 인물들의 중앙성 지표

번호	성명	연결정도 중앙성	사이 중앙성	위세 중앙성	소속 <sup>43)</sup>
1	현철해	0.5	0.129814	0.534209	국방위원회
2	리명수	0.409091	0.073945	0.526742	국방위원회
3	김기남	0.727273	0.373487	0.548847	노동당
4	박남기	0.181818	0	0.244463	노동당
5	리용철	0.136364	0	0.074835	노동당
6	김일철	0.409091	0.015152	0.033306	국방위원회
7	홍석형	0.045455	0	0.161803	노동당
8	최태복	0.363636	0	0.027144	최고인민회의
9	강석주	0.272727	0.041439	0.062035	내각
10	장성택	0.363636	0.025413	0.114367	노동당
11	김격식	0.363636	0.067447	0.066729	국방위원회
12	박도춘	0.045455	0	0.039559	노동당
13	김영일	0.090909	0	0.00432	내각
14	김정각	0.545455	0.10654	0.089553	국방위원회
15	김양건	0.227273	0.001948	0.045172	노동당
16	김국태	0.363636	0	0.027144	노동당
17	양형섭	0.363636	0	0.027144	최고인민회의
18	김평해	0	0	0	노동당
19	김중린	0.363636	0	0.027144	노동당
20	김명국	0.272727	0.008971	0.06623	국방위원회
21	최영립	0.363636	0	0.027144	최고인민회의
22	박순희	0.363636	0	0.027144	조선민주여성동맹
23	최룡해	0.136364	0	0.038033	노동당

43) 각 인물들의 소속은 통일부 웹사이트의 ‘북한인물’ 정보, 국가정보원 웹사이트의 북한 ‘주요 인물’ 정보, ‘한국인물사전 2007(연합뉴스)’를 교차검증(cross-checking)하였다.

2007년에 이어 2008년 상반기에도 김기남의 위세가 유지되었다. 김기남의 연결정도 중앙성은 0.727, 사이 중앙성은 0.373, 위세 중앙성 지수는 0.534로 모든 중앙성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다른 인물들을 압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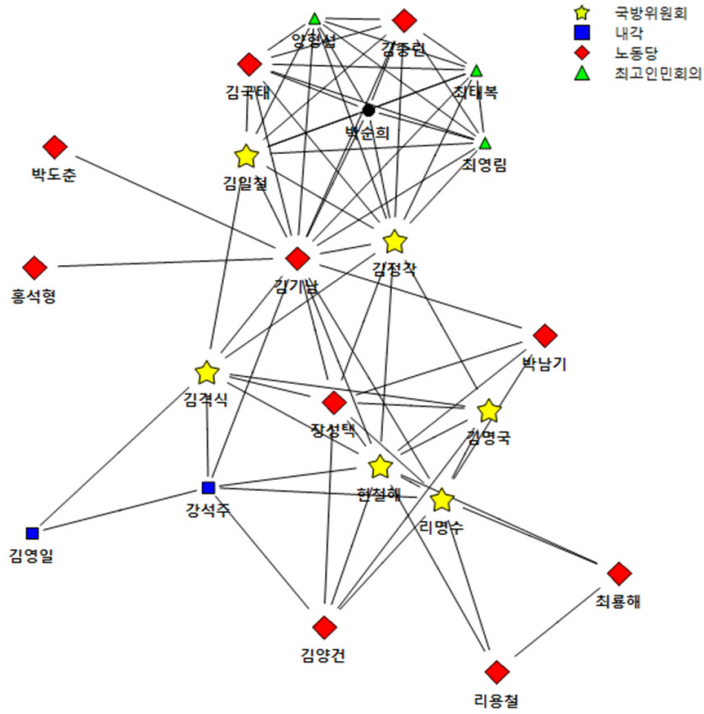
김기남의 지위 유지 외에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김정각<sup>44)</sup>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김정각은 2007년 위세 중앙성 15위, 사이 중앙성 13위, 연결정도 중앙성은 9위로 군부 소속 인물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수행자 네트워크 전체에서는 크게 중요한 위치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에는 연결정도 중앙성은 김기남에 이어 2위, 사이 중앙성은 김기남, 현철해에 이어 3위, 위세 중앙성은 7위를 기록하여 급격히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지위가 상승한 이유는 김정각이 2007년 10월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임명되어 총정치국장 조명록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sup>45)</sup>, 이것이 2008년 들어 본격적인 활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지지도 수행시 더욱 더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동행하게 되었고 각 중앙성 지표를 상승시킨 것이다.

[그림 6]은 2008년 상반기 주요 인물들의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시각화한 것으로, 김기남, 김정각, 현철해 등 주요 인물들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기남은 양측 집단 사이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군부 내에서는 그 역할을 현철해가 담당하고 있다.

44) 1946년 출생으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92년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거쳤다. 1994년에는 김일성 국가장외위원회 위원에 포함되기도 했다. 2000년 당 창건 55돌 기념 열병식 열병총지휘관을 거쳐 2007년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출처 : 통일부 북한 인물정보)

45) 조선일보 2007년 10월 16일자,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김정각”

[그림 6] 2008년 상반기 북한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



#### 4. 소속기관별 중앙성 지표 분석

몇 가지 중앙성 지표를 통해 연도별로 주요 인물을 분석해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상은 국방위원회, 노동당 소속 인물들의 전반적인 득세이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지도도 수행자 네트워크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의 소속기관별로 중앙성 지표를 분석하였다. 단, 분석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당, 국방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의 이상 4개 기관만을 포함하였고, 빈도수가 극히 낮아 결과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 기타 소속기관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표 7] 소속기관별 위세 중앙성 지수 비교(2006년~2008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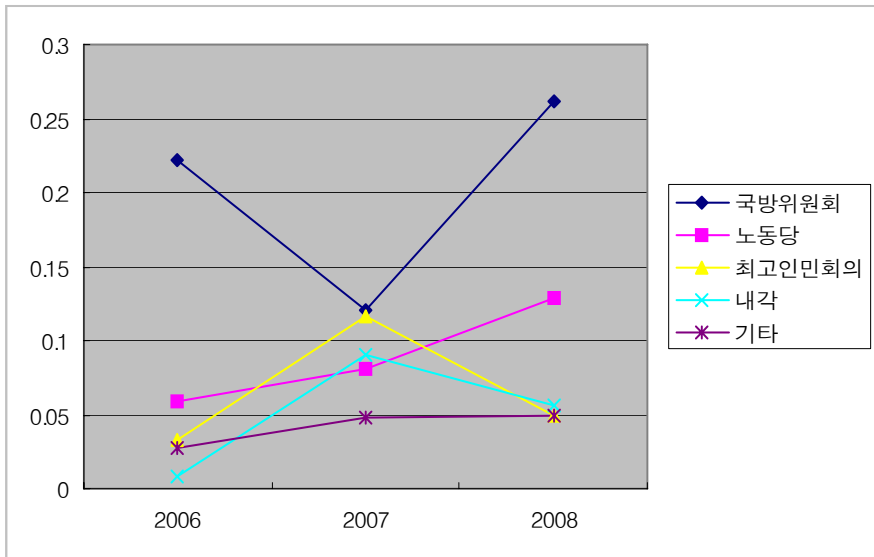
	소속기관	평균	최소	중위수	최대
2006년	국방위원회	0.222	0	0.031	0.502
	노동당	0.059	0	0.008	0.139
	최고인민회의	0.033	0.008	0.033	0.057
	내각	0.008	0	0.009	0.014
	기타	0.027	0.006	0.03	0.039
2007년	국방위원회	0.121	0.025	0.093	0.325
	노동당	0.081	0.004	0.043	0.222
	최고인민회의	0.117	0.001	0.135	0.252
	내각	0.091	0.009	0.06	0.286
	기타	0.048	0.02	0.024	0.049
2008년 상반기	국방위원회	0.262	0.064	0.139	0.56
	노동당	0.129	0	0.09	0.254
	최고인민회의	0.049	0.049	0.049	0.049
	내각	0.056	0.013	0.056	0.1
	기타	0.049	0.049	0.049	0.049

위의 [표 7]은 2006년~2008년 상반기 주요 인물들의 소속기관별 위세 중앙성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2006년 국방위원회의 위세 중앙성 지표의 평균값은 0.222로 나타났고,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위세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방위원회 소속 인물들의 위세 중앙성은 최소 0에서 최대 0.502까지 매우 폭넓은 분포를 나타낸 반면, 노동당, 최고인민회의, 내각 소속 인물들은 국방위원회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7]은 주요 인물들의 소속기관 지위 변화를 각 소속기관의 위세 중앙성 지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국방위원회가 2006년 압도적인 권세를 누리고 2007년 잠시 주춤하였다가, 2008년 상반기에는 2006년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어 북한의 ‘선군정치’가 국방위원회

소속 인물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노동당은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미약하지만 꾸준히 지위가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은 2007년 잠시 상승한 이후 2008년 상반기에 다시 하락세를 보여 향후 이들 기관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림 7] 주요 인물 소속기관의 연도별 지위 변화



## 5. 연도별 현지도도 수행 인물 서열

앞서 분석한 중앙성 지표 중 위세 중앙성 지표를 기준으로<sup>46)</sup>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현지도도 수행 인물 서열 30위를 도출하였다[표 8]. 2008년 상반기의 수행 인물 서열은 네트워크 자료의 빈약성으로 인해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46) 여러 가지 중앙성 지표 중에 굳이 위세 중앙성 지표를 기준으로 서열을 도출한 이유는 V. 결론에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표 8] 북한의 현지도도 수행 인물 서열(2006~2008)

서열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1	박재경	김기남	현철해
2	리명수	김일철	리명수
3	현철해	김영일	김기남
4	황병서	최태복	박남기
5	리재일	현철해	장성택
6	리용철	박남기	홍석형
7	리제강	리명수	김정각
8	김기남	양형섭	리용철
9	장성택	강석주	김명국
10	최태복	김영남	김격식
11	차승수	김격식	강석주
12	김기룡	김국태	김양건
13	김영춘	김정각	최룡해
14	박남기	김중린	김일철
15	김풍기	리용철	박순희
16	홍성남	최영립	최영립
17	박봉주	홍석형	김중린
18	오금철	김영대	양형섭
19	김일철	리재일	김국태
20	강석주	김영춘	최태복
21	리광호	김양건	박도춘
22	로두철	리용무	김영일
23	양형섭	박경선	김평해
24	김태종	장성택	—
25	김양건	로두철	—
26	림영일	곽범기	—
27	주학심	홍성남	—
28	김경호	전병호	—
29	김국태	조명록	—
30	김동운	유미영	—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지도도 수행자 네트워크’라는 형태의 네트워크 자료를 생성하여 주요 인물을 찾아내고,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 자료 역시 기본적으로는 현지도도 횡수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지도도 횡수가 많을수록 해당 인물에게 가중치(weighting)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표 9]의 상관계수표에서 모든 변수들은 한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도 함께 증가하여 정적(+)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현지도도 수행빈도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세 가지 중앙성 지표는 모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세 중앙성 지표값과 현지도도 수행빈도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0.966으로 나타나 매우 강한 관련성이 있다. 위세 중앙성 지표값이 높을수록 현지도도에 많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결정도 중앙성과 사이 중앙성의 상관관계 역시 0.692의 상관관계를 보여 서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도도에서 많은 인물과 만날수록 현지도도 네트워크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이 중앙성과 위세 중앙성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은 전 세계의 연구자들에 의해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며 전통적인 주류 사회학 연구방법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sup>47)</sup> 그러나 사회연결망분석은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성적인

---

47) Linton C. Freeman,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Analysis』, (Vancouver : Empirical Press, 2004), p.167.



[표 9] 중앙성 지표와 현지지도 수행 빈도의 상관계수표

		연결정도 중앙성	사이 중앙성	위세 중앙성	현지지도 수행빈도
연결정도 중앙성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빈도	36			
사이 중앙성	Pearson 상관계수	.692**	1		
	유의확률(양쪽) 빈도	.000 36	36		
위세 중앙성	Pearson 상관계수	.313	.300	1	
	유의확률(양쪽) 빈도	.063 36	.076 36	36	
현지지도 수행빈도	Pearson 상관계수	.420*	.442**	.966**	1
	유의확률(양쪽) 빈도	.011 36	.007 36	.000 36	36

\* P<0.05, \* \* P<0.01

분석결과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논문에서 시도한 북한의 주요 인물 네트워크 분석 역시 정성적인 검증이 없다면 분석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물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계량적인 분석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무수한 연구 결과물과 각종 정보들이 인터넷에 홍수를 이루고 있다. 만약 북한이 개방적인 사회체제로 전환된다면 주요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이고 이전의 연구들이 검증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연구들의 정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잠겨 있고, 정보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현지지도 수행자 네트워크에 포함된 인물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결국 완벽한 구조의 인물 네트워크를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갈증은 다시 ‘폐쇄적인 북한’을 원망하게 만들지만, 만약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국제사회 전면에 등장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주요 인물 연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북한 연구에 대한 일종의 패러독스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Wasserman, S. and Faust, K, 『Social Network Analysis—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손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 경문사, 2002)
- Brass, D. J,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Networks  
in the Knowledge Econom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서울 : 박영사, 2004)
- Linton C. Freeman,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Analysis』, (Vancouver :  
Empirical Press, 2004)
- Mark Huisman, Marijtje A. J. van Duijn,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중앙일보,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서울 : 중앙일보사, 2006)
-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 박영사, 2007)

### [논문]

- Freeman, L. C,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 Vol. 1, (Routledge : 1979)
- 홍 민, 『북한의 현지도와 경제 운영 - 계획경제와 ‘교시경제’의 변주곡』, 『정치  
비평』 하반기, (서울 : 한국정치연구회, 2002)
- 조일현, 『GBS 학습 환경 하에서 상호작용 연구를 위한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의  
적용』,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6권 제2호, (서울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3)
- 김혜진,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analysis : SNA)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분석』, 『한  
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제9권 1호, (서울 :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05)
- 홍석민 외, 『광고 대행사와 제작사의 사회연결망 분석 - 광고 대행사의 소유형태와  
규모가 거래관계에 미친 영향』, 『광고연구』 제66호, (서울 :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 서석민,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연구 - 충원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7)
- 이방래 외, 『계량정보분석시스템으로서의 Knowledgematrix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호, (서울 : (사)한국콘텐츠학회, 2008)
- 박진서, 『과학기술 지식네트워크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 - 줄기세포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정기 간행물]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772호~898호)
- 연합뉴스, 『한국인물사전 2007』, (서울 : 연합뉴스, 2007)
- 통일부, 『2006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서울 : 통일부, 2007)

[웹사이트]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 국가정보원(<http://www.nis.go.kr>)
- NetMiner(<http://www.netminer.com>)
- (주)사이람(<http://www.cyram.com>)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http://www.kisti.re.kr>)
- Knowledge Matrix(<http://miso.yeskisti.net>)
- 조선일보 NK조선(<http://nk.chosun.com>)
- 중앙일보(<http://www.joins.com>)
- 동아일보(<http://www.donga.com>)

〈 우수 〉

## 북한군수산업의 변화가능성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3학기 김경산

### 《 목 차 》

**【요약문】**

**【본 문】**

I. 서 론

II. 북한의 군수산업현황과 특징

III. 북한의 군수산업과 산업현대화 관계

IV. 북한의 체제생존과 군수산업의 변화가능성

V. 결 론 :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 [요약문]

## 북한군수산업의 변화가능성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군사력은 북한의 유일한 존립기반이며 ‘선군정치’는 항상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우선순위의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북한의 ‘호전성’이나 막강해 보이는 군사력은 사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의 현 경제 수준으로 군수산업 및 국방비 유지비용을 조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북한은 비효율적인 현 군수산업의 정리 및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실현 가능한 단기적인 남북경협에만 치중되어 있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위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비핵·개방·3000의 요구에 맞게 북한의 ‘자생력’ 회복에 중점을 두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바라볼 때 나서는 문제점을 주지하고자 진행되었다.

‘선군중심’의 정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층에 있어서 군수산업의 개방은 가장 예민한 부분이며 자체 내부 상황에서 위기와 변화의 시점을 스스로 느끼고 개혁하기 이전에 남한의 훈수나 지도로 개혁을 진행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현 실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서로가 윈윈으로 남북한의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학문적 연구가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며, 냉철한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정치·군사적으로 겹겹이 얽힌 통일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남북통합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구도를 갖춘 북한 군수산업의 조직구조는 1972년에 생긴 군수전담부서인 ‘제2경제위원회’가 기본 모태로 되며, 이 조직은 단순히 내각의

한 부서가 아니라 당·국방위원회의 직접적 지도와 지원을 배경으로 더욱 강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예산’과 ‘조직’ 양면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구조가 정착화되어 있다.

경제개발 초기 남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 북한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외화획득이며 외화자금에 의한 자원분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의 산업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바, 경제난 이후 외화관리 구조로 본 북한경제의 특징은 내각 소속 무역은행의 급격한 약화를 알 수 있으며 북한의 민간경제에 필요한 필수 외화자금(연료, 수입원자재 및 핵심 부품)의 유통은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

또한 군수산업에 전체 외화의 80%에 가까운 자원이 할당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북한의 자생력 있는 경제단위와 산업구조에서 군수산업이 갖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군수산업이 경제 전반에 너무 과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것이 민간경제의 뿌리마저 흔드는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방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군수산업 및 경제전반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이는 한나라의 경제가 깊어져야 할 군사력 건설·유지의 ‘부담능력’이나 ‘군사경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변화가능성을 추론할 때, 즉 체제이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선차적인 고려 대상임을 보여준다.

지금 현재 북한의 여러 가지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민시장 확대에 의한 지하경제 또는 사경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확실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각종 캠페인성 노력 동원은 ‘열정의 장기화’가 가져오는 모순으로 하여 한계에 이르렀으며 민간경제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 동원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적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의 정치·사회구조적 시스템은 정부의 통제력이 그나마 살아있는 군수산업 부분밖에 선택의 길이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군수산업은 기능 위주의 생산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으로 정교한 전자산업이 낙후되어 있고 설계·개발·생산능력 등 전반적인 수준이 낮으며 첨단무기 중심의 세계 무기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 또는 방산제품의 해외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 중국식 군부개혁을 통한 방법으로 풀어갈 확률이 높다. 북한은 군수산업에 필요한 외화획득과 지금 현재의 군수산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국가 공식경제인 민간경제보다 그나마 가동률이 20~30%는 유지되고 있는 군수산업의 개편에 가장 선차적인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경협은 북한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모델이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남북경협 시스템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이 1인당 GDP 3,000달러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군수산업 개편의 중요함을 인지하여야 하며 북한 내부적인 변화 시점을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항상 주시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별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북한의 군수산업 개편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 I. 서론

## 1. 연구목적

군사력은 북한의 유일한 존립 기반이며 ‘선군정치’는 항상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우선순위의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북한의 ‘호전성’이나 막강해 보이는 군사력은 사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 큰 의미가 없다.

근대 국가들은 어떤 체제이든간에 무장과 폭력의 공공적 독점을 기반으로 하여 전쟁 수행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으로서의 존재와 유지를 위하여 자기의 군수산업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단위 민족국가에서 발전된 이러한 군수산업은 국제적 팽창구조 속에서 국제정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지만 국제정치 무대에서 오늘날 북한의 고립은 북한의 군수산업뿐 아니라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까지도 파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와 ‘흑묘백묘’ 이론을 내세운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선택 등 옛 동맹국의 정치적 변화는 북한에 있어서 ‘선군정치’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으며 북한은 중소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집중된 비효율적인 군수산업에 모든 재원을 낭비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북한의 현 경제 수준으로 군수산업 및 국방비 유지비용을 조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북한은 비효율적인 현 군수산업의 정리 및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선군중심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군수 분야의 민수화와 동시에 민간경제 및 민수화된 공장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비롯하여 우리가 원하는 개혁개방의 수준과 비슷한 형태의 방식으로,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주의경제의 ‘현대화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실현 가능한 단기적인 남북경협에만 치중되어 있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위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비핵·개방·3000의 요구에 맞게 북한의 ‘자생력’ 회복에 중점을 두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바라볼 때 나서는 문제점을 주지하고자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고 국민소득의 향상을 위한 사회주의 경제의 현대화 추진(체제이행)을 단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 정비 또는 개편을 해야 할 대상이 군수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향후 군수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 2. 기존연구 검토

북한의 군수산업을 비롯한 국방분야의 연구는 남북한 대치상태에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하여 대북 관련 분야의 그 어느 분야보다 선행되어 왔으며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강도 높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안보와 정치적 민감성으로 하여 중요하지만 항상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왔으며 공개 역시 국가보안법이나 획일적인 반공의식으로 학문적인 연구조차 힘들었던 북한 관련 일반자료들 보다 더욱더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있다.

지금까지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무기체계와 군수물자의 물적 역량 중심의 정태적 방법으로 남북한 군비경쟁의 균형에 대한 연구와 군사적 안보 입장에서 남한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연구에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타당성, 신빙성, 유용성 등에 동태적 요인들을 고려한 ‘전쟁수행능력’에 포커스를 맞춘 평가들이 있다.<sup>1)</sup>

냉전 이후 구소련 중심의 동구권 몰락으로 전세계적인 군비 축소 추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된 국내의 흥미로운 연구는 『북한 군수산업의 경제성 진단 및 남북 통합시 활용방안』(이상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 보고서, 1999)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군수산업의 전망과 남북경제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최성환, 국방대학교, 2002) 등 최근 활발해진 남북경협을 염두에 둔 북한군수산업의 활용이 이전의 연구와는 다른 각도에서 진행된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상균의 연구를 비롯한 ‘북한 흡수통합’이라는 가정하에 진행된

1) 함택영 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한울, 2006) 341쪽

선행연구들은 북한 군수산업의 해체 및 민수 이전 연구에 대한 가치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의 협의 또는 더딘 그들의 개혁개방속도와 병행하기에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최성환의 연구는 이러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경협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북한의 군수산업의 개편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북한의 군수산업’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원론적인 지적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남한 우위 또는 남한 주도의 개방 압력 의지가 다분히 배어 있다.

‘선군 중심’의 정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층에 있어서 군수산업의 개방은 가장 예민한 부분이며 자체 내부 상황에서 위기와 변화의 시점을 스스로 느끼고 개혁하기 이전에 남한의 훈수나 지도로 개혁을 진행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현 실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서로가 윈윈으로 남북한의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학문적 연구가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며, 냉철한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정치·군사적으로 겹겹이 얽힌 통일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남북통합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북한의 군수산업에 대한 선행 연구와 또 다른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즉 북한정권 실체의 인정하에서 그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과 변화를 하게 될 것인지와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 3. 연구범위 및 방법

북한의 군수산업에 대한 연구는 사실 북한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연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군사문제는 정치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는 사안이라 북한의 현 정치적 구조 및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군수산업이라는 기본 내용에 충실하기 위하여

정치적 및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제외하고 군수산업 분야만 범위로 하며 시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이후의 상황에 중점을 두되 역사적인 시차가 필요한 시기의 내용들은 8.15 해방 이후부터 모두 참고하기로 한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조선노동당 안의 ‘군수공업부’가 관할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2경제위원회’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해부와 함께 전국 단위로 집행되는 북한군수산업의 작동 매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현재 군수산업이 민간경제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 문헌 조사와 최근 북한의 외화 유통량, 북한에 대한 최근의 변화에 대한 여러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자료의 분석과 그 논거에 있어서 다양한 이론과 가치관, 연구 각도 등 연구자의 주관적인 행태에 따라 여러 가지 결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접근 방법 역시 개성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논문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국내 및 해외 저서들에 대한 문헌 분석 및 선행 연구, 탈북자 증언, 언론기사 등에 대한 리서치와 함께 본인이 북한에서 28년간 살아온 경험적 사례를 보충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쟁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려고 한다.

- 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서 북한의 군수산업 활용이 왜 우선순위인가?
- ②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③ 북한 군수산업의 변화 방향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 Ⅱ.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특징

### 1.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

현재의 구도를 갖춘 북한 군수산업의 조직구조는 1972년에 생긴 군수전담부서인 ‘제2경제위원회’가 기본 모태로 되며, 이 조직은 단순히 내각의 한 부서가

아니라 당·국방위원회의 직접적 지도와 지원을 배경으로 더욱 강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예산’과 ‘조직’ 양면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구조가 정착화되어 있다.)

[표 1] 1972년까지의 군수산업 관련 조직과 정책의 변천 과정

시 점	변 천 내 용	비 고
1948.9	농림성 외에 모든 산업부문은 산업성이 일괄 담당	첫 헌법 규정 및 SPA* 1-1
1956.11	산업성을 금속, 기계, 석탄, 화학, 전기, 경공업 등으로 분야별 분리, 군수산업은 비밀부서인 제2기계공업성 창설	SPA 1-12, 내각 구성법 2조 개정
1962.12	4대군사로선 채택, 당중앙위 산하에 군사위원회 신설, 군수산업지도 - 기존 제2기계공업성 지도, 지원	당중앙위 4-5차전원회의
1966.10	4대 군사로선 구체화, 당중앙위에 비서국 설치, 그 산하에 군수공업부, 군사부 등 설치-구체화된 4대 군사로선 당차원 추진	당 제2차 대표자회의
1967.12	내각 제2기계공업성 존재 첫 공개(1971년까지 확인 가능)	SPA 4-1 내각구성 결정
1970.11	‘국방력 강화’ 방침 천명	당 제5차대회
1972.초 ~12	중앙인민위 산하에 국방위원회 신설, 비밀부서인 제2경제위원회 발족(기존 제2기계공업성 흡수 확대)	SPA 5-1 신헌법 채택

\* 주 : \* SPA는 최고인민회의의 몇 기 몇 차를 의미

자료 : 함택영 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한울, 2006) 2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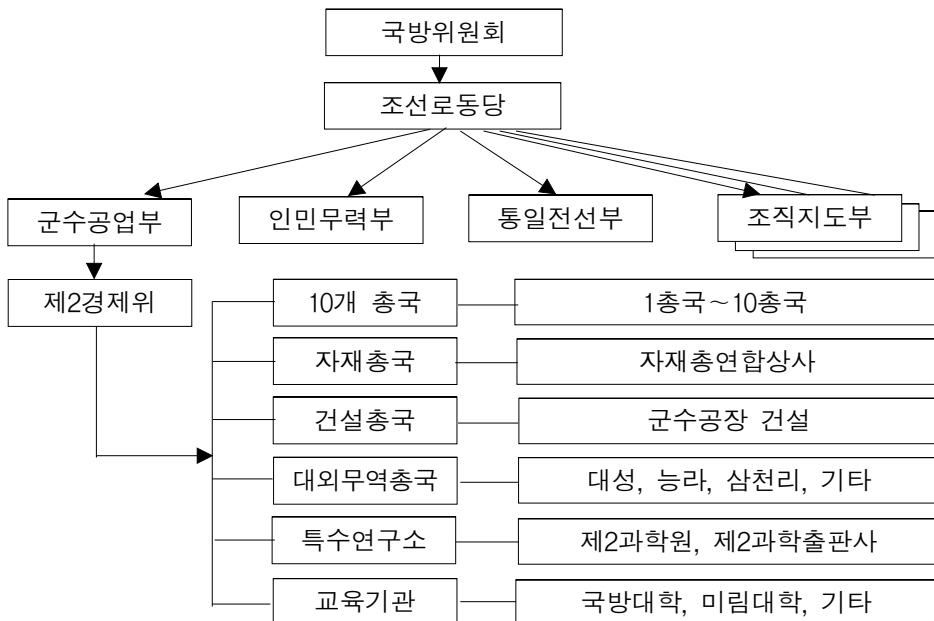
당 군수공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제2경제위원회는 평양시 강동군 노봉산 중턱의 5층으로 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10개 총국, 즉 기존의 8개 총국과 근래에 신설된 2개의 총국, 자재총국, 건설총국 등이 있으며 이외에 자체 특수연구소(제2과학원, 제2과학출판사), 교육기관(국방대학, 미림대학),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대외무역총국 등이 소속되어 있다.

2) 함택영 외, 위의 책, 249~259쪽

제2경제위원회의 제1총국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각종 총기류인데 권총, 자동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을 담당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제2총국은 북한 군수산업의 대표적 총국으로 각종 탄약을 생산한다. 제3총국은 선박 분야, 제4총국은 기계화 무기들인 탱크, 장갑차, 미사일 발사대, 대포 등을, 제5총국은 통신전자장비, 제6총국은 생화학무기, 7총국은 여러 가지 미사일, 제8총국은 철강 등 원부자재 생산을 담당한다. 최근에 신설된 제9총국은 유사 시 민수공장의 군수제품 생산에 대한 지휘 감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10총국의 역할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sup>3)</sup>

생산 지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하며 내각에는 각 위원회와 성에 일용생산을 책임진 제4국(제4처)이 있어서 2경제위원회 지시 아래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지표’ 수행을 감독·통제한다.

[그림 1] 북한 군수산업의 조직 및 작동 구조



3)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 공장』(두술, 2002), 19쪽

[표 2] 북한의 주요 군수산업체 현황

소속	공장상호	위장명칭	생산품목	위치	개설연도	급수	장소
1총국	62호 공장	62호 공장	총기류	평양시 강동군 읍내	1960년	1급	지하갱도
	65호 공장	2.8기계공장	총기류, 기관포류	자강도 진천군 화암	1946년	특급	지하갱도
	62호 공장	62호공장	총기류	평양시 강동군읍	1960년	1급	지하갱도
2총국	26호 공장	강계 트락또르	포탄, 폭탄, 미사일 제조	자강도 강계시 남천동	1956년	특급	지하갱도
	93호 공장	강계정밀기계	소총탄류, 포탄류	자강도 강계시 석조동	1956년	1급	지하갱도
	96호 공장	만포시멘트	포탄류, 방사포탄, 미사일	자강도 만포시 문악동	1960년	1급	지하갱도
	151호공장	독로강 정밀기계	각종 정밀부품	자강도 강계시 석조동	1969년	2급	노천
	67호 공장	67호공장	탄, 포탄류, 미사일부품	평남도 성천군 백암	1960년	1급	지하갱도
3총국	봉대보일러공장	봉대보일러공장	각종 군함, 잠수함 건조 및 수리	함남도 신포시 룡대동	1969년	1급	노천
4총국	81호 공장	성간강철공장	미사일발사대, 중장비, 대포	자강도 성간군 중성간	1968년	1급	지하갱도
	118호공장	조선평양118호	탱크, 장갑차, 수륙양용, 미사일발사대	평남도 개천시 각암리	1970년	1급	지하갱도
	17호 공장	17호공장	탱크, 장갑차, 수륙양용, 미사일발사대	함남도 신흥군	1970년	특급	지하갱도
	방현비행기공장	방현비행기공장	헬기, 경비행기, 미그기조립 생산	평북도 구성시 방현구	1970년	1급	노천
5총국	11호 공장	장자강전기공장	통신장비	자강도 성간군 읍	1970년	2급	노천
	38호 공장	청년전기공장	통신, 전자장비	자강도 희천시	1960년	특급	노천, 지하
6총국	77호공장	아오지 화학공장	화학무기, 화학제품	함북도 은덕군 아오지	1970년	1급	노천
	본궁 화학공장	본궁화학공장	화약류, 화학제품	함흥시 사포구역 역본궁	1960년	1급	노천
7총국	평양 산음공장	평양산음공장	미사일 전문생산	평양시 형제산구역 역산읍	1979년	1급	노천, 지하
8총국	만포은하공장	만포은하공장	유색금속, 동제련	자강도 만포시 문악동	1980년	2급	노천
9총국	전국단위	일용품직장	유사시 군수전환	전국단위			노천

\* 자료 : 고철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 공장』(두솔, 2002), 52쪽 표 수정 편집

제2경제위원회 내부에서 제일 크고 영향력 있는 부서는 2총국과 7총국이며 이외에도 제2경제위원회 및 인민무력부 산하에는 원유 공급을 담당하는 봉화화학공장(평북 피현군), 승리화학공장(함북 나진), 피북 전문 공장인 강계편직물공장, 석탄 전문 공급처인 개천탄광, 각종 수산물, 농장, 목장 등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공식 통계에 속하지 않는 거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북한 군수산업의 규모를 단순히 관련 공장의 갯수로 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워낙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추측은 가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국내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44개의 전문공장과 136개의 수리공장을 포함하여 180개의 공장이 있다고 한다.<sup>4)</sup> 그러나 전국 단위의 각 공장기업소에 있는 ‘군수일용’ 직장까지 포함하면 북한에 존재하는 군수산업 관련 공장의 갯수는 북한 전역에 있는 공장의 갯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3] 북한의 주요 군수공장 현황

구 분	갯 수	전문공장	수리/부품
총·포 공장	43	8	35
기갑차량 공장	12	2	10
함정조선소	12	2	10
항공기 공장	9	2	7
유도무기 공장	8	5	3
탄약 공장	55	19	36
전자통신 공장	14	6	8
생화학 공장	16	—	16
기타 군수 공장	11	—	11
총 계	180	44	136

4) 유길재, “조선인민군의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연구”, 『안보학술논집』(국방대학교, 2000), 247쪽



2008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11기 6차회의에서 밝힌 북한의 공식적인 대외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8% (전체 예산 45,129,438만원)이다.<sup>5)</sup>

북한 군수산업의 생산 규모 및 자체 조달 추이는 일정한 추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체 생산 능력과 함께 소련과 중국의 군사 원조 및 무기 이전 수준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며 그 규모는 1981년 최고 21억 달러, 1990년대 후반 이래로는 약 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sup>6)</sup>

액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80년대 중반 최고 23억 달러, 최근에는 10억 달러 전후의 실제 군사비를 추정하는 사례도 있다.<sup>7)</sup> 최근 생산 규모가 줄어든 데는 경제난과 함께 재래 무기의 포화 상태 및 무기개발의 방향이 미사일, 핵무기 등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군수산업 분야 종사자인 한 탈북자<sup>8)</sup>의 증언으로는 국민경제의 40%와 외화 획득의 45%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황장엽 씨의 증언에 따르면 수백 개의 공장과 50만명에 이르는 고용 인력이 군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sup>9)</sup>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GNP의 25%, 전체 예산과 대비할 때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사회 총생산의 30%를 웃도는 북한의 군수산업의 경우 러시아의 8%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다.<sup>10)</sup>

하지만 북한이 처한 상황과 개발 초기 남한의 경험으로 볼 때 현재 북한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외화 획득이며 외화자금에 의한 자원분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의 산업별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5) 최수영,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06』(통일연구원, 2008)

6) 함택영 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한울, 2006), 331쪽

7) 성채기 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한국국방연구원, 2003) 참조

8) 고청송, 1993년 탈북, 자강도 군수산업 지역의 외화벌이 지도원

9)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1999) 참조

10) 이상균, 『북한 군수산업의 경제성 진단 및 남북통합시 활용방안』(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24~26쪽

본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북한의 외화 관련 중앙부처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김광진’ 씨가 밝힌 북한의 외화 유통 규모에 대한 자료는 북한의 전반적 경제에 대한 북한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어떤 구조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자료로 볼 수 있다.

[표 4] 주요 외화은행별 유동자산 수준비교(2000년 기준)

은행이름	외화유동자산	비고
창광신용은행	10억 달러 추정	*군수공업부, 대외적으로 60억 주장
일심국제은행	1억 2,000만 달러	*인민무력부 소속, 전신 조선금성은행
동북아시아은행	1억 5,000만 달러	내각소속, 외국회사 대상, ING 투자실패
조선통일발전은행	1억 달러	당 경제정책 검열부 소속, 홍콩 투자실패
대성은행	3,000만 달러	내각소속, 경제난 이전에 가장 큰 규모
고려은행	2,000만 달러	당 38호실, 국내 호텔, 외화상점, 식당 등
조선무역은행	500만 달러	내각소속, 중국 단동, 주해에 분점
황금의 삼각주은행	100만 달러	내각소속, 나진선봉지구 외화 관리
총액	14억 2,600만 달러	*군부산하 유동자산이 79%

\* 자료 : 김광진,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수은북한경제』 (수출입은행, 2008년 봄호) 및 석사논문을 참고로 재편집함.

위의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경제난 이후 외화관리 구조로 본 북한 경제의 특징은 내각소속 무역은행의 급격한 약화를 알 수 있으며 북한의 민간경제에 필요한 필수 외화자금(연료, 수입원자재 및 핵심부품)의 유통은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수산업에 전체 외화의 80%에 가까운 자원이 할당된다는 것은 현재 북한의 자생력 있는 경제단위와 산업구조에서 군수산업이 갖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 2. 군수산업의 특징과 북한에서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군수산업이라는 용어는 군사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립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병기류뿐 아니라 피복, 군량, 의료 등의 일반 품목에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최근 군사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더불어 민수경제와 양립되는 양용기술의 적용 등 어디까지가 그 한계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남한이 군수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미국에 의해 조정되는 안보적 취약함뿐 아니라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수생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처럼(J. E. Nolan 1986) 북한도 자주적, 자립적 군사노선으로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수입하였지만 선진국의 무기 기술 이전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B. E. Arlinhaus, 1984)

군사기술의 비생산성은 경제발전의 기여도가 거의 없으며 기술 제공국의 의존성 증대와 지역간 경쟁 유발, 초기의 높은 단가와 낮은 생산비를 유지하기 위한 수출 및 판로의 어려움 등으로 하여 부진을 면치 못하며 이는 국내 경제규모의 소화 능력(군비 증액)을 넘어설 수 없다.

군수산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2차대전 이후 군수산업의 특징만을 살펴본다면,

- ① 일반 기업들의 생산 시설로 활용하던 군수산업이 군사기술의 고도화로 독자적인 산업부분으로 전시 상태가 아닌 ‘항상대기’ 산업으로 이전
- ② 경제와 군사의 관계에 있어서 군수산업이 단순히 전체 경제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수동적 요소가 아니라 군사비의 비생산적 속성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 군수산업 기술을 경제성장에 활용 등 능동적 요소로 작용
- ③ 군사경제의 국제적 연관성 강화
- ④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를 양분하는 냉전체제와 연관되어 왔으며 냉전이 해체된 오늘날 ‘지역적 군사화’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 상대적 강도는 변하지 않고 있음.

군수산업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일반산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비효율

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에 투자되는 개별적 국가들의 군사비,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의 군사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수산업은 기술, 생산, 유통의 자립화가 없이는 글로벌 경제구조에서 살아남기 힘든 산업이며, 육해공군의 통합 작전 수행을 위한 실시간 첨단체제인 C4I체제 (Command &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구축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민간기술에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양용기술의 개발을 통한 군수산업의 생존전략이 세계적 추세이나 개도국에서 겨우 벗어나려고 애쓰는 북한의 능력으로는 군수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나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표 5] 군수산업과 일반산업의 특성 비교

비교 요소		일반산업	군수산업
수요		시장분석에 의거 불확실한 수요 예측 수요자의 다수	정부계획에 의거 비교적 확실한 수요 예측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
공급		공급자의 다수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방산업체가 유일한 공급자 공급자의 임의 대체 곤란
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중요성		가격이 지배요소	신리도, 성능
산업구조	투자규모	한정적 규모	대규모
	기술정보	단순화, 정밀도 낮음	종합화, 정밀도 높음
	기술속도	완만	급속
	생산분비 투자회입	단기	장기
가격 결정		한계비용에 의해 결정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 하락	총비용에 비례 요구된 군성능에 의해 지불 군수 감소에 따라 가격 상승
시장 상태		시장진입, 이탈의 자유 시장은 점진적으로 균형 시장규모는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	시장진입, 이탈의 어려움 연도마다 불균형 시장규모는 국방예산에 의해 결정

\* 자료 : 김형균, 『군수산업의 사회학』 (세종출판사, 1997), 40쪽

북한의 군수산업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군수산업이 경제 전반에 너무 과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것이 민간 경제의 뿌리마저 흔드는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군수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완성품에 들어간 투자비용의 확대 재생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비용의 회수는 완성 제품인 무기 및 탄약의 소비와 수요를 유발하는 전쟁을 통한 방법이 아니고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산업이다.

직접적 전쟁이 아닌 세계 분쟁 지역의 무기 수출을 통한 자위적 군수산업 육성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막강한 군사·정치적 파워가 없는 약소국들의 국가전략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남한은 국방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처럼 미국의 막대한 군사 원조로 조성된 잉여 자본을 민간경제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경제력 토대에 맞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외부 원조 없이 독자적인 자주국방에 많은 지출을 하여 왔다.

남북한이 휴전협정으로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중소 규모 국가들의 적정 군비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 대비 산업구조는 군수산업 위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군비경쟁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모형들이 많지만 북한경제 침체에 따른 개방의 불가피성과 김일성 사후의 북한 정치체제 불안정은 남북한 군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는 현재 1989년 동구의 해체, 1990년 독일의 통일 및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에 의하여 재편되고 있으며 신국제 질서는 탈이념, 탈군사화, 양극 체제의 해체 및 경제전쟁을 특징으로 한다.<sup>11)</sup>

북한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군수산업 및 경제전반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이는 한나라의 경제가 쪼아져야 할 군사력 건설·유지의 ‘부담능력’이나 ‘군사경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변화가능성을 추론할 때, 즉 체제이행으로 넘어가는

11) 이은국, 『남북한 군비경쟁 행태분석론』(대영문화사, 2007), 104쪽

과정에서 가장 선차적인 고려 대상임을 보여준다.

다음에 나오는 [표 6]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의 양적 군사력은 세계 4~5위 수준이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경제력은 세계 89위 수준에 불과하며, 경제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는 무려 198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6] 북한의 주요군사력 지표와 세계 속의 위치 (2000~2004 기준)

구분		북한 보유 수량	세계순위	비고
병력	현역	110.6 만명 (인구대비 비율)	5위 (1위)	중, 미, 인도, 러시아 다음
	예비병력	470만명	2위	러시아 다음 ※ 한국 3위
지상군	전차 (MBT+기타)	4,060대	5위	러, 미, 중, 터키 다음 ※ 한국 9위 <sup>3)</sup>
	장갑차 (APC+AIFV)	2,500대	9위	러, 미, 중, 우크, 이스 다음 ※ 한국과 대등
	야포 총계	17,900문	3위	중, 러 다음
	그중 중 야포 (박격포 제외)	10,400문	3위	중, 러 다음 ※ 한국 4,774문
	대공포	11,000기	1위	※ 한국 780기
	지대공미사일	10,000기	1위	※ 한국 1,090기
	지대지미사일 발사대/수량	64/290+	6위	미, 러, 중, 우크, 이스, 다음 ※ 한국 12위
	지하군사시설	약 8,200개	1위	※ '전국 요새화' 결과
해군	수상함	353	18위	※ 한국 6위
	잠수함	26	4위	미, 중, 러 다음 <sup>3)</sup> ※ 한국 6위
	잠수정	66	1위	※ 주로 특수부대용
공군	항공기	1,130	5위	미, 중, 러, 인도 다음 <sup>2)</sup>
특수부대		약 10만	1위	대부분의 국가는 소규모 수준
화생방	화학무기	2,500~5,000톤 <sup>5)</sup>	최다수준	※ CWC 가입 안함

구분		북한 보유 수량	세계순위	비고
무기	생물무기	다수	유수수준	
	핵무기	1~8개 가능 <sup>1)</sup>	유수수준	미, 러, 중, 프, 인, 파, 이스 등 핵무기 보유국/근접보유국 대열에 진입 수준
경제력	GDP <sup>4)</sup>	296억 달러	89위	총 230개국 기준 ※ 한국 8,578억 달러, 14위
	1인당 GDP <sup>4)</sup>	1,300 달러	198위	총 232개국 기준 ※ 한국 17,800 달러, 50위

\* 자료 : 별도 언급이 없는 한 Military Balance 2004/2005에 기초함.

주 : 1) 미국 CIA의 공식 평가 기준 : Sharo A. Squassoni,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ow Soon an Arsenal?" (CRS Report for Congress, Feb. 2004) 참조

2) Institute for Defense & Disarmament Studies(IDDS)의 세계 무기보유 데이터베이스 참조

3) Military Balance 2004/2005 및 IDDS 데이터베이스 종합

4) 2003년 기준 구매력 평가 지수에 의한 수치; US CIA, World Factbook 최신판

5) 대한민국 국방부, 『2004 국방백서』(서울 : 2005)

현시기 지구상에서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주요한 특징인 금융자본의 융합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무기제조 분야이며, 자본은 전 세계적 규모로 상호 연계되어 있고, 군비확대와 전쟁을 통해 번창하고 있다.<sup>12)</sup> 현재로서는 서방의 선진국 클럽이나 또 다른 형태의 금융 및 정치·군사적 카르텔에 아직 남북한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도 끼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립 단계를 겨우 벗어난 북한의 군수산업은 경제규모와 산업구조에서 그 어떤 나라들보다 심각하게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2) 강동일(역), 『초국적기업과 군국주의』(서울 : 새길, 1988), 81쪽

### Ⅲ. 북한의 군수산업과 산업현대화 관계

#### 1. 군수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군수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중앙 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하부조직에 하달된다.

일사불란한 중앙집권적 명령 지휘 복종 체계 시스템인 북한에서 ‘당중앙 군사위원회 명령’은 모든 명령 지휘 순서의 최상위에 있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의 불복종 및 태만은 그 어떤 중죄보다 더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

만성적인 노동인력 및 원자재 등의 부족을 야기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자원분배 시스템 하에서 제2경제산하의 자원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생겨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은 북한의 군수산업이 최근 경제난의 여파를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북한군 대령 출신의 탈북자 증언<sup>13)</sup>에 따르면 “국가계획위원회에는 인민 무력부 소속의 군수계획국이 있으며 군예산을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하는 일을 맡고 있다. 무력부에서는 해마다 8월부터 종합계획국의 주관하에 각 국, 군단(군중, 병종사령부) 대표들로 계획상무조를 조직해 다음해 군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한다. 종합된 예산안은 군수계획국에 넘겨지며 군수계획국은 인민무력부뿐만 아니라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모든 무력 기관의 다음해 예산안을 받아 종합 검토하고 최종 예산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 건설이 처음부터 군사경제적 성격에서 출발하여 모든 정책기조가 ‘사회주의 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을 혁명기반화하여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최근 북한 경제 정책의 싱크탱크 주역들의 논문에서도 군수산업을 중시하는 이러한 기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sup>14)</sup>

13) 김광진, 『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논문 58쪽 재인용



북한의 군수산업이 민간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추정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국방정책은 1991~2003년까지 북한의 군사비를 50억\$ 내외로, 북한 국민총생산액의 25~30%를 국방비를 쓰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및 국민총생산 추정 자료에(1인당 GNI 1,108\$) 근거한 이러한 군사비 추정은 신뢰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종석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의 추정치와 UN 통계와의 차이(2005년 1인당 GNI 516\$), 베트남과의 차이(1인당 GNI 616\$)를 비교하면 북한의 현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금까지 학계에서 인정되어 오던 한국은행의 통계수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06년 통일부는 국민소득과 국방비 추정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한 결과 북한의 1인당 GNI는 194~605\$, 평균 368~389\$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2006 국방백서」에서 발표된 북한의 공식발표 군사비 4억 7천만\$를 단순 대입하면 21~29억\$가 추정된다.<sup>15)</sup>

북한의 외화 유동자금에 대한 위의 자료 [표4]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의 가용 외화자금의 80%가 군수산업에 배분된다는 것은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현재 군수산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2. 현대화 추진(체제이행)의 정치·경제적 요인

체제이행 요소에는 위로부터의 변화인 정치개혁과, 아래로부터의 변화인 사경제 또는 지하경제의 변화 등 ‘시장에 의한 자생적 질서’의 확산 등이 될 수 있다.<sup>16)</sup> 체제이행을 위한 북한의 변화는 그들식 표현인 ‘사회주의경제의 현대화’ 추진으로 포장되어 곧 자본주의 체제이행을 의미하는 그 속

14) 북한 계간지 『경제연구』, 2006년 봄호에서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발전 강조’

15) 『월간조선』, 2008년 4월호, 142쪽

16) 최봉대, 구갑우,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서울 : 북한대학원대학교, 2003), 125쪽

내를 점차적으로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북한의 여러 가지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민시장 확대에 의한 지하경제 또는 사경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확실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이행이란 변화를 감지하는 시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날 징후는 바로 정부 주도의, 정부의 통제권이 가장 확실하게 살아있는 군수산업의 개편이 될 것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 먼저 체제이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 북한을 움직이는 정권 실세들의 세대 교체 과정에서 기존 세대의 특징을 계승하는 지배계급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려면 정권을 움직이는 지배 계층 내부의 대항적 정치세력이 현정권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북한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지배 엘리트 계층의 재생산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토플 증가<sup>17)</sup>, 새로운 계층 형성<sup>18)</sup>, 외국어 열풍<sup>19)</sup>)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도 위로부터의 정책 변화가 갑자기 바뀌기는 기대하기 힘들며 군수산업 위주의 점진적인 개혁에 안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관료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 내부의 헤게모니 장악에서 현재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군부 중심의 관료 집단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익복합군의 존재, 즉 무기체계의 근대화과 증강을 무한적으로 요구하는 군부, 무기생산에 종사하는

17) 2005.7.5 연합뉴스 ‘북한 국적 토플 응시자 큰 폭 증가’

18) 2008.6.18 데일리NK ‘北간부, 부수입 챙기려 공생 네트워크 구축’

19) 2006.8.1 조선신보 ‘평양대학생들 속에서 중국어 바람’

거대산업, 군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료구조, 무기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집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려고 군비 축소를 주장하는 민간 계열의 지배 엘리트들과 충돌을 빚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정책 기조인 ‘선군사상’ 이데올로기는 군부 밀착 관료구조의 파위를 강력히 지지하게 될 것이며 유럽에서 공부한 신세대 경제 일꾼들, 군부의 영향력에서 독립적 구조를 갖고 있는 통일전선부의 대남 실세들보다 내부 헤게모니 장악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으로 전환중인 사회주의권 나라들 중 북한과 가장 비슷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군부 중심의 북한관료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중국 군부는 1985년 개혁초기에 비해 30% 가까이 감축된 10.48%의 국방비를 지원받으면서 중앙에서의 독립을 강요받던 나머지 수많은 상행위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다. 중국 군부는 농업, 부업 생산, 군수공장의 민수전환, 새로운 대기업 창출, 외국 기업과의 합작사업, 무기 판매, 계약 서비스 등 폭 넓은 분야에 걸쳐 민수생산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군수산업을 유지하였다.<sup>20)</sup>

또한 현재 북한에 가장 필요한 외화 획득의 구조가 군부 관련 부서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 중국 최대의 ‘샤먼 밀수 스캔들’ 등 중국 군부 관료들의 변화 양태를 감안할 때 중국과 같은 군관료집단의 개혁 동조화 현상은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중국의 경험과 현재 북한 내부 구조의 실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을 움직이는 군부 중심의 관료집단은 만성적 물자 결핍과 장비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는 군수산업 개편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거대한 집단들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사회주의 경제의 현대화 추진(체제이행)에 긍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

20) Stacey Solomone, "The PLA's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Economy : Effects and Consequences", Issues & Studies, vol. 31, no3(March 1995), p.21

**셋째로 :** ‘고난의 행군’ 이후 군비 축소의 강한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정치·군사적 환경이 감지된다.

북한의 내부 구조를 경제난 이후 사회연결망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재 북한 지도부는 군비 축소에 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은 17세~30세의 청년들 중 80% 이상이 정규군 유지를 위한 인력 공급으로 군에 차출되어 있다.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급격한 출생률 저하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올해(2008년) 북한군 신규 영입 대상자는 1991년생으로 앞으로 북한은 3~5년 이후부터 물량 위주의 군사력의 한계로 하여 대폭적인 군비 축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 징후는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다.<sup>21)</sup>

과도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비 축소에 대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는바 지난 1954.6.15 제네바 정치회의에서 남일 외무상 제안, 1987.7.23 성명을 통해 10만명 감축을 일방 발표하고 단계적 병력감축과 주한미군철수 요구 등을 비롯하여 1980년대 말까지 한반도의 군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은 북한이다.<sup>22)</sup>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북한의 경제난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정치적 영향은 조금씩 쌓여 왔으며 정치적 불안으로 심각한 상황을 갑자기 초래할 수도 있는 터닝포인트에 이르기 전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군비축소를 통한 국민경제 안정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다음으로 체제이행 과정에서의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 국가 공식경제인 민간경제의 초기 정상화 자금 확보가 어렵다.

군수산업이 북한의 경제구조에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은 군사비와 외화 유동자금 등을 통하여 위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군수산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로 민간경제는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다.

다시 말하여 민간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초기 투자자금 확보는 필수 사항

21) 2008.5.27일자 NK데일리, ‘北, 신병모집 심각, 43kg 이하도 입대’

22) 김승열·신주백 외, 『분단의 두 얼굴』, (서울:역사비평사, 2005), 116쪽

인데 이러한 투자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북한이 유일하게 초기 투자 없이 실행 가능한 방법은 개혁개방에 의한 싼 가격의 토지 임대 및 저임금 인력 공급에 의한 자금 확보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격한 정치체제 변화 없이는 민간경제의 정상화에 필요한 대량의 초기 투자자금 유입으로 연결되어 민간 경제 투자의 선순환 과정을 이루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둘째로 :** 민간경제 재건에 대한 자금 유입의 어려움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군수산업 개편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경의선 복구’를 위해서는 선로 보수 등에 들어가야 할 비용은 교통연구원과 러시아측, 북한측의 추정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식화된 사실이다.

유일하게 북한의 수출 품목에서 일정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광물제품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들도 본격적인 생산 정상화 및 증대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초기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민간경제 부분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현 이명박 정부도 400억불의 외자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북한 지도부가 표출하는 정치체제 변화의 속도로 볼 때 이러한 자금이 마음놓고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마련되자면 지금부터 속력을 내도 십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인도적 지원 성격의 쌀 지원이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북한의 이러한 정치구조 때문이며 각종 개발 자금의 강압적 요구를 받아들일 정도로 북한이 변하자면 아직은 먼 후일의 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부득이하게 자체적인 잠재 역량의 활성화에 몰입할 것이며 이는 곧 군수산업이 그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내부적 사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 북한경제의 정상화 또는 생산력 증대를 위한 자원이 군 및 군수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의 기본 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노동력의 경우 대부분의 우수한 노동 자원이 군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노동력 가운데 연령 대비 가장 경쟁력 있는 20대 인력은 전 부 군에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고급기술 인력은 국방자원 분야에 우선 배치되어 있다.

최근 남한의 고급 인재들이 법대, 의대, 경영대쪽만 선호하고 이공계가 홀대를 받는 사회적 현상처럼 북한에서 고급 인재들은 현재 군부 및 군수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편향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국방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야당과 여론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의 개발 독재 정책 수행을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과 울산 조선소단지 등의 광활한 부지 정리에 군이 개입되어 한 몫을 담당한 것처럼 북한의 경제 개발에 있어서도 생산력 증대의 기본 요소들이 군과 군수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 3. 선차적 해결 과제로서 군수산업의 비중

현대 전쟁과 안보의 패러다임은 양적 대군주의에서 질적 정예주의로, 군사력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래의 영토 확보와 대량 살상 중심의 전쟁 수행에서 정보 마비·중심 타격을 추구하는 첨단 전력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군수산업도 예외가 아니며 군수산업의 효율적인 개편 및 민수 전환은 북한의 군비 축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은 재래식 공격무기와 방어 위주의 군사시설 유지 등 모든 군수 관련 비용들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데서 발생하는 안보 공황의 취약점을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또는 이미 개발한 핵무기의 보유)과 원거리 이동 타격 수단인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 산업에 집중할 것이다.

한반도의 지형은 요충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방어에 유리하고, 주력은 곡사포의 지원을 받는 보병으로, 재래식 무기와 특수부대 및 미사일과 같

은 원거리 타격 능력만 있으면 현대전에서 재래식 전력과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전쟁수행능력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 증대와 대공권 장악이 중요한 이슈이지만 북한이 보유한 항공기로는 적어도 한반도를 작전권으로 하는 협소한 공간에서 소련이나 미국과 같은 첨단 대공방어 체계가 없이도 전술적 군사행동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 또한 북한의 전국 요새화 전략은 미군의 수십 배 공군력 지원 급파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수십 년에 걸쳐 준비한 물리적 장비로서 2차 대전에 비해 몇 백 배로 강화된 현대전의 선제 공격에서도 생존율이 50% 이상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공식경제인 민간경제의 정상화를 위하여 비공식경제인 재래식 군수산업의 개편을 통한 현존 군사력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군비 축소 계획으로 ‘강성대국’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의 민간경제는 외부의 대규모적인 자금 투입이 없이는 회복 불가능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북한 내부적으로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자력갱생을 강조한 탓에 내부 예비가 고갈되었고 ‘천리마 운동’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정치적 유인을 통한 노동자들의 사기는 물질적 유인에 묻히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각종 캠페인성 노력 동원은 ‘열정의 장기화’가 가져오는 모순으로 하여 한계에 이르렀으며 민간경제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 동원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의 정치·사회구조적 시스템은 정부의 통제력이 그나마 살아있는 군수산업 부분밖에 선택의 길이 없을 것이다.

최근 군수산업 밀집 지역인 자강도 강계지구에서 나온 ‘강계혁명정신’과 북한의 재래식 무기 중 수십 발의 다연발 기능으로 무서운 집중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방사포의 최대 생산지인 ‘5.10일 탄광기계연합기업소’(함북·청진·라남구역)에서 시작되었다는 ‘라남의 봉화’ 정신은 그 변화의 시초를 말해주고 있다.

## IV. 북한의 체제생존과 군수산업의 변화가능성

### 1. 민수용 제품 개발을 통한 군수산업 변화

현재 북한의 군수산업은 기능 위주의 생산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으로 정교한 전자산업이 낙후되어 있고 설계·개발·생산능력 등 전반적인 수준이 낮으며 첨단무기 중심의 세계 무기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23)</sup>

하지만 북한에서의 민수 전환 또는 해외 수출을 위한 민수 전환의 품목은 첨단무기시장 중심의 수출 판로가 아닌 저급 기술의 제품으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모방제품이나 저가 제품들이며 향후 남포에 투자된 ‘평화자동차’ 공장과의 합작 등으로 저임금 노력이나 투자기업의 Tax 감면을 활용한 CKD 방식의 부품조립 산업이 될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주민 생활 밀착형 상품들이 대거 출현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인민경제 건설에 필요한 대형 트럭의 수요나 모든 것이 개인이 아닌 대기업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 국가 공식경제의 붕괴로 인한 국가사회공급망 부실로 농민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적인 운반 수단이 자전거에서 기업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서비차’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사회 변화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반발로 일본의 금융제재 조치를 받은 적 있는 북한 최대 외화벌이 기업인 조선부강회사는 민수용 오토바이를 만들었으나 저급한 품질 때문에 자국내에서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보호 및 군수산업의 내화자금 조달을 위해 북한당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sup>24)</sup>

23) 이상균, 위의책, 49쪽

24) 2007.11. 9일자 데일리NK “北 당국 ‘개인장사용 중국산 오토바이 막아라’”, 개인장사용 오토바이 수요가 늘면서 국산 제품에만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함.



작년(2007년)에는 북한 해군 무력 상륙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상함인 ‘공기방석정’<sup>25)</sup> 기술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새로운 기술로 위장되어 국제무대에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sup>26)</sup>

前 중국주재 북한대사 전명수의 아들인 전승훈이 운영하는 ‘부강회사’는 연평균 거래액이 1억 5천 달러가 넘는 북한에서 가장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sup>27)</sup> 앞의 [표 4]에서 보듯이 북한 외화 유통량의 대부분이 군수 산업임을 감안할 때 북한 내부에서 주민생활 밀착형 제품 출현이 군수 관련 산업에서 먼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북한의 변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제난으로 더욱 심각해진 식량문제 또한 엄청난 양의 비축용 방사포탄과 같은 화약 생산에 들어가는 질산암모늄(요소비료)의 소비를 줄여 협동농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미사일 탄도 계산기술자들과 대대적 해커들을 양산하던 미림군사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의 컴퓨터 엔지니어들도 읍지에서 양지로 나와 남한과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등 군수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과 제품들의 점차적인 변화는 북한의 최대 고민인 외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 2. 국제관계 개선을 통한 세계방산시장 진출

세계방산시장 진출은 군사동맹이라는 강제적 테두리 안에서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대한 기술독점 및 표준화를 통한 다국적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선진국 무기 수출의 주요 수요 단위인 중소국들의 고민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자국내 미래 안보를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가이다.

최근 동남아 나라들을 비롯한 개발도상 나라들은 무기체계에 대한 종속

25) 공기방석정 : 소형 상륙정으로 배가 달릴 때 앞부분을 공기의 힘으로 띄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줄임으로써 수중에서의 에너지 효율과 배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배이다.

26) 2007.9.3일자 NK조선, “‘경비정 제작기술도 팝니다’ … 北 마케팅 눈길”

27) 2006.2.26일자 NK조선, ‘북한에도 재벌이 생겨나고 있다’

적인 관계의 탈피를 위한 안보적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 주도 무기시장과 함께 러시아 또는 중국식 무기 체계를 병행하고 있는 추세이다.<sup>28)</sup>

중소국들의 이러한 요구를 제일 먼저 파악한 중국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무기 수출에 나섰으며 미국의 거센 압력에도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의 여론으로 소총과 탄약을 싣고 짐바브웨로 향하던 배를 돌려 세워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sup>29)</sup>

발전된 운송장비와 과학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군사 무역량을 살펴볼 때 군수산업의 추세는 기술적 잉여 이윤에 바탕을 둔 특화된 생산물의 국제적 노동분업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군수산업의 모든 분야를 국산화하기 힘든 개발도상국의 경우 군사동맹체제 안에서 또는 개별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특수관계 형성을 통하여 군수산업의 분업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전투화 수출<sup>30)</sup>을 비롯하여 비교우위의 경쟁력 개발제품을 통한 세계 방산시장의 틈새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그리스 등에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는 등 첨단 제품의 틈새시장 진출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때 10억불 이상의 매출을 올렸던 북한군수산업의 세계방산시장 진출은 현재로서 남한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북한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외화 해결과 올해에야 10억불을 달성한 우리의 방산수출시장<sup>31)</sup> 확대는 남북이 윈윈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군사교류 분야이다. 남북한 국방장관이 만나서 민감한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세계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

28) 2005.8.29일 미 의회조사국(CRS)발표 ‘대개발도상국 재래식 무기 수출 현황(1997~2004)에서 러시아의 지난 4년간 아시아 시장 점유율은 48%로 미국의 21%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29) 2008.4.25일 조선일보, ‘소총, 탄약 실은 짐바브웨행 중(中)화물선 회항’

30) 2008.5.6일 문화일보, ‘군산 전투화 올 해외시장 뚫나’에서 방위산업청의 보고에 의하면 중동·중앙아시아에 사막화, 정글화 등의 개발로 본격적인 수출 활로 전망

31) 2008.7.30일 한국경제, ‘터키에 4억 달러 전자기술 수출’

이기도 하다.

군수산업의 세계적인 분업화 추세에 재빨리 적응하여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우리의 전자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잘 조합한다면 향후 세계 무기수출시장에서 경제규모와 국력에 비례하는 군사대국의 기반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군복 전문 생산기지인 강계편직물공장에 우리의 기술과 원자재를 주어 전투화나 군복, 방독면과 같은 개인 병력 필수장비에 대한 임가공을 하거나, 우리의 기술과 가공력을 첨가한 러시아 표준형 무기시장의 부품 조달과 같은 틈새시장도 있을 것이다.

북한과 공동으로 러시아 및 중국 영향하에 있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대표적 예를 든다면 최근에 세계 무선통신 표준으로 채택되어 미국 동북부에 깔고 있는 국산 기술인 와이맥스(Wibro의 해외 버전)를 활용한<sup>32)</sup> 군사용 개인 휴대장비들을 미군뿐만이 아닌 전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제품을 팔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인 규모로 인하여 전통적인 중립국을 표방했던 스위스와 비슷한 처지의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잘 조화된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계방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남북경제공동체와 북한 군수산업의 연계 가능성

남북경협은 북한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을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모델이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다.

한국 최초 우주사업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총 비용은 310억원<sup>33)</sup>, 비공식적으로는 러시아와 2006년에 2,100억 짜리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훈련도중 이소연 씨로 갑자기 교체된 사건과 착륙도중의 아찔했던 사고에

32) 2007.10.19일자 매일경제, ‘한국 와이브로기술 세계표준 채택 의미’, 현재 미군에서 차세대 통신장비 기수로 가능한지 검토중임.

33) 2008.4.8일자 동아일보, ‘이소연, 우주선 탑승료·훈련비만 200억’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사정이면 러시아 발사대에 엄청난 비용을 주고 쏘아 올리는 다목적 인공위성을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협력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화자동차 같은 공장의 부품 현지화에 북한의 군수산업의 잠재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현재 가장 현실성 높은 방안이다. 북한은 자기들의 자동차 산업이 남한보다 뒤떨어진 사실 자체가 북한주민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개방의 일선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남한의 일반 가정들에 보편화된 자가용 승용차나 고급 전자제품의 범람 등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물질사회 기반의 측면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평화자동차 공장에서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Made in D.P.R.K가 찍힌 자동차가 생산되도록 그들이 숨겨놓은 군수산업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 또 우리의 기술과 자재가 들어간 일반 가전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던 독로강전기공장 등의 군수산업들이 참여한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우리의 목적과 북한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방향의 남북경협은 현재의 개성공단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 동독이 Made in Germany로 자기들 상표를 찍어서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시장을 교란할 정도의 사안이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며 오히려 동독이 그렇게라도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저렴한 인건비만 바라보는 제조업도 좋지만 Made in D.P.R.K의 북한제품을 우리제품으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무역업체들이나 관련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중국 개혁개방의 최전선인 홍콩과 그 맞은 편 광둥성 선전지구는 제조업체보다 본토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을 위한 중계 기지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와 제조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국제적 해운 네트워크에 북한을 소개하고 북한의 잠수함<sup>34)</sup> 판로를 열어주는 등 남북한 모든

분야의 공동 협력에 있어서 북한의 군수산업과 우리정부가 할 일은 너무 많을 것이라고 본다.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초기 단계인 개성공단의 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자력으로 3,000달러를 이룩하는데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군수산업의 개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는데 서로 어떻게 협력을 하여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V. 결 론 :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정책적 함의

북한은 군수산업에 필요한 외화 획득과 지금 현재의 군수산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국가공식경제인 민간경제보다 그나마 가동률이 20 ~ 30%는 유지되고 있는 군수산업의 개편에 가장 선차적인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모든 자원배분과 정치적 선택의 우선권을 갖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군수산업의 개편 없이는 민간경제에서 1인당 GDP 3,000\$를 이룩하기 어려우며 자체로 달성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비핵·개방·3000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로 가자면 북한이 3,000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러자면 핵무기 철폐와 개혁개방이 선행된다면 북한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3,000달러 이후에는 외부 원조 자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군부 중심체제의 관성적 요인으로 하여 김정일이 죽더라도 결코 남한이 바라는 대로 비핵·개방을 속전속결로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우리는 북한의 비핵개방 이전에 경제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는

---

34) 2008.1.18일자 NK뉴스, '북한, 이란과 잠수함으로 외채 상환 협의'

북한의 1인당 GDP 3,000\$ 달성을 도와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남북경협 시스템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국은 북한이 3,000달러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군수산업의 개편이 중요함을 인지하여야 하며 북한 내부적인 변화 시점을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항상 주시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별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북한의 군수산업 개편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비핵·개방·3000의 실천을 위하여 우리정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첫째로, 북한의 국가공식경제인 민간경제의 자생력에 활력을 줄 수 있고, 또 전작권의 환수로 인한 우리 내부의 사정도 고려한 남북한 동시적인, 획기적인 군비 축소를 북한에 먼저 제의하여 대북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남북경협 추진에 있어서 개성공단과 활용도를 북한의 낮은 인건비나 국내 사양산업의 퇴출로 활용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조악한 상품으로 수출 활로를 개척하여 양지로 나오려는 북한군부의 위장기업들을 지원하고 끌어내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비슷한 기능의 종합적인 수출입촉진 시스템을 갖춘 종합상사 진출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셋째로, 지금 현재 북한 진출을 관망하기만 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과 북한의 군수관련 대기업의 연결을 주선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법적, 투자 지원 계획을 세워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 국내기업들의 북한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넷째로, 국제적 컨소시엄을 비롯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동시에 개성공단이나 나진·선봉 등에 민간인 소규모의 대부업 진출을 적극 장려·지원하여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북한에 충분한 외화조달의 창구를 만들면 군부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북한 외화 조달 시장의 컨트롤과 체제 전환의 과도기에 있는 북한의 하부경제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

다섯째로, 대규모적인 남북경협에 있어서 경공업 원자재 지원, 또는 20~30년 이후 사양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의 지원을 통한 생산

정상화보다 종합적 IT로 가고 있는 남한의 경제구조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만한 분야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며 지상 최대의 국가적 과제이다.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탓할 사람은 없겠지만 먼 훗날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물려받아야 할 후세들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하는 이유는 뭐든지, 언제든지,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글로벌화된 문명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선조들의 넋이 깃든 이 땅과 수천 년을 내려온 이 민족은 결코 수입할 수 없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고귀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통일의 새벽을 고달프게 기다리게 하는 성경속의 한 구절이 가슴에 사무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 [참고문헌]

### [단행본]

- 함택영 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한울, 2006)  
이은국, 『남북한 군비경쟁 행태분석론』(대영문화사, 2007),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 공장』(두술, 2002)  
성채기 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한국국방연구원, 2003) 참조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1999) 참조  
김형균, 『군수산업의 사회학』(세종출판사, 1997)  
강동일(역), 『초국적기업과 군국주의』(서울 : 새길, 1988)  
최봉대 · 구갑우, 『북한 도시정치와 발전과 체제 변화』(서울 : 북한대학원대학교, 2003)  
김승열 · 신주백 외, 『분단의 두 얼굴』, (서울 : 역사비평사, 2005)

### [학위 및 등재지 발표 논문]

- 유길재, “조선인민군의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연구”, 『안보학술논집』(국방대학교, 2000)  
최수영,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회의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06』(통일연구원, 2008)  
이상균, 『북한 군수산업의 경제성 진단 및 남북통합시 활용방안』(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김광진, 『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논문

### [해외저널]

- Stacey Solomone, "The PLA's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Economy : Effects and Consequences", Issues & Studies, vol. 31, no3(March 1995), p.21  
2005. 8. 29일 미 의회조사국(CRS)발표 ‘대개발도상국 재래식 무기수출현황(1997~2004)

### [북한원전]

- 북한 계간지 『경제연구』, 2006년 봄호에서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발전 강조’



[잡지 및 신문기사]

- 2008. 4월호 「월간조선」
- 2005. 7. 5일 연합뉴스 ‘북한 국적 토폴 응시자 큰 폭 증가’
- 2006. 2.26일 NK조선, ‘북한에도 재벌이 생겨나고 있다’
- 2006. 8. 1일 조선신보 ‘평양대학생들 속에서 중국어 바람’
- 2007. 9. 3일 NK조선, “‘경비정 제작기술도 팝니다’ ... 北 마케팅 눈길”
- 2007.10.19일 매일경제, ‘한국 와이브로 기술 세계표준 채택 의미’
- 2007.11. 9일 데일리NK ‘北 당국 개인장사용 중국산 오토바이 막아라’
- 2008. 1.18일 NK뉴스, ‘북한, 이란과 잠수함으로 외채 상환 협의’
- 2008. 4. 8일 동아일보, ‘이소연, 우주선 탑승료·훈련비만 200억’
- 2008. 4.25일 조선일보, ‘소총, 탄약 실은 짐바브웨행 중(中)화물선 회항’
- 2008. 5. 6일 문화일보, ‘군산 전투화 올 해외시장 뚫나’
- 2008. 5.27일 NK데일리, ‘北, 신병모집 심각, 43kg 이하도 입대’
- 2008. 6.18일 데일리NK ‘北간부, 부수입 챙기려 공생 네트워크 구축’
- 2008. 7.30일 한국경제, ‘터키에 4억 달러 전차기술 수출’

〈 우수 〉

# 김정일 통치시기의 북한 군부 엘리트 집단 구성 변화 및 성향 분석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시기를 중심으로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4학기 최형민

## 《 목 차 》

【요약문】

【본 문】

I. 서 론

II. 본 론

III.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 김정일 통치시기의 북한 군부 엘리트 집단 구성 변화 및 성향 분석

###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시기를 중심으로 -

오늘의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일인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정책과 국가 운영은 최고지도자 일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북한에 대한 연구가 일인 지배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의 총격 사건 등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관계에서 문제에 봉착시 북한 군부가 자주 거론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김정일 일인체제의 지금의 북한에서 군부라는 권력 집단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그들은 과연 누구이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정책들을 실행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군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권력 엘리트그룹 중 군 엘리트 집단을 연구하였다.

연구 시기는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는 1994년 직전의 1990년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시기부터 현재의 11기까지 세 시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 통일부·국정원·각종 언론사 및 북한의 공개자료인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을 참고하여 북한 군부에서 군사 정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급인 중장급 이상의 군 인물들 409명을 자료화하였다.

북한 군부의 권력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을 공식과 비공식적인 요소로 구분하였다. 공식적인 요소는 당·정·군에서의 주요 직위를 살펴 보았는데, 당·정에서 군사정책 최고 결정기관들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살펴보고, 군에서는 군 업무 특성을 기준으로 각 인물들을 총참모부·총정치국·보위사령부·호위사령부 계열로 각각 구분하였다. 비공식 요소는 혁명세대와 김정일의 측근 세력 및 김정일 친인척, 그리고 김정일의 대외 활동시 수행하는 인물들과 학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장급 이상의 장령 중 당·정에 진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들을 분석한 결과 김일성 시기로 분류되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때는 당·정·군의 주요 공식적 지위에서 혁명 1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혁명 2세대들이 김정일의 측근 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10기 때는 혁명 1세대들의 퇴진과 더불어 혁명 2세대들을 중심으로 권력 구도가 형성되며, 혁명 3세대들도 정치권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시기를 중심으로 북한 군부의 권력 엘리트들의 특징들을 도출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나타난 북한군의 주요 군사 정책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성향을 분석했다. 성향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의 보수파와 진보파로, 정책의 집행 성격을 가지고 온건파와 강경파로 각각 나누었다. 군사정책의 기조는 김일성 시기와 크게 변함없이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3대혁명역량(북한 자체혁명역량 구축, 남한내 동조혁명역량 부식(扶植), 국제사회에서의 지원혁명역량 강화)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중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에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분야가 나타나 두 정권 시기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분석 결과 김일성 시기는 혁명 1세대가 주축이 된 시기로 북한 자체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4대군사노선(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을 가지고 무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였고, 간첩남파 및 대남침투 등을 통해 남한내 동조혁명 역량을 키워나갔다. 따라서 이들의 성향은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속성에서 보수적이면서, 혁명역량을 단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온건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혁명 2세대가 주축이 된 김정일 정권 시기에는 김일성 시기에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남북한내 혁명역량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원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 초기 체제 안정화를 위해 대외의 적을 부각시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김정일 정권의 입지를 높임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 시기의 혁명 2세대들의 성향은 체제유지 차원에서는 1세대들과 동일하게 보수적이지만, 정책 집행 방법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혁명 3세대의 경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결정적인 핵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성향파악은 비공식적 요소들을 고려시 북한내에서 육성된 집단이기에 김정일 체제를 수호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으로 김정일 정권 시기의 북한 군부 엘리트 구성원들을 분석해본 결과 혁명 2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노·장·청 배합의 일환으로 혁명 1세대는 상징적 의미의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혁명 3세대는 김정일 측근에서 서서히 부각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군사정책과 그들의 공식적·비공식적(사회적) 요소를 고려시 혁명 1세대들은 보수적이면서 온건적 성향이었고, 혁명 2세대들은 보수적이나 강경한 성향으로 나타났다. 혁명 3세대의 구체적인 성향 파악은 구체적 자료들의 불충분으로 파악하기가 제한적이거나, 체제 옹호 차원에서 보수적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성향 파악 연구는 향후 대북 문제 봉착시 북한 군부의 영향력 정도와 그들의 성향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재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I. 서론

### 1. 문제 제기

2008년 7월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가버린 총성이 금강산에서 울렸다.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초병에 의해 피살된 것이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북한 군당국은 최전방 지역에서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이는 우리측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긴장국면으로까지 치닫게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군부 강경파가 자기들만의 불만을 김정일에게 전달하기 위해 과격한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분석<sup>1)</sup> 등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00년 8월 20일 김용순 대남 담당비서가 제2차 장관급 회담시 “군사직통전화 문제는 판문점에 미군과의 전화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군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고, 2008년 6월 북한이 남측의 ‘3通 불이행’론을 거론하면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위기론을 들고 나온 배경에 북한 군부가 남측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자재, 장비를 받지 못하자 이들 사업을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sup>2)</sup> 등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제에 봉착시 북한은 군부의 태도를 빌려 협상을 조절하는 행태들을 여러 차례 보여 왔다. 이는 북한이 국가간 협상 전략시 투레벨 게임(two-level game)의 수단으로 국내적 차원의 레벨인 북한 군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과연 ‘김정일 일인체제의 북한에서 군부라는 권력 집단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그들은 과연 누구이고, 어떠한 성향을

1)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 군부 일각이 이번 사건을 유도하고 상황을 만들었으며 왜곡된 보고를 상부에 올렸을 것이다. 북측 구역을 침범해도 구금하면 됐을 일인데 작정하고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군부 강경파가 자기들의 불만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즉 강경파가 6자회담 진전, 냉각탑 파괴에 이어 핵무기 제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박씨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8년 7월 13일자)

2) 《중앙일보》 2006년 9월 24일자; 2006년 10월 18일자; 2008년 6월 22일자 참조

가지고 정책들을 실행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생긴다. 북한에도 엘리트<sup>3)</sup>라는 계층이 존재하고 그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종파주의를 배격하는 북한에서 일종의 권력 그룹 또는 파벌인 권력 엘리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막스 베버는 다수의 인간이 모여 협동 행위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계층제 현상이 발생하며, 이 계층제에 의하여 합리적인 지배관계가 발생하면 그것이 국가행정조직이든 사기업조직이든 어떠한 관료제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비록 김정일 일인지배체제라고는 하지만,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권력엘리트 집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북한의 권력 엘리트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중에서 특히 군부 엘리트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북한 군부 엘리트인가?’를 규명하고, ‘그들의 어떠한 성향으로 인해 어떠한 군사 정책이 나왔는가?’를 연구하였다. 기존 북한의 군사정책과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개인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들 개인이 군사정책의 사소한 분야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최고결권권자가 커다란 방향을 설정하면 정책입안자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올리고 이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보고 체계를 북한에서는 ‘제의서’를 통한 보고 체계라고 한다.<sup>4)</sup> 이 과정에서 정책입안자들의 구체적인 정책 속에 그들의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의 성향은 주로 사회·정치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 요소로 성향을 파악해 보았다.

3) 밀스는 엘리트란 ‘한 사회의 중요한 지배적 제도 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점유하여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C.W.밀스 저, 진덕규 역, 『파워 엘리트』, 한길사, 1979, p.6)

4) 북한에서 김정일한테의 보고 체계와 방법은 기본적으로 4개의 통로로 되어 있다. 첫째, 정규 보고로 “제의서”를 통한 보고, 둘째, 비정규 보고로 ‘모사전송(팩스)’을 통해 보고된다. 셋째, 대긴급으로 제기되며, 처리해야 할 문제들은 각 책임자가 김정일에게 전화로 직접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김정일의 비밀 술 파티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안찬일 외, 『10년 후의 북한』, 인간사랑, 2006년, pp.263-264)

## 2. 기존 연구 검토

우선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김진무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다.<sup>5)</sup> 첫 번째, 북한에서 중요한 정책이 과연 집단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가? 라는 질문에 북한의 정책 결정의 제도적 구조와 현실 정치과정의 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협의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의 당·정·군 내부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어 상반되는 정책으로 대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군부는 김정일에 충성하는 개개인으로서 종적관계만을 가지고 있으며, 군을 대표하여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시 군부의 영향력은 일차적으로 실무급에서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군부 인물들이 김정일과 개인적인 관계에 의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은 최측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측근정치를 선호한다는 것을 볼 때 김정일의 최측근 세력들에 군출신이 다수 포함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김정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측근 인물 개개인의 의견 차원으로 보아야지 군부의 집합적 의견을 김정일에게 제의 또는 조언한다는 것은 앞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영택·김구섭·백승주·김재홍도 북한 군부의 의사결정체제 연구<sup>6)</sup>에서 북핵문제나 남북회담시 내세워지는 북한 군부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실무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북한의 지휘체계상 군부의 독자적 행동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부 반대’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모든 군사문제는 대남 전략, 군사전략 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김정일의 최종 결심

5) 김진무,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고찰’, 『북한 2006년 7월호』, 2006년, 통권 제415호

6) 박영택·김구섭·백승주·김재홍, 『북한 군부의 의사결정체제 연구』, KIDA, 2007년, pp.75



에 의해 결정, 하달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엄연히 북한 헌법 및 당규약에서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관련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황장엽은 “주요 군사정책 결정의 경우 당 중앙위 조직부내에 군사담당 부서가 있고 여기에서 군대내의 당 생활과 주요 정책에 관여하고 있고, 역시 군사정책 전반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국방위원회는 총참모부를 통해 군사정책을 집행하고 있다”<sup>7)</sup>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김정일의 측근에 다수 군부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는 바, 군부가 집단을 형성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더 실린다. 특히 북한은 인민무력부 예하의 통합군체제로 각 군 주요 지휘관들의 상호 의사 교환은 필수적 요소이고, 각종 군사 전략·전술 개발 및 군사 정책 수립을 위해서 최소한의 회의체 성격의 기구 운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전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첫 번째로 밝히고자 한 것은 김정일 정권 시기의 군부 엘리트층 누가 구성하고 있는가이다. 기본적으로 당·정·군에서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군부 엘리트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군부 엘리트에 대한 또 다른 결정 요인으로 김정일이 측근정치를 선호하여 공식적 절차 이외에 김정일과의 별도의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정책 조언을 받아 이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현성일은 ‘측근정치란 권력자가 공식적 통치 기구나 정책결정 기구보다 비공식적 측근집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치’<sup>8)</sup>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김정일의 비공식 연회이다. 최주환에 의하면 1990년대 김정일 정권 초기에 매주 금, 토, 일요일이면 비밀파티를 열고 여기에 당·군·정의 자기의 최측근 인물들을 초청하여 술놀이, 사냥, 사격 경기 등을 조직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sup>9)</sup>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북한의 군부 엘리트 집단을 규명해 보았다.

7) 북한연구소, 『북한 2005년 12월호』, 2005, 북한연구소, p.47

8)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선인, 2007, p.220

9) 최주환, 『북한 체제에서의 당·군 관계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pp.88-90

다음은 앞에서 규명한 군부 엘리트 집단의 성향에 관한 연구이다. 사실 성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단정짓기가 매우 어려운 까닭에 기존 연구에서도 북한 군부에 대한 성향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대북 외교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현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북한이 폐쇄된 사회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미숙은 북한 군부 엘리트의 성향을 혁명세대로 구분하고, 이들을 학력 및 형성 배경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혁명 1세대는 빨치산세대로 북한체제 옹호에 대한 사상 무장이 철저하고, 혁명 2세대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양성된 혁명유자녀들로 현대적인 공산주의 군사전략과 전술교리에 밝다고 하였다. 혁명 1·2세대는 김정일 정권의 핵심 옹호 및 유지세력들로 고도의 동질감과 운명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북한내에서 양성된 토착 군인인 혁명 3세대의 경우 다수가 김정일 친위세력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1·2세대들에 비해 김정일과의 관계망이 약해 만약 권력 집단으로 부상시 체제 유지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망하였다.<sup>10)</sup> 본 연구에서도 각 개인의 성향을 도출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고, 실제로 정책 결정과정에서 개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낼 수가 없어 이미숙과 같이 혁명세대라는 집단 중심으로 성향을 파악하였다.

### 3. 연구 방법

먼저 북한 군부 엘리트를 규명하기 위해서 통일부의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2007)’과 ‘북한의 주요 인물(2007)’ 중심으로 NK조선, 중앙일보의 북한 인물 자료, 북한의 공개자료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을 가지고 북한 군부에서 군사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급인 중장급 이상의 장령들 409명을 선별, 이를 자료화하였다. 대장급 이상의

10) 이미숙, 「군부엘리트의 성향을 통해 본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군사 제50호(2003.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pp.115-117

고위 장령들은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만 상장 이하의 계급에서는 정보가 극히 빈약하여 분석의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최대한 이들의 기본적인 계급, 연령, 출신지역, 주요경력 및 활동 등 기존에 축적된 자료들과 북한 언론매체 등에서 나타나는 공식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종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김정일 시기의 북한 군부 엘리트들을 살펴보되 김일성 시기와 비교를 위해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와 김정일 시기의 제10·11기를 분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시기를 분석 기준점으로 잡은 이유는 1980년 이후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1992년 신설되어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군사지도기관’과 더불어 ‘전반적 국방관리기관’<sup>11)</sup>이 된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내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 군부 엘리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공식적 요소와 비공식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식적 요소는 당·정·군에서의 주요 직위로, 당(黨)에서는 군사 정책 최고결정기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정(政)에서는 국방위원회와 군에서는 군 업무와 보고 계통 특성을 기준으로 각 인물들을 총참모부·총정치국·보위사령부·호위사령부 계열로 각각 구분하였다. 비공식 요소는 혁명세대와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는 김정일의 측근 세력 및 김정일 친인척 중 군부 인물, 그리고 김정일의 대외 활동시 수행하는 인물들과 학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규명된 북한 군부 엘리트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주요 군사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성향은 현 체제 유지를 중심으로 보수파와 진보파로, 정책의 집행 성격을 중심으로 온건파와 강경파로 각각 나누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북한 군부 엘리트 집단을 찾아내고, 이들의 배경 요소와 당시 북한의 주요 군사 정책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성향까지 도출해냈다.

11) 헌법 제6장 제2절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1998년 9월 개정)

## Ⅱ. 본 론

### 1. 시기별 북한 군부 엘리트 집단 구성 변화 분석

누구를 북한 군부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측근정치를 하고 있는 김정일의 통치방식에서 실질적인 권력 엘리트 집단을 밝혀낸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김정일 정권의 성향을 파악하고 정권 유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므로 우선 이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 가. 공식적 요소

먼저 공식적 요소로 당·정·군의 핵심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이 북한 군부 인물들이므로, 이들의 당·정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군에서는 이들의 직책과 경력을 중심으로 4가지 계열로 분류하였다.

북한에서 당은 모든 권력의 중심이다. 노동당 규약에는 북한의 군은 당의 군대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정책 수행방법에 대한 토의·결정과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sup>12)</sup>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의 최고결정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최소한 상징적으로나마 중요한 직책이다. 하지만, 지난 1980년 이후 당대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중앙군사위원회 또한 회의시기, 의제, 회의형태 등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나, 지속적으로 위원들을 교체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상설기관보다는 회의체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1]에서는 1980년 이후의 중앙군사위원회 명단을 최고인민회의의 시기에 맞춰서 정리해 보았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구성된 1980년 이후 위원들의 보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공통 직위로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당군사부장, 호

12) 조선노동당규약(1980.1013 제6차 당대회 개정) 제3장 제27조

위사령관, 평양방어사령관, 사회안전부장이 있다. 둘째, 김일성 시기에는 당 간부보다는 인민무력부장에서부터 군단장까지 주요 군 지휘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김정일 정권 이후에는 당민방위부장, 조직지도부장, 교통위원장 등 당 간부들의 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이들 위원이 보직에 의한 선발이 아닌 인물에 의한 선발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백학림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는 총참모부 부부장의 직책으로 있었으나 중반 이후 사회안전부장으로 있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 총참모부 부부장의 직위자는 군사위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

[표 2-1] 중앙군사위원회 변동현황

시 기	위원장	위 원	변경인원	주요추가보직
1980	김일성	김정일, 김강환, 김일철, 김철만, 백학림, 오극렬, 오룡방, 오백룡, 오진우, 이두익, 이봉원, 이을설, 전문섭, 조명록, 주도일, 최상욱, 최현, 태병렬	-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당군사부장, 평양방어사령관, 포병사령관, 해·공군사령관, 부총참모장, 기타(7)
1993	김일성	김정일, 김두남, 김익현, 김일철, 백학림, 오룡방, 오진우, 이두익, 이봉원, 이을설, 이하일, 조명록, 주도일, 최광, 최상욱	제외 : 김강환, 김철만, 오극렬, 오백룡, 전문섭, 태병렬, 최 현 추가 : 김두남, 김익현, 이하일, 최 광	당민방위부장, 호위사령관, 사회안전부장, 총정치국 부총국장,
2002	김정일	김두남, 김명국, 김영춘, 김익현, 김일철, 박기서, 백학림, 이용철, 이을설, 이하일, 조명록	제외 : 오룡방, 오진우, 이두익, 이봉원, 주도일, 최 광, 최상욱 추가 : 김영춘, 박기서, 이용철, 김광진	조직지도부장, 교통위원장
2007	김정일	김두남, 김명국, 김영춘, 김익현, 김일철, 박기서, 이용철, 이을설, 이하일, 조명록	제외 : 백학림	총참모부 작전국장

\* 출처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93-2002)』 ; 통일부,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7』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pp.236-237 종합

김명국의 경우도 1995~1996년간에는 총참모부 작전국장으로 있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 기계화군단장으로 있었으나, 2007년 현재 다시 작전국장으로 보직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 위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도 김정일 측근정치의 공식적인 한 표징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상 100조와 102조에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정일은 1992년 헌법에 의해 신설된 국방위원회<sup>13)</sup>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군사지도기관’과 더불어 ‘전반적 국방관리기관’<sup>14)</sup>을 명시함으로써 명실공히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10기 위원들은 위원장 김정일을 제외한 9명 중 군부 인물은 7명이었다. 그중 혁명 1세대가 3명, 2세대가 4명이었다. 제10기 대의원은 김일성 사망후 3년간의 유훈통치기간을 마치고 공식적인 김정일 정권이 시작되는 시기로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큰 시기였다.

[표 2-2] 국방위원회 명단(최고인민회의 제10기 이후)

시 기	위원장	위 원	변경인원
최고인민회의 제10기(1998년)	김정일	제1부위원장 : 조명록 부위원장 : 김일철, 이용무 위원 : 김영춘,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총10명)	
최고인민회의 제11기(2003년)	김정일	제1부위원장 : 조명록 부위원장 : 이용무 위원 :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최용수, 백세봉(총8명)	제외 :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김철만 추가 : 최용수, 백세봉

\* 출처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93-2002)』; 통일부,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7』

13) 기존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로, 당시 주석이 겸임하였기에 권력구조상 특별한 의미는 없었음.(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당·국가 기구·군대』, 한울아카데미, 2007, p.372, 박영자, ‘북한의 중앙국가기관 : 체제와 운영’)

14) 헌법 제6장 제2절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1998년 9월 개정)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과 체제 안정성을 얻기 위해 혁명 1세대를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의 실질적 활동 세력인 혁명 2세대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군 내의 주요 보직을 중심으로 군부 엘리트들의 계열을 분류해 보았다. 군대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전투전력은 총참모부이다. 작전부, 정찰부 등 군사행정 관련 부서들을 비롯 주로 야전 지휘관들로서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세력이다. 총참모부는 인민무력부뿐만 아니라 북한군 전체 무력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핵심 최고 참모부로서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기능과 역할도 수행한다.<sup>15)</sup> [표 2-3]에서처럼 총참모부 계열이 총정치국·보위사령부·호위사령부 계열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의 파악된 인원의 61%를 차지하였다. 이는 북한이 지상군 중심의 117만 대 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야전지휘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인물로는 혁명 1세대에서는 차수 최광, 김익현 등이고, 혁명 2세대에서는 차수 김영춘, 김일철 등, 혁명 3세대에서는 차수 전재선, 대장 김명국 등이다.

다음으로 정치지도 조직인 총정치국이다. 총정치국은 당의 지도를 받아 군인들을 사상적으로 지도·통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군사 작전, 군사 행정, 군사 기술, 간부 임명, 인사 이동 등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군대 집단 자체를 통치하고 있다.<sup>16)</sup> 총참모부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1세대에서는 차수 오진우가 있고, 2세대에서는 차수 조명록, 대장 김기선, 현철해, 박재경 등이 있으며, 3세대에서는 대장 김정각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보위사령부이다. 사회안전부와 더불어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위한 전형적인 감시 및 통제기구이다. 이들은 군대 안의 반당·반혁명·반국가 분자들을 색출 및 감시하고,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방첩 임무를

15)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새 인식 북한의 군사』, 경인문화사, 2006, pp.149-150, 정영태,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

16) 남만권 편, 『북한 군사체제 평가와 전망』, KIDA, pp.245-246

수행하며, 호위사령부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여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시 경호 임무를 담당한다. 전반적으로 인원은 호위사령부와 유사하나, 혁명 1·2세대 보다 3세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혁명 1세대에서는 대장 태병렬, 2세대는 현재 국방위원회 위원인 상장 최용수, 3세대는 대장 원응희 등이 있다.

마지막은 호위사령부이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회담 직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영접 장소도 두 차례나 변경되었고, 시찰 일정도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에 대해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 최정현은 “변덕 일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 문제”를 언급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호위는 호위총국에서 총괄하는데, 이들은 최상의 대우를 받으며 김정일의 근접 경호를 담당한다고 하였다.”<sup>17)</sup> 호위사령부는 김정일 신변안전을 책임지는 곳으로 김일성이 ‘반당종파분자’들의 도전을 받고 그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면서 경호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 1960년대 후반에 만든 부대이다. 현재 김정일의 신변과 건강을 책임지는 호위사령부의 사령관과 부사령관 2명 등 수뇌부 3명은 이른바 ‘호위사업 3인방’으로 통하며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이들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18)</sup> 대표적 인물로 1세대의 원수 이을설, 차수 주도일 등이고, 2세대는 차수 장성우, 대장 오룡방 등이 있다. 이들은 보위사령부 계열과 달리 혁명 1·2세대로만 나타났는데, 이는 김정일 호위 업무의 중요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최측근 세력들로만 구성하는 것 같다.

[표 2-3] 혁명세대별 군 계열 분류

(단위:명)

구 분	1세대	2세대	3세대	계
총참모부 계열	11	24	28	63
총정치국 계열	3	15	5	23
보위사령부 계열	1	1	4	6
호위사령부 계열	6	5	—	11

\* 자료 : 화한 상장급 이상 409명 중 보직 경력이 확인된 103명만을 가지고 분류하였다.

17) 조선일보 2007.10.4일자 기사

18) NK조선 『시사백과』, (검색일 : 2008.08.10일)



## 나. 사회적 요소

북한의 권력 엘리트 중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김정일의 친인척 및 그의 대표적인 측근들이다. 현재 김정일의 직계·방계 친인척들의 정·관계 진출현황은 다음의 [표 2-4]와 같다.

특징은 첫째, 전체 42명의 가족 중 군부 인물이 6명(14%)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로 양형섭, 김용순, 김경희, 장성택 등 친인척 대부분은 당이나 정(政)쪽에 진출해 있다. 둘째, 남자 형제의 직접적인 군부 진출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생존하고 있으면서 군부 실세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차수 이용무, 장성택의 형 민방위부장 차수 장성우, 평양방어사령관 차수 박기서, 이들 모두는 이모, 고모의 자식 등 여자 형제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는 남자 형제들의 경우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서의 직접적인 권력 개입 등으로 김정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이를 견제하되 군부에도 자신의 혈족들을 뒀으로써 권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다음은 김정일의 측근 세력들을 살펴보았다. 보통 북한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체제를 이끌어가는 권력 엘리트 집단을 김정일의 측근 세력들이라 할 수 있는데, 달리 표현하면 통상 김정일의 술 파티에 동참하는 인물들을 일컫는다. 통상 이 비밀파티에는 김정일로부터 인정받은 실제 15~2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4] 김정일 친인척들의 주요 군부인물 현황(현 생존자)

이름	현 계급/직책	주요 경력
이용무	인민군 차수/ 국방위 부위원장	1973. 8 인민군 상장,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1974. 6 당 중앙위 정치위원 1998. 9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및 인민군 차수
장성우	인민군 차수/ 당중앙위 민방위부장	1992. 5 사회안전부 정치국 국장 1995.10 호위총국장 2003. 8 당중앙위 민방위부장
박기서	인민군 차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995. 3 당 중앙군사위 위원 1996.10~2005 평양방어사령관

\* 출처 : 정보사령부, 『북한편람』, 2000 ; NK조선 인물 DB 종합

주요 참석자는 이명재, 최용호 문화 담당 고문, 염기순, 박송봉, 최익규 당선전부 부부장, 김용순, 기명국, 계응태, 김기남과 군부 주요 인물로는 오진우, 이하일, 조명록 및 당 중앙위 작전부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무,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정찰국장 장성우, 포병사령관 김하규, 무력부 부부장 김광진, 무력부 제5국 대좌 김창선 등이다.<sup>19)</sup> 육군사관학교와 현성일이 판단한 김정일 측근 세력 중 군부세력들만 모아 [표 2-5]에 정리하였다. 1세대가 없다는 특징과 이들 중 당·정에서 직위가 없어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다수의 3세대가 있지만, 이들은 이 모임을 통해 추후 당·정에서도 당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으로 선발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표 2-5] 김정일 측근 군부세력

구 분	육군사관학교	현성일
2세대	대장 오극렬, 대장 김두남 대장 김강환, 대장 이봉원 차수 이하일, 상장 오룡방 차수 조명록, 차수 김일철 차수 이용무, 대장 장성우 대장 기명국	중장 권성린, 차수 김광진 차수 김영춘, 대장 박재경, 대장 장성우, 차수 조명록
3세대	상장 강동윤, 상장 현철해 상장 김정각, 상장 남상락 상장 한인술, 상장 김영용 중장 김대식, 중장 옥봉린	대장 김하규, 대장 원응희
기타	상장급 : 백창식, 김용운, 주상성, 정창렬, 김성규, 정호균, 김하규, 이원재, 주승남, 박재경, 김격식 중장급 : 백상호, 이태철	김정일 서기실 실장 : 강상춘 · 김창선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용철 직위 미상 : 윤치호

\* 출처 :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황금알, 2006, p.125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력과 파워엘리트』, 선인, 2007, p.227

19) 최주환의 위 논문 및 조선일보 1996년 5월 1일, 2007년 2월 15일자 ‘김정일 측근’ 관련 기사 종합

본 연구에서는 군부 집단 구분을 혁명세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혁명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1세대는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운동을 전개하였고, 북한 정권을 창건하는 핵심 세력들로 북한에서 존중받고 있는 세대들이다. 2세대는 김정일 정권의 실질적인 리더 그룹임과 동시에 1세대와 3세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로서 김정일 정권 수립을 주도했고, 만경대혁명학원 졸업 후 소련과 같은 동구권국가에서 유학한 세대들이다. 3세대는 2세대와 달리 북한내 교육체계가 갖추어져서 북한의 자기식 군사전력과 주체사상하에서 토착 군인으로 양성된 세대들이다.<sup>20)</sup>

혁명 1세대들을 분석해 보면 김정일보다는 20~31살 나이가 많고, 학력은 당시 북한에 교육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대부분이 확인된 자료가 없고, 확인된 가운데에서도 소련 유학파가 대부분이었다. 귀순자에 의하면 김익현, 백학립 등은 한글을 겨우 깨우쳤을 정도라고 하면서 혁명 1세대들은 대부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1)</sup> 이들 대부분은 김정일 정권 이후 차수 이상 진급하였는데, 이는 김정일의 노·장·청 배합 일환 및 원로 예우 차원에서 진급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여진다.

혁명 2세대들은 김정일보다는 6~19살 많지만, 김정일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수학하면서 관계를 맺은 이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은 김정일 정권 수립 이후 핵심적인 권력 엘리트로서 당·정·군의 핵심 보직에 위치하면서 명실공히 북한을 이끌어가는 그룹이 되었다.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만경대혁명학원 및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혁명 2세대부터는 준비된 세대로 소련이나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유학한 인원이 분석된 인원 39명중 18명(46%)이나 되었다. 이때 당시까지 북한의 교육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기초교육은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실시하고, 고급교육은 소련 등 해외 유학을 통해서 고급인력들을 양성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비교적 다른 세대들에 비해 현대적인 공산주의 군사전략과 전술교리에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

20) 이미숙, 『군부엘리트의 성향을 통해 본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군사 제50호(2003.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pp.116

21) 신동석, 『북한 군부 엘리트 총원과정의 특성』, 군사논단 제39호(2004년 가을), p.152

마지막 3세대는 1937년생 이후로 이제 군부 권력 무대에서 등장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에 비해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분석하고자 노력했다. 3세대에서는 차수 전재선을 중심으로 당·정에서도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대장 김성규, 김윤심, 김격식 등을 들 수 있다.

[표 2-6] 혁명세대별 군부 인물 현황

구 분	주요 인물 현황
1세대	상장 강덕수, 중장 강현수, 차수 김봉률, 차수 김용연, 차수 김익현, 대장 김철만, 차수 백학림, 차수 오진우, 차수 이두익, 원수 이을설, 차수 이종산, 중장 이 활, 대장 전문섭, 차수 주도일, 차수 최 광, 중장 최용진, 차수 최인덕, 대장 태병렬
2세대	차수 : 김광진, 김영춘, 김일철, 박기서, 이하일, 장성우, 조명록, 이용무 대장 : 김기선, 김두남, 김병률, 여춘석, 오극렬, 오룡방, 이병욱, 이봉원, 정창렬, 주상성, 현철해, 박재경 상장 : 김강환, 김상호, 김용운, 김치덕, 남상락, 박중국, 원명균, 이찬복, 전진수, 조순백, 최상욱, 최용수 중장 : 강태무, 권성린, 김국태, 오기수, 이철봉, 장천환, 최준길
3세대	차수 : 전재선 대장 : 이명수, 김명국, 김하규, 김영룡, 원응희, 김격식, 김정각, 김성규, 김윤심 상장 : 신일남, 이원재, 오금철, 김상익, 권상호, 김양점, 김복문, 박승원, 강영호, 백창식, 김용운, 강동윤, 한인술, 김대식, 정호균, 주승남, 백상호, 이태철, 옥봉린, 김성국, 김요웅, 김일순, 김형룡, 임태영, 변인선, 심명수, 전기련, 지기선, 채문덕, 최성수, 허극성, 여병남, 이태일, 지영춘, 이무웅, 심상대, 김원홍, 안피득, 이봉죽, 최부일, 이병삼, 정명도 중장 : 김선주, 장봉림, 한동근, 오철산, 조영남, 김정만, 김영철, 한배년, 한영욱, 이종무, 박영하, 심태균, 전광록, 정양상, 최상려, 김승범, 김승연, 김행련, 노경준, 이병철, 이원식, 이정부, 차경일, 김정남, 김양근, 이종식, 강표영

주석단 인물 비교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모든 국가 행사의 주석단을 상호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행사의 성격이 행사간 다소 상이하다는 전제하에 동일한 성격의 행사 내에서 인물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래서 군 중심의 행사인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일과 북한군 창건일 기념행사

의 주석단 인물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군 관련 행사에서는 최근 혁명 1세대들의 퇴진이 확연히 드러났지만, 이들은 완전한 퇴진이 아니라 당 또는 정 및 범국가적 차원의 행사에는 지금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최소한의 정치적 상징성은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정일의 대외 활동시 김정일을 보좌하는 수행 인물들과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행 인물로는 각 인물들이 고위계급으로 진급하는 시기를 전후로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표적 인물로는 현재 북한 군부 권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조명록, 현철해, 박재경,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등이 눈에 띈다.

[표 2-7] 군 관련 기념행사시 군부인물 참가자 현황

시 기	행사종류	참 가 자
최고인민회의 제9기(1990.4)	조선인민군창건 60돌 열병식(1997.4.25)	1세대:김철만,백학립,이을설,이종산,전문섭 2세대:김영춘,김일철,박기서,이하일,조명록 3세대:전재선(총11명)
최고인민회의 제10기(1998.7)	조선인민군창건 65돌 열병식(2002.4.25)	1세대:김익현,김철만,이을설,이종산,김용연 2세대:김영춘,김일철,박기서,이용무,이하일,장성우,조명록 3세대:전재선(총13명)
최고인민회의 제11기(2003.9)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5돌 (2006.12.24)	2세대:김두남,김영춘,김일철,박재경,이용무, 조명록,주상성 3세대:김상익,김양점,김운심,김정각,오금철 미 상:김원홍(상장),심상대(상장),이정부(중장) 최부일(상장)(총16명)

\* 출처 : NK조선, 『북한인물 : 주석단 서열』; 정보사령부 『북한편람, 2000』

[표 2-8] 김정일 대외 활동시 수행 군부인물 현황(1992년 이후)

(단위 : 횟수)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오진우	6		1	1		사망('97)											
최 광	4		1	17	6	1	사망('97)										
전문섭	1			1		4	5	사망('98)									
백학림	차수진급('92)		1	6		5	5					인민보안상해임('06)		사망('06)			
이을설	1		1	9	6	7	6	3	3	6	3	국방위해임('03)		1			
김용연						차수진급('98)		3	1		1	1	1	1	사망('08)		
이종산						차수진급('97)		1					1	1			
김익현	차수진급('94)		1	1		3	1	1	1		1	1	2	1			
김철만	대장진급('88)									2	2	국방위해임('03)		1			
김광진	1		1	10	4	사망('97)											
정창렬				대장진급('97)		3	3	1									
오룡방			대장진급('94)			3	3		사망('00)								
이하일	1		1	12	15	7	4	국방위해임('99)									
조명록		차수진급('95)	7	26	42	35	28	24	13	18	3	1	8	1	1		
현철해		대장진급('95)	1	25	32	38	37	25	67	38	36	59	45	45	32		
박재경		상장진급('94)		12	28	30	36	33	26	61	34	33	55	42	44	3	
김영춘		차수진급('95)		4	16	44	29	25	19	28	29	23	29	22	10	3	
김일철	1	대장진급('92)	1	4	2	9	12	12	18	22	19	13	5	22	8	9	
이용무				차수진급('98)		9	14	4	10	6	2	2	4		2		
박기서			4		차수진급('97)		4	1						1	평방시령위해임('05)		
김명국	대장진급('94)	1	2	1		1										5	
장성우	대장진급('92)			1	2	1				2	1	1	1				
김기선									대장진급('03)		1	1	1				
이명수			상장진급('95)		3	9	9	15	11	42	27	30	51	45	48	28	
전재선			1	차수진급('97)		6	6	5	2	3	2	1군단장해임('03)		1			
오금철			상장진급('95)		3	9		1	1	3	2		3		1		
김하규	1			7	24	21	29		총참모부 미사일총국장('00)					사망('06)			
박승원	중장진급('92)							1	이후활동없음('00)								
정호균	상장진급('92)		1	1				4	이후활동없음('00)								
김격식				1	대장진급('97)		1						2	1	총참모장('07)		8
강동윤					1			상장진급('01)		1			당중앙위 부부장('07)			4	
김정각								1	대장진급('02)		1	총장차국 제부국장('07)				7	
김윤심			상장진급('97)		5	3	3	2	4	1	2					2	
심명수				상장진급('97)		1									사망('06)		
최부일													상장진급('03)			3	
정태근											중장진급('03)					3	
김승연			1	중장진급('97)												2	
윤정린													호위사령관('07)			2	
이병삼				상장진급('99)		1	2	2	1	1	1	1	이후활동없음('05)				

이러한 공식·비공식적인 직위와 활동 모두를 종합하여 김정일 정권 전후의 북한 군부 엘리트를 판단하여 [표 2-9]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시기에는 김일성이 생존해 있어 김일성 혁명 1세대 중심으로 권력 엘리트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시기에도 노·장·청 배합이라는 인사 등용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정도로 계속해서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노령화로 인해 사망하게 되자 혁명 2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 시기에 공식적인 당·정의 고위 직위는 갖지 않았지만, 김정일 대외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이미 실질적인 권력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유훈통치기간이 끝나고 김정일에 의한 본격적인 국정 운영이 시작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시기에는 혁명 1세대들의 퇴진과 혁명 2세대들의 중요 직위에서의 자리매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때도 역시 혁명 3세대들의 등용 조짐이 나타나는데, 전재선, 이명수, 장성우, 김윤심 등의 대외 활동이 활발해졌다.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시기에는 김정일 정권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혁명 2세대들의 권력 쇠퇴 현상은 이전의 1세대만큼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미약하게 진행된 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대교체를 이루어야 할 혁명 3세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수가 오히려 62%(제10기 21명에서 제11기 8명으로 급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제11기 대의원 선거 결과의 총체적인 특징 중 군부 인물의 대거 탈락과 당 인물들의 대거 등장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북한 당·정·군의 주요 핵심 세력인 혁명 2세대의 권력은 공고화된 상태이기에 권력 변동이 적었던 반면, 혁명 3세대의 경우 당이나 정에서의 정치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제11기 대의원에서 대거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혁명 3세대 중 상장 최용수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었고, 김정일 측근 인물들로 계속해서 김명국, 김격식, 김정각, 장성우, 원응희 등이 활동하고 있는 바 이것은 노·장·청 배합에 입각하여 군부 권력의 차세대 이양을 지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김정일 정권 직후 북한 군부 엘리트 집단 판단

구 분	최고인민회의 제9기 (1990~1997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998~2002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2003년 이후)
1세대	차수 김봉률, 대장 김철만 원수 이을설, 차수 김익현 차수 백학림, 차수 오진우(95년 사망), 차수 주도일(94년 사망), 차수 최 광(97년 사망), 차수 이두익(02년 사망),	원수 이을설, 차수 김익현 차수 백학림, 차수 김봉률(95년 사망)	원수 이을설, 차수 김익현 차수 백학림(06년 사망)
2세대	차수 이하일, 차수 조명록 대장 오룡방, 대장 김두남 대장 오극렬, 차수 박기서 차수 김일철, 차수 김광진(97년 사망) 대장 이봉원(97년 처형설) 상장 최상욱	차수 이하일, 차수 조명록 차수 박기서, 차수 김일철 대장 오룡방(00년 사망) 차수 이용무, 차수 김영춘	차수 이하일, 차수 조명록 대장 김두남, 차수 박기서 차수 김일철, 차수 이용무 차수 김영춘
3세대	대장 김명국, 대장 김하규(06년 사망)	대장 김명국	대장 김명국, 상장 최용수
기타	대외활동시 등장 인물 : 김영춘, 박재경, 현철해	부각 : 이용무, 김영춘 쇠퇴 : 오진우, 최 광, 주도일 김두남, 오극렬, 이두익 이봉원, 김하규, 김일철 김광진, 최상욱, 김하규 등장 : 전계선, 이명수, 김윤심 김용운, 장성우	부각 : 최용수 쇠퇴 : 김봉률, 김철만, 이을설 오룡방, 백학림 등장 : 주상성, 김격식, 김정각 강동윤, 원용희 등



[표 2-10] 군부 엘리트의 계열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현황(제9~11기)

구 분	혁명1세대				혁명2세대				혁명3세대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	호위사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	호위사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	호위사
제9기	8	2	1	5	14	5	1	3	14	0	1	0
제10기	4	1	0	4	11	8	1	4	18	1	2	0
제11기	3	0	0	3	11	7	0	2	6	1	1	0
비 고	9기 : 16명 / 10기 : 9명 11기 : 6명				9기 : 23명 / 10기 : 24명 11기 : 20명				9기 : 15명 / 10기 : 21명 11기 : 8명			

## 2. 김정일 정권 전후 북한 군부 엘리트 집단의 성향 분석

앞에서 밝혀낸 북한 군부 엘리트들에 대해서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부터 현재까지 각 시기별 나타난 북한의 주요 군사정책들을 통해서 이들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성향을 도출하기 위해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방비와 군사력 증강 추이, 각 시기별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침투 양상 등을 가지고 [그래프 2-1, 2, 3]과 [표 2-11]과 같이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의 군사 정책이다. 보통 국방정책과 군사정책, 군사전략이 많이 혼동되는데, 국방정책은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일부로서 외부로부터 위협이나 침략에 대해 국가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 비군사에 걸쳐 각종 수단을 유지, 조성 및 운용하는 정책<sup>22)</sup>이고, 군사정책은 국방정책의 일부로서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력의 유지, 조성 및 운용을 도모하는 오로지 군사에 관한 각종의 정책<sup>23)</sup>이다. 부가적으로 군사전략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수단인 전투의 사용”<sup>24)</sup>, 리델 하트는 “정책상의 제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분배, 적용하는 술”<sup>25)</sup>이라고 각각 정의하였다. 정리해 보면, 국방정책은 범국

22)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1998, p.85

23) 위의 책, p.74

24) Carl von Clausewitz. *On War*. Vol. I, p.165

25) B.H.Liddel Hart, *Strategy*. 2nd edition(New York : Fredrick A. Praeger, Inc.. 1967), p.335

가적 차원에서, 군사정책은 군사 분야에 국한된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고, 군사전략은 이러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기술(art)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북한군의 기본 군사전략은 정치전략을 우위로 하여 3대 혁명역량의 선축적을 강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결정적 시기에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속전속결전으로 전쟁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그 요지는 군의 정치·군사적 역량 강화, 정치·사상적 우세에 의한 양적 우세 제압, 유격전적 우세에 의한 군사기술적 우세 제압, 선제기습공격에 의한 속전속결전 등이다.<sup>26)</sup> 북한의 군사정책에 대해서는 박헌옥은 ‘전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는 것’을 본질적 목표로 적화통일 방해 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하고 저항민족주의 감정을 ‘반일반제(反日反帝)’, ‘반미반제(反美反帝)’ 쪽으로 결집하여 이를 무기화 하겠다<sup>27)</sup>는 것으로 보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군사정책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이것은 곧 정책 입안자들의 성향으로 평가되었다. 김일성 시기는 혁명 1세대가 주축이 된 시기로 [그래프 2-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력의 급격한 변화는 없는 가운데 북한 자체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4대군사노선(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을 가지고 무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였고, [표 2-11]에서처럼 무장공비 침투, 잠수함 침투 등 간첩남파·대남침투 등을 통해 남한내 동조혁명 역량 강화를 시도했다. 따라서 이들의 성향은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속성에서 보수적이면서, 혁명역량을 단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온건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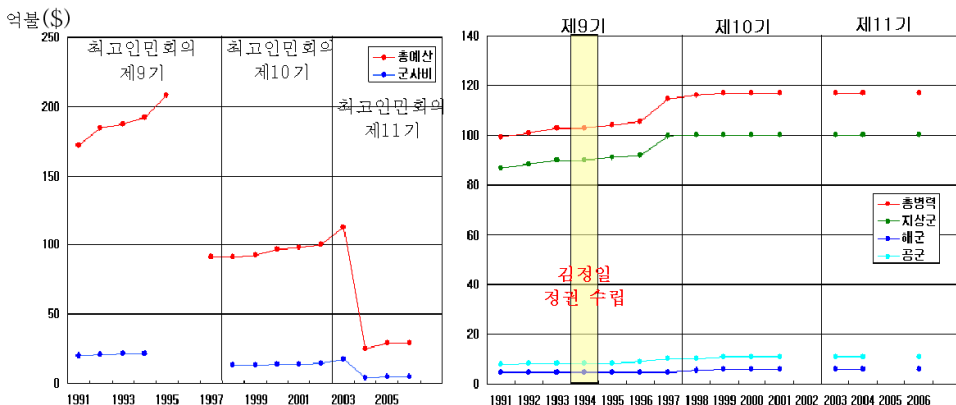
반면 혁명2세대가 주축이 된 김정일 정권시기에는 김일성 시기에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남북한내 혁명역량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원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 초기 체제 안정화를 위해 대외 적을 부각시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26) 『북한이해의 길잡이』, 전현준 외 9명, 박영사. 2005, p.141

27) 박헌옥,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체제를 위한 억제전략과 안보시스템 필요’, 『북한 2007년 8월호』, 북한연구소,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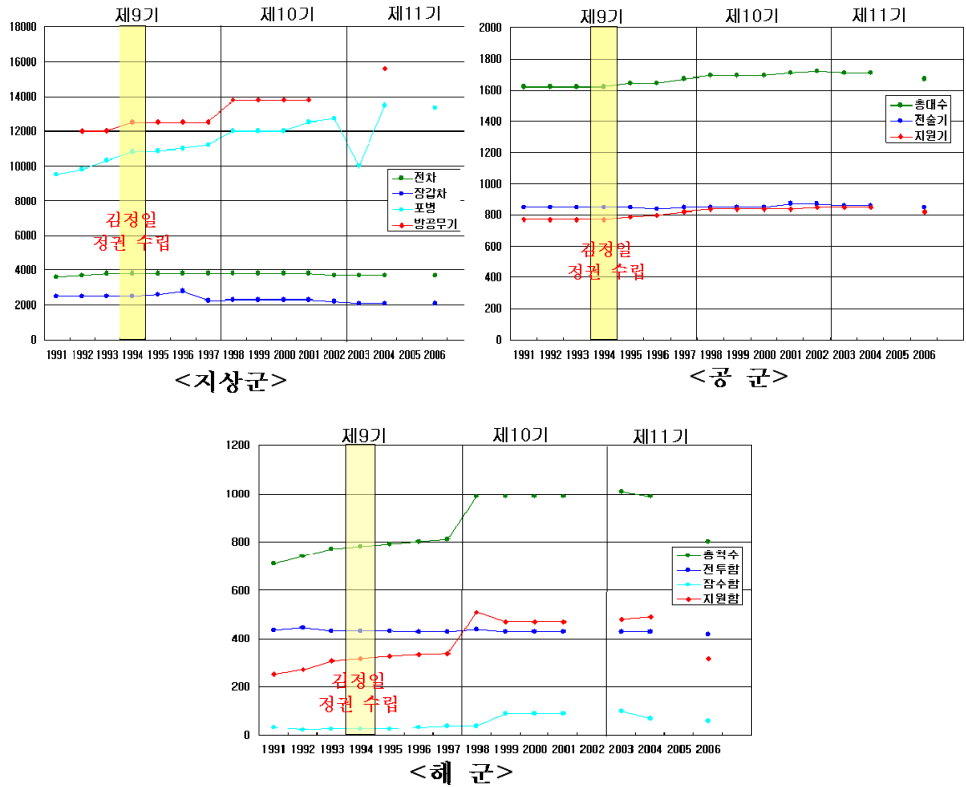
증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김정일 정권의 입지를 높임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를 국제문제로 이슈화시켜 김정일 정권의 체제 보장을 담보받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내는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도 정권 초기 지상군 중심으로 군사력이 9만 명이 증가한 117만 명이 증가된 가운데, 핵·지대지미사일·생화학무기·잠수함 등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하면서, 국가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시 김정일을 보호하기 위해 평양 중심의 방공무기 배치와 러시아로부터 신예 전투기 MIG-29기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김일성 시기와는 달리 대남 침투보다는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과 같이 NLL에서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등을 통해 협상력 제고 수단들을 마련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 시기의 혁명2세대들의 성향은 체제유지 차원에서는 1세대들과 동일하게 보수적이지만, 정책집행 방법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혁명3세대의 경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결정적인 핵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성향 파악은 비공식적 요소들을 고려시 북한내에서 육성된 집단이기에 김정일 체제를 수호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 2-1] 북한 군사비 및 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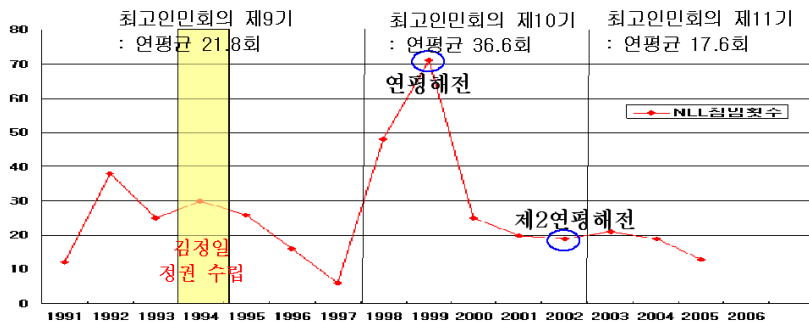
\* 출처 : 『2006 국방백서』, p.137, 북한 공식 발표 군사비 적용

[그래프 2-2] 북한 지·해·공 군사력 증강 현황



\* 출처 : 『2006국방백서』, p.137

[그래프 2-3] 1990년 이후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횟수<sup>28)</sup>



28) 임인수, 『서해 평화 정착 방안 : NLL문제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6, p.28

[표 2-10] 북한 군사 도발 일지(1990년 이후)

구 분	일 자	내 용
최고 인민회의 제9기	1992.5.22	DMZ 침투공비 사살사건. 무장공비 3명이 我 GP 남방 800m 지점에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발견, 전원 사살
	1995.10.17	임진강변 무장공비 사살사건. GOP 경계병이 전방 20m 절벽 아래에서 공비 1명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 사살
	1995.10.24	부여 무장간첩 사살 및 생포사건.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사 입구에 무장 간첩 2명이 출현, 1명 사살, 1명 생포
	1996.9.17	강릉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암초에 좌초된 잠수함 발견. 공비 25명 소탕, 잠수함 노획
	1998.2.2	JSA 북한군 1명 2회 MDL 월경
	1998.3.12	북한군 12명 MDL 40~50m 월경 침범
	1998.6.11	북한군 GP서 아군 GP 방향 자동소총 4발 발사
	1998.6.22	속초해안 잠수정 침투사건. 속초 동남방 11.5NM 해상 어민 이 어망에 걸린 잠수정 발견. 잠수정 예인, 9명 자살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1998.7.12	동해시 해안서 무장간첩 사체 1구, 침투용 수중추진기 1대 발견
	1998.12.18	남해안 침투 간첩선 격침사건. 육지도 남방 56NM 해상 반잠수정 1척 격침. 공작원 1명 포함 사체 6구 인양
	1999.6.15	연평해전 발발
	2001.6.2~5	북한 상선 3척, 제주해협 무단 통과
	2001.9.19	강원 철원군 DMZ에서 북한군 MDL 월경
	2001.11.27	파주군 장파리 DMZ에서 아군 초소에 기관총 2~3발 발사
	2002.6.29	북한 경비정 NLL 침범. 제2연평해전 발발
	2003.2.20	북한 MIG-19 전투기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2003.3.2	북한 MIG-23/29 전투기 美 RC-135 정찰기 위협비행
2003.7.17	북한군 경기 연천 DMZ에서 14.5mm 기관총 4발 발사	

\* 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북한도발일지) 및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종합

### Ⅲ. 결 론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의 주요 군사정책과 도발 양상 등을 통해 북한 군부 권력 집단의 성향을 밝혀냈고, 이것을 이들의 배경요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성향을 도출해냈다. 최고인민회의 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김일성 시기의 핵심적 군부 엘리트 집단인 혁명 1세대의 성향과 김정일 시기의 중심 세력인 혁명 2세대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혁명 1세대들은 기득권층이지만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빨치산 활동이나 6.25 등의 실전 경험을 통해 북한의 군사정책 중 북한 내 혁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대남 침투 등 대남 혁명역량 강화 정책을 실행했다. 이러한 군사정책의 특성들이 정책 집행 방법에 있어서 온건한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고, 현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반면 혁명 2세대들은 군사정책에 있어서 1세대들의 북한내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3대혁명 역량 강화 중 국제사회에서의 지원혁명 역량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들 세대가 체계적인 교육과 해외유학을 경험으로 선진 군사지식은 물론 국제 정치·외교의 경험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군사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있어서 혁명1세대들에 비해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역시 김정일 정권 유지세력으로 체제 유지 차원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혁명 3세대의 성향 파악은 구체적 자료들의 불충분으로 파악하기가 제한적이나, 북한내에서 철저한 사상교육에 의해 자생됐다는 점에서 체제 옹호를 위해 이들 역시 보수적일 것으로 평가되나, 권력 이양 과정에서 혁명 1,2세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파벌 형성의 조건들이 불거져 나와 의외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금번 연구와 같이 권력 집단의 성향 파악은 국가간의 협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북한 권력 집단에 대한 성향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 문]

- C.W, 밀스 저, 진덕규 역, 『파워엘리트』, 한길사, 1979
- 박영택·김구섭·백승주·김재홍, 『북한 군부의 의사결정체제 연구』, KIDA, 2007년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한올아카데미, 2003
- 남만권 편, 『북한 군사체제 평가와 전망』, KIDA, 2006
- 연합뉴스, 『북한용어 400선집』, 연합뉴스, 1999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한올아카데미, 2007
- 안찬일 외, 『10년 후의 북한 : 10명의 북한 출신 엘리트들이 보는』, 인간사랑, 2006
-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황금알, 2004
-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황금알, 2006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력과 파워엘리트』, 선인, 2007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올아카데미, 2006
- 이범응 외, 『통일시대의 북한학』, 양서원, 2007
- 온만금 외, 『북한학』, 박영사, 1996
-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새인식 북한의 군사』, 경인문화사, 2006
- 김진무,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고찰』, 『북한 2006년 7월호』, 통권 제415호
- 신동석, 『북한 군부 엘리트 충원 과정의 특징』, 군사논단 제39호(2004년 가을)
- 이미숙, 『군부엘리트의 성향을 통해 본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군사 제50호 (2003.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 통일부,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7.
- 통일부, 『북한의 주요인물』, 2007.
- 연합뉴스, 『북한연감 2002』, 2002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93-2002)』, 2003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1998

### [영 문]

- Edmonds, Martin. *Armed Services and Society*. Westview Press. Boulder & San Francisco, 1990
- Carl von Clausewitz. *On War*. Vol. I
- B.H.Liddel Hart, *Strategy*. 2nd edition(New York : Fredrick A. Praeger, Inc.. 1967)

[북한문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 군사선행,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 평양출판사, 2000

[기 타]

중앙일보 2008년 7월 13일, 6월 22일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조선일보 NK조선 <http://www.nkchosun.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http://nk.joins.com>



〈 장 려 〉

# 남남갈등해결을 위한 인터넷 토론의 발전적 향후 과제

- 복잡계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을 통한 대안의 모색 -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4학년 정미선

##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사회적 합의 도출 인프라 설계 필요성
- III. 정책 제안 : ‘인터넷 국민광장’
- IV.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 V. 결 론

**【참고문헌】**

## [요약문]

## 남남갈등해결을 위한 인터넷 토론의 발전적 향후 과제 - 복잡계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을 통한 대안의 모색 -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 내부의 이견과 갈등은 남북관계 발전과 정비례하여 현재화하고 있다. 퍼주기 논쟁 속의 대북 지원이 상징 하듯 남북관계는 정쟁화의 구도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보·혁 진영간의 대립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북 정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초래함과 아울러 대북정책의 추진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sup>1)</sup> 분단이래로 계속되어 온 남남갈등은 초기 지역 갈등에 기초해 일어나는 것처럼 인식되었고 실제 그런 양상으로 관찰되었지만 최근에는 보·혁간 이념 갈등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이념적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sup>2)</sup>

남남갈등이 있다는 것은 서로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공적인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사회구성원간 공동의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남남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그 대안으로서 정책<인터넷 국민광장>을 제안하였다.

제안에 앞서, 본 논문의 근간을 이루는 복잡계 패러다임은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여 비선형적으로 사건이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조직 학습 메커니즘에서 착안하는 복잡계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창발성(Emergence)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조직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비선형적으로 발생하는 조직화 과정 속에서의 학습을 Crossan, Lane & White(1999)의 조직학습 연구와 결합시킴으로써 ‘창발적 학

1) 조한범(2006),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p.3 참조

2) 남남갈등이 이념갈등의 지평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간단한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서구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해방 직후 우리 현대사의 경험에 비춰 이러한 갈등은 자칫 선악의 구도 및 이념지상주의와 결합하면서 대결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남남갈등, 이념갈등으로 정체성 강화” 권영경 통일연구원 교수 토론회 발언, 연합뉴스, 2005년 9월 22일

습’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이를 포함한 ‘복잡계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이 완성된다.

이렇게 복잡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 남남갈등 현상과 통일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의견 수렴 양상을 살펴보았다. 통일부 홈페이지를 조사하며 네티즌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 아고라와 네이버 토론장에서의 북한 관련 인터넷 토론 메시지의 질적 수준 조사에서는 반말과 개인 느낌, 생각 위주의 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인터넷 국민광장>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플랜들을 제시한다. 이는 복잡계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에 입각한 플랜들로서 적절한 복잡성과 함께 절제함이 공존하게끔 토론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때 적절한 복잡성이라 함은 균형상태도 아니고 무질서한 혼돈상태도 아닌 양자의 중간지대로서 혼돈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토론이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본 정책 제안을 하는 이유는 남남갈등을 타개할 해결책으로서 인터넷 토론이 탁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인터넷 토론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건들을 배치시켜 통일관, 북한관의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하게 되면 북한을 두고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건전한 통일관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을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비로소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 I. 서론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피격 사건과 향후 남북 관계 해법을 놓고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터져 나왔다. 보·혁간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속 시민들 역시 열심히 북한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은 비단 금강산 피격 사건에서만 나타난 양상이 아니다.

분단 이래로 계속되어 온 남남갈등은 초기 지역갈등에 기초해 일어나는 것처럼 인식되었고 실제 그런 양상으로 관찰되었지만 최근에는 보·혁간 이념 갈등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이념적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실시된 5년여 과정 동안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남북 교류협력과 북한의 변화를 경험하고 국민의 정부에 이어 진보적 성격의 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 남남갈등이 보다 더 심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sup>3)</sup>. 본 논문은 남남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물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서로의 의견에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시점이다.

한국 사회는 사적인 신뢰와 연고주의가 깊게 자리잡혀 있어 수평적 네트워크 보다는 수직적 권위에 의존하고 이를 동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남갈등이 있다는 것은 서로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공적인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사회구성원간 공동의 쟁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남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대안으로 정책<인터넷 국민광장>을 제안하였다.

인터넷 토론을 통하여 그 안에서 수렴 과정과 통일 교육의 해답을 찾는 본 제안 정책은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조직학습의 관점으로 현 남남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적 시도이다. 조직 학습 메커니즘

3) 남남갈등이 이념갈등의 지평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간단한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서구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해방 직후 우리 현대사의 경험에 비춰 이러한 갈등은 자칫 선악의 구도 및 이념지상주의와 결합하면서 대결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남남갈등, 이념갈등으로 정체성 강화” 권영경 통일연구원 교수토론회 발언, 연합뉴스, 2005년 9월 22일

에서 착안하는 복잡계의 핵심 개념인 창발성(Emergence)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조직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토론이 남남갈등 해결뿐 아니라, 그 갈등 해결 과정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통일 교육<sup>4)</sup>의 원리를 설명할 것이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의 학습은 외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복잡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 남남갈등 현상과 통일 교육 문제에 이상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관련 문제가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에게 자주 논란이 되고 있지만, 논란만 되고 있을 뿐 그들의 토론 문화가 비생산적이고 비학습적이란 점과 네티즌과 소통하려는 정부 차원의 기존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통일 관련 문헌과 정책안, 통일 관련 연구 자료와 각종 언론 자료 및 복잡계 관련 연구 자료와 조직학습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론 연구를 하였다. 또한 실증 연구를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 조사와 다음 아고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북한 관련 글 300개를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잡계 패러다임’과 ‘복잡계 원리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의 의미와 관련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

4) 통일 교육은 그 대상과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학교통일교육은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통일교육은 정치 교육 혹은 시민교육 또는 시민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주로 정부차원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논할 것이기에, 사회통일교육으로서의 개선에 대한 고찰이다.

## 1. 복잡계 패러다임

### 가. 복잡계 패러다임의 의미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복잡계 패러다임”(complex systems paradigm)이 주목받고 있다. 복잡계란 여러 구성요소들이 각각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선형적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라는 이전의 사고와는 달리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여 비선형적으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sup>5)</sup>. Mainzer(2005)는 복잡성의 특징으로 다중적인 네트워크로 나타나는 끊임없는 학습과정(continuous learning process)을 들었다. 불확실하고 다양하며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복잡계 현실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 형성과 발전적인 체계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조직학습에 적용될 복잡계 이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 나. 복잡계 이론의 핵심 개념

#### 1) 창발성(emergence)

창발성은 복잡계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조직화 또는 구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성다야 외, 2006 ; 유명만, 2006). 복잡계가 내외부 다양한 요인들과 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자생적으로 진화·발전·유지되는 것은 창발성 때문인 것이다.

창발성은 각기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 또 다시 집합체로 만들어지면서 전혀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초기 조건의 민감성’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던 작은 요인이 복잡한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거쳐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전체의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5) 서문기 외(2006),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56-58 참조

## 2)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

자기 조직화는 창발성을 바탕으로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성다야, 2008 ; 유명만, 2006). 개개인간의 작은 상호작용이 창발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창발성이 계속 쌓여 임계점을 지나면 시스템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무질서했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회복한다.

여기서 편차 증폭 피드백(positive feedback)과 편차 상쇄 피드백(negative feedback)의 작용은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성을 유지한다. 편차 증폭 피드백이 기존 평형 상태의 균형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체계 구조나 기능을 갖추기 위한 불안전·무질서·불균형·비평형 상태로 기존 체계를 지속적으로 요동치게 만드는 반면 편차 상쇄 피드백(negative feedback)은 시스템의 변화에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 편차 증폭 피드백과 편차 상쇄 피드백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복잡한 상태가 단순해지지 않게 유지되면서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피드백 과정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부의 계획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 조직과 구성원, 조직이 속한 사회는 함께 학습해 나가며 공진화(coevolution)한다.

## 3) 혼돈의 가장자리(the edge of chaos)

위에서 언급한 초기 조건의 민감성은 복잡계 세상 속에서 작은 요동도 급격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큰 변화를 불러올 작은 요동을 ‘약신호(weak signals)’라 부르며,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시스템 자체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혼돈의 가장자리’란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경계를 말한다. 혼돈의 가장자리는 안정된 균형 상태도 아니고 무질서한 혼돈 상태도 아닌 양자의 중간지대로서 풍부한 변화의 가능성이 내재된 상태이다. 즉, 안정된 균형 상태에서는 작은 변화가 곧바로 균형으로 되돌아가고, 무질서한 혼돈 상태에서는 작은 변화가 차별화되지 않고

문혀 버리게 되는 상황에서의 그 경계를 의미한다.<sup>6)</sup>

## 2. 복잡계 원리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

복잡계란 무수한 요소가 상호 간섭해서 어떤 패턴을 형성하거나 예상 외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각 패턴이 각 요소 자체에 되먹임되는 시스템이다(Arthur, 1999). 이러한 시스템 원리로 인해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된 학습이 결국 조직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조직학습이 설명 가능하게 된다.

Crossan, Lane & White(1999)는 조직학습의 수준을 개인-그룹-조직 차원으로 나누었고 조직학습과정은 4I로 나누었다[표 1].<sup>7)</sup> 4I란 인식(Intuiting), 해석(interpreting), 통합(integrating), 제도화(institutionalizing)를 말하는 것이다. 4I 과정을 거침으로써 개인으로 구성된 조직은 여러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유연한 학습,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복잡계 원리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에서 각 단계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표 1]

조직 학습의 수준	조직 학습과정
개인	인식 (Intuiting)
그룹	해석 (interpreting)
	통합 (integrating)
조직	제도화 (institutionalizing)

\* 조직학습의 수준과 과정(Crossan et al, 1999)

먼저, 인식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이 경험한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습득하거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를 조직

6) 서문기 외(2006),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56-58 참조

7) 4I는 Crossan, M. M., Lane, H. W. & White, R. E.이 1999년 An organizational learning framework : from intuition to institu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4I의 순환과정을 밝으며 조직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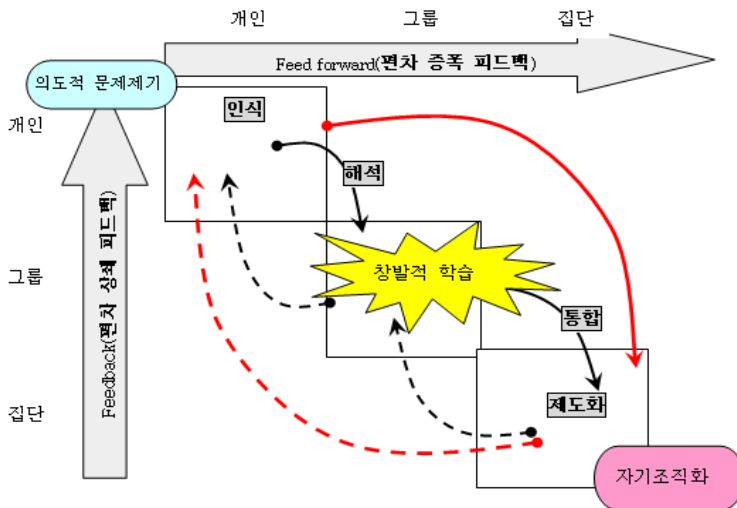


전체 차원에서 보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인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도적 문제제기’란 조직 안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스스로 문제제기를 통해 학습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말한다.

둘째로, 해석과 통합은 그룹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해석은 개인 차원에서 문제 상황을 인식한 후, 그것에 대한 각자의 인식 자체를 그룹 차원에서 구성원끼리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통합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일관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해석과 통합의 과정은 공통적으로 조직 내 지식공유 활동으로 볼 수 있다<sup>8)</sup>.

셋째로, 제도화 단계는 조직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조직 안에서 제도적으로 확실히 정착시킨 것을 말한다. 의도적 문제제기-해석-통합을 거쳐 제도화까지 마치면 조직은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일정한 질서, 즉 ‘자기조직화’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제도 자체가 개인 구성원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쳐 개인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림 1]



\* 복잡계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성다연 외, 2006)

8) 성다야 외(2006),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연구”, 삼성경제연구원 주최 제1회 복잡계 컨퍼런스 발표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p.13 참조

이러한 4I 과정은 피드포워드(feed forward)를 통해 개인의 새로운 지식과 행동양식이 그룹-조직 차원으로 확산되어 조직은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된다. 학습을 통해서 제도화된 지식이나 행동양식은 다시 그룹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피드백(feedback)됨으로써 학습을 강화한다. [그림 1]은 복잡계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 III. 사회적 합의 도출 인프라 설계 필요성

#### 1. 사회적 갈등 현황

북한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적 입장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념적인 노선에서 나오는 주장이 많다. 이로 인해 남남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며 갈등 해소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은 뒷전인 상황이다.<sup>9)</sup>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의 인지율은 29.7%로 아직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핵·개방·3000’ 구상 인지자들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을 설문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54.2%로 ‘높다’는 의견 41.1%보다 높게 나타나, ‘비핵·개방·3000’ 구상 인지자들 내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설득되어지지 않았다.<sup>10)</sup>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가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얼마나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의 정책 정보 제공 노력이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3.7%에 불과했다. 또한 ‘정부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9) 변중헌(2006),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한국윤리학회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08 일반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08년 3월 19일부터 21일까지이다.

응답자 중 78.0%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도 25.9%에 달했다.<sup>11)</sup>

## 2. 인터넷 토론 실태 조사

다음은 통일부 홈페이지의 정책 토론 게시판과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북한 관련 토론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통일부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온라인상의 현존하는 국민적 합의 도출 인프라 실태를 확인하고 인터넷 토론 사이트 조사에서는 네티즌들의 질적 토론 수준을 조사 분석하여 이후 사회적 갈등 해결 시스템의 대안과 인터넷 통일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가. 통일부 홈페이지 정책토론 게시판

통일부 홈페이지의 국민광장에 정책토론 카테고리에는 정책포럼, 설문조사, 전자공청회 등 총 3개의 게시판이 있다.<sup>12)</sup> 2008년 8월 17일에 확인한 바, 정책 포럼 게시판에는 2008년 4월에 올라온 ‘북한군이 먹는 쌀 계속 지원 해줘야 하는가?’ 라는 주제의 글 1개가 확인되었다. 또한 설문 조사와 전자공청회 게시판은 지난 1년간 게시 글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으며, 올라와 있는 글은 설문조사 게시판에 총 2개, 전자공청회에 총 1개로 확인돼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정책 토론 참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sup>13)</sup>고 할 수 있다.

11)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이다. 설문 조사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간이다. “사람도 정부도 못 믿는 한국사회” 건국 60년 특별기획, 매일경제신문, 2008년 8월 13일

12) 정책포럼 게시판은 통일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네티즌들에게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상호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설문조사 게시판은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곳이다. 전자공청회 게시판은 통일부의 정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에 준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네티즌들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다. 각 게시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사이트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13) 통일부는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2008년에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는 2회, 각종 설문조사는 2회를 실시하였다.

## 나. 인터넷 토론 질적 수준 조사

인터넷 토론은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토론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 올라온 뉴스에 답글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사이트 운영자가 토론 주제를 올리면 주제 관련 글을 네티즌들이 올리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곤 한다. 북한 관련 사안은 토론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과 네이버(Naver) 내에 마련된 토론장인 ‘다음 아고라<sup>14)</sup>’와 ‘네이버 뉴스토론장<sup>15)</sup>’을 채택하였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북한’을 검색하여 무작위로 토론 메시지 150개를 선정하였고 네이버 뉴스토론장의 정치 뉴스 카테고리에 있는 ‘남북문제’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토론 메시지 15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총 300개의 메시지를 대상으로 ‘플레이밍’과 ‘근거’ 정도를 측정하였고 조사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 1) 플레이밍(Flaming)

플레이밍은 인터넷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욕설, 인신공격, 비방과 같은 표현을 두고 일컫는다. 이는 시민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문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로 사이버 공간 상의 무례한 행동은 이전부터 그 규제와 처벌로 논란이 되어 왔다.

플레이밍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메시지에 욕설이 담겼는지와 반말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표 2], [표 3]. 욕설과 달리 반말을 하는 것은 이성적인 토론을 저해하는 문제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토론 분위기와 상대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4) <http://agora.media.daum.net/>

15) <http://news.naver.com/>

[표 2]

구분	반말임	반말 아님	총합
사례 수	266	34	300
비율(%)	88.67	11.33	100

\* 북한 관련 인터넷 토론 메시지 반말 실태

인터넷 토론장에서 반말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반말을 쓰는 경우가 88.67%로 반말을 안 쓰는 경우 11.33%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반말로 토론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직설적, 공격적인 느낌을 전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느낌을 살리는 목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나 자신의 신분이 비교적 노출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기에 반말을 쓰는 것이 더욱 용이한 상황이다.

[표 3]

구분	욕설 있음	욕설 없음	총합
사례 수	16	284	300
비율(%)	5.33	94.67	100

\* 북한 관련 인터넷 토론 메시지 욕설 실태

북한 관련 인터넷 토론 메시지에 욕설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욕설이 있는 경우가 5.33%에 그친 반면, 욕설이 없는 경우가 94.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자유로운 글이 오고 가는 인터넷 공간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토론 메시지가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소통되고 있었다.

## 2) 근거의 종류

근거의 종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글을 씀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들어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장이 상대방을 설득할 합리적 명분을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근거를 서로 교환하지 않으면 설득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런 정보의 교환 혹은 표집(information-pooling)이 일어나지 않기에

집단 차원에서 대표성 있는 의견으로 수렴하는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sup>16)</sup>

북한 관련 토론 메시지들의 근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하나의 메시지 당 최대 6개까지 분석하여 근거의 종류별로 그 갯수를 조사했다[표 4].

[표 4]

구분	사실/ 사건	전문가 발언	명분/ 원칙	개인의 경험	통계	개인의 느낌/ 생각	총합
사례 수	236	32	48	20	44	284	664
비율(%)	35.54	4.82	7.23	3.01	6.63	42.77	100

\* 인터넷 토론의 근거 종류

### 3. 소 결

현재 통일부는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의 제안, 토론 게시판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티즌들에게 반응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참여의 효능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또 다른 주체로서 자발적인 네티즌 네트워크의 실체를 인정하고 각종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sup>17)</sup>. 한편, 다음아고라와 네이버토론장에서의 북한 관련 인터넷 토론 메시지의 질적 수준 조사에서는 반말과 개인 느낌, 생각 위주의 글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토론에 참여한다는 것보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발언 중심의 즉흥적, 비정보적, 비성찰적인 글을 올리는 곳으로 인터넷 토론장이 이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위 조사를 통해 1)책임감 있는 토론 태도를 만들어주는 적절한

16) 김은미 외(2004),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과 합의 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72 참조

17)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문화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미래사회전략팀, pp.29-30 참조

규제가 필요하며 2)인터넷 토론자가 효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터넷 토론의 참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모색과 3)논리적인 주장과 적합한 근거를 만들어 주는 인터넷상의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4. 국외 사례

국외에서는 이미 인터넷 토론을 이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국외에서 어떻게 인터넷 토론이 운영되고 있는지 시 정부 주관 인터넷 토론 사례와 시민사회 주관 인터넷 토론 사례를 나누어 담았다.

### 가. 시 정부 차원

#### 1) 미국의 산타모니카시의 ‘Public Electronic Network’

미국의 산타모니카시 정부에 의해 198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Public Electronic Network(PEN)은 온라인상에서 토론, 각종 정보 검색과 서류접수 등의 역할을 했다. PEN은 시 정부에 대한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시 정부와 시민들간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PEN은 시 의원, 시 변호사, 시 공무원 등과 같은 핵심적 여론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해 온라인 포럼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으며 이는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인터넷 토론 집단이 형성되자, 이는 정책의 결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sup>18)</sup>

#### 2) 독일 함부르크시의 ‘DEMOS’ 프로젝트

독일의 함부르크시가 2002년에 시작한 ‘DEMOS’라는 프로젝트는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의 민주적 잠재성을 활용하려는 매우 적극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서문기 외, 2006 ; Albrecht, 2006). 시 정부는 함부르크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두고 인터넷 토론을 열었다. 토론에서는 중재자에 의해 토론장이 관리되었다. 4주 동안 진행된 토론은 총 538명의 시민들이 토론에 등록 3,900여 개의 메시지가 게시되었고 그 중 가장 인기있는 토론 메시지가 선정되어 시의 미래 전략에 반영되었다.<sup>19)</sup>

18) 서문기 외(2006),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92-93 참조

19) 상계서, pp.96-97



## 나. 시민사회단체 차원

### 1) 미국 캘리포니아시의 ‘congress.org’ (구 Democracy Network - D Net)

D Net은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비영리기구(NPO)인 Center for governmental studies(CGS)에 의해 정치적 선거나 투표를 위하여 제공된 이슈에 대한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과 웹으로부터 이슈 기반형 투표를 지원하며 설계되었다. 이후 D Net은 congress.org로 발전하며 양과 질에서 TV 광고보다 우수한 선거 정보를 웹을 통해 제공했다. 또한 후보자들과의 인터넷 토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상시적인 선거 참여와 토론을 유도하였다. 일상적인 시기에는 국가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국회의원 감시 활동을 인터넷에서 상시적으로 벌였다. congress.org는 미국 선거제도에 있어서 투표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했다.<sup>20)</sup>

### 2) 네덜란드의 Seniorweb.nl

시니어 웹은 노인 관련 시민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며 가상 공간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만나고 정보를 모으고 복지문제와 노인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시니어 웹은 초기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주요정당의 후보와 젊은 층을 대표하는 조직의 대표들을 토론에 초청했다. 토론은 별도의 일시를 정하여 시니어 웹의 토론 공간에서 대화 방식으로 실시했다. 먼저 토론 참가자들을 개인 노년 참여자, 조직의 대표, 정당 후보로 구분하여 서로 질문과 응답을 할 수 있게 했다. 약 1/4은 토론회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상호작용의 과정을 지적했고 다른 1/4은 토론회에서의 상호작용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제시했다.<sup>21)</sup>

---

20) 한국전산원(2004), “e-Governance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전략”, 한국전산원, pp.114-117  
참조

21) 상계서, pp.117-119 참조

### Ⅲ. 정책 제안 : ‘인터넷 국민광장’

여태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 인프라의 필요성과 인터넷 토론 실태, 국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복잡계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에 입각한 정책 <인터넷 국민토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남남갈등 실태를 복잡계 패러다임으로 봄으로써, 인터넷 토론장을 시작점으로 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인터넷 토론이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본 정책을 제안 하는 이유는 현 남남갈등 문제를 타개할 해결책으로써 인터넷 토론이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 해결의 관건은 인터넷 토론장을 자기조직화가 가능한 분권화된 수평조직으로 만들고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되는 토론 메시지의 복잡도를 혼돈의 가장자리로 조절하는 것이다. 북한 이슈에 대한 토론에 있어 지나친 무절제함을 보인다거나, 지나친 규제에 의한 침묵 혹은 시민들의 무관심한 태도 모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바람직한 세대로 공진화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구체적인 정책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책 세부 사항

##### 가. 중재자

중재자는 토론이 공정하고 친근한 토대 위에 수행될 수 있도록 토론 메시지를 중재하며 참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sup>22)</sup>. 토론 진행자는 안건을 통제하고 처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토론이 생산적인 것이 될 것인가 혹은 소모적인 것이 될 것인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서문기 외, 2006 ; Coleman and Gotze, 2001 ; Noveck, 2004). 북한 이슈 관련 기사를 제공하거나 불량 토론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토론 요약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토론을 계속해서 혼돈의 가장자리로 이끄는 양치기 역할을 담당한다. 김은미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토론에 중재자가

22) 서문기 외(2006),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50 참조

관리와 규제<sup>23)</sup>를 함으로써 토론의 질이 좋아진다고 한다.

### 나. 북한 지식 정보 아카이브(archive)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흩어져 있는 북한 관련 정보 자산들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안전하며 체계적으로 생산·보호·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인 ‘북한 지식 정보 아카이브’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토론이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당한 논변 구조를 갖추고 타당한 추론과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sup>24)</sup> 또한 토론 참여자들의 통일 교육 차원에서 정보 아카이브는 교육 콘텐츠 역할을 할 것이다. 피쉬킨과 러스킨의 ‘숙의 여론조사’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찬반 양론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토론에 참여한 후 이슈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졌으며 의견의 질 또한 높아졌다는 점이 발견되었다.<sup>25)</sup> 토론장에서 북한 지식 정보 아카이브는 토론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토론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과 조직이 함께 진화, 발전, 유지되게끔 만드는 창발성의 연료 역할을 할 것이다.

### 다.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은 주요 사안에 대해 경쟁하는 입장이 형성되고 토론이 활성화되었을 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문제를 자문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상시로 전문가가 대기하는 것은 비용이 막대하기에, 질문-응답을 역할할 수 있는 인공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쟁점, 주장, 이론 법령, 사례 등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담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센터’를 구상해 볼 수 있다.<sup>26)</sup> 이는 앞서 설명한 북한 지식 정보 아카이브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다. 질 좋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조직 차원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해석과 통합을 얻으며, 이는 공진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

---

23) 여기서 규제는 토론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토론 방식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

24) 상계서, p.150 참조

25) 상계서, p.149 참조

26) 상계서, p.163 참조

## 라. 온라인 공중 자문(Online Public Consultant)

온라인 공중 자문은 정부 정책과 의사 결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면서 국가 정책에 여론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공중 자문을 하면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공공 정책의 질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 사회적 합의란 특정 갈등 사안에 대한 찬반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굳어진 어떤 상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관련자의 숙의 결과에 따라 때로는 급격하게 때로는 미세하게 변화하는 조절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을 위해 모여든 시민들 하나하나의 의견은 중요한 현실 지표를 제공한다<sup>27)</sup>. 온라인 공중 자문은 정기적인 여론조사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 2. 복잡계 원리 적용 조직학습 메커니즘과 제안 정책 비교

다음 [표 5]는 앞서 제안한 <인터넷 국민광장>의 구성요소와 복잡계 원리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을 그 속성에 맞게 정리하였다.

[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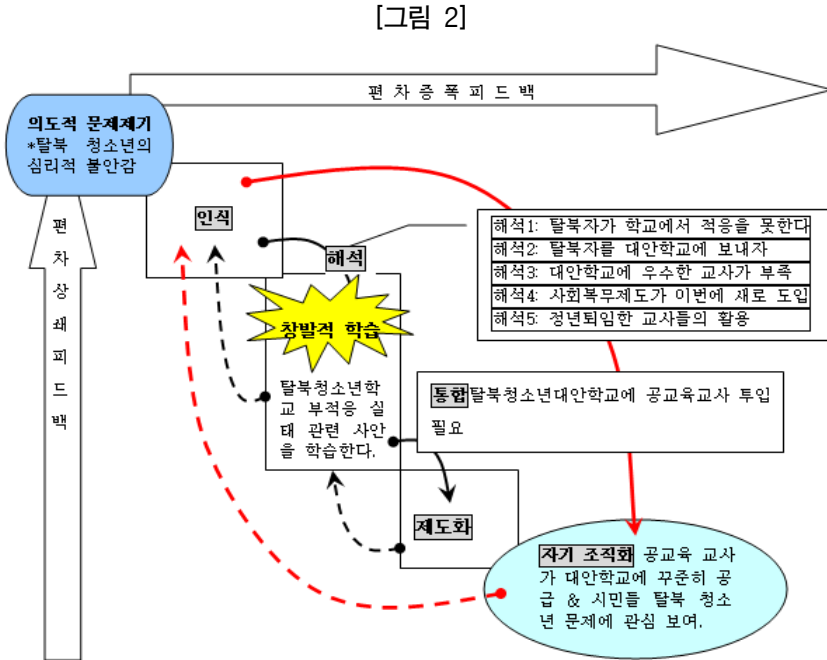
복잡계 원리 적용 조직학습		인터넷 국민광장	
조직학습과정	복잡계 원리	구성요소	특성
직관	초기 조건의 민감성	인터넷 토론 사이트 방문자	북한 관련 문제 인식
해석 및 통합	창발성	토론 참여 그룹	창발적 학습의 장
		북한 지식 정보 아카이브/전문가 시스템	토론에 필요한 북한 관련 정보 제공
		중재자	혼돈의 가장자리로 그룹 유도
제도화	자기조직화	정부, 국회, 행정부	토론 결과 정책에 반영, 통일 정책 비전 제시
피드백/ 피드포워드	편차증폭/ 편차상쇄피드백	인터넷 국민광장 시스템	통일교육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할 수 있는 IT 인프라

\* 복잡계 적용 조직학습 메커니즘과 정책<인터넷 국민광장> 비교 <sup>28)</sup>

27) 상계서, p.163 참조

### 3. 정책<인터넷 국민광장> 시뮬레이션

다음은 복잡계를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을 기반한 <인터넷 국민광장>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 시뮬레이션을 설정하였다. [그림 2].



\* '탈북 청소년 문제' 인터넷 토론 시뮬레이션

탈북자 청소년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부적응하고 있는 실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이 <인터넷 국민광장>에서 한 개인에 의해 '의도적 문제제기'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인터넷 토론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식'의 과정을 거치고 각자 이를 두고 해석을 할 것이다. 각 토론 참여자는 [그림 2]의 해석 1~5와 같이 다양한 토론 메시지를 개진한다. 각 해석들은 전문가 시스템과 북한 지식 정보 아카이브를 거쳐 견고해지고 중재자의 도움을 받으며 토론을 이어

28) 성다야(2008), “복잡계 원리를 적용한 자생적 조직학습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연구”, 위 표는 자생적 조직학습 메커니즘과 A사 지식 경영 비교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p.48 참조

나간다. 그러한 토론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탈북 청소년에게 대안학교가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이들에게 꾸준히 우수한 공교육 교사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된다. 이는 애초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이라는 문제 제기와는 다른 것으로 창발성을 가진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이 정부에 요구되고 ‘공교육 교사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투입’이 제도화된다. 이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사회 전반적으로 상향화시킬 것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한 만큼 질적으로 우수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게 되어 애초 제기된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문제와 학교 적응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4. 인터넷 통일 교육 차원의 전망

전쟁이나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젊은 세대에게 냉전 패러다임적 관념과 인식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sup>29)</sup> 붉은 악마의 길거리 응원을 주도한 젊은 세대들의 통일 의식 연구 결과를 보면, 민족 공동체 의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 스스로 통일 의식으로까지 연결시키며 아울러 그러한 의식을 기반으로 통일 의지를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0)</sup>고 한다.

또한 통일 교육을 어떤 매체를 통해 하는가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90% 이상이며, 인터넷 게시판 토론 인구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민의 대다수는 이미 인터넷 이용 효능감을 습득한 인터넷 이용자들<sup>31)</sup>이라고 할 수 있는

29) 현아영(2002), “붉은 악마 군단의 통일 의식 조사”, 통일부 제21회 대학생 통일논문현상공모 입선작, p.30 참조

30) 젊은 세대들은 길거리 응원에 동참하며 가장 크게 얻은 것으로 민족적 통합의 경험을 꼽았고, 특히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일수록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는 것, 게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일수록 통일에 관한 의지가 더욱 강하고, 이런 의지가 붉은 악마에 참여하기 이전에 비해 더욱 확고해졌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계서, pp.28-30 참조

31) 서문기 외(2006),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24

바, 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통일 교육의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광장 시스템에 구축에 대한 SWOT<sup>32)</sup> 분석이다. SWOT 분석표를 보면 갈등 해결 인프라를 구축할 시, 통일 교육으로서의 메리트와 보완해야 할 점을 볼 수 있다.

[표 6]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1위의 인터넷 광대역망 보유<sup>33)</sup></li> <li>• OECD 가입국 중 1위의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sup>34)</sup></li> <li>• 정치적 민주화 성공</li> <li>• 월드컵, 촛불시위를 계기로 참여문화의 확대 정착</li> <li>•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참여 형태 존재 (블로그, 인터넷 토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수준의 토론 문화</li> <li>• 낮은 온라인 문화 수준</li> <li>• 남남 갈등 심각 / 사회적 합의 어려움</li> <li>• 정치에 대한 불신감 팽배</li> <li>• 시민단체의 순수성, 자립도 미흡</li> <li>• 배타적, 투쟁적 시민운동</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토론에 대한 호응이 높을 가능성과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음</li> <li>• 온라인상의 통일 교육으로 이용됨으로써 사회 차원의 통일 의식함양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세력에 의해 조정되고 편향된 담론이 형성될 위험이 있음</li> </ul>

\* 정책<인터넷 국민광장>의 SWOT분석

32) SWOT 분석은 주로 기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

33) 2008년 5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광대역망은 15.92점으로 프랑스(11.59점), 스위스(10.78점)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금융컨버전스 시대] <3>판매채널의 진화”, 인터넷한국일보, 2008년 8월 19일

34) 세계 최고 IT 강국답게 이동통신 가입자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498만이나 되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도 1,506만명에 이른다. 가입률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은 2005년 기준 9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건국 60주년] GDP 736배 증가 ‘한강의 기적’ 실감”, 이투데이, 2008년 8월 14일

## IV.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 1. 플레이밍에 대한 다차원적 정책

정책<인터넷 국민광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서 조사한 플레이밍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 조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추진을 통해 익명성 주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막으려 하지만, 제한적 본인 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여전히 명예훼손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볼 때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해소시킬 궁극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댓글 게시판 구조 및 운영 지침 개편을 통해 한 달만에 욕설 등 삭제 대상 악성 댓글의 비율이 하루 평균 11%에서 6%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듯이, 이처럼 플레이밍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 이상의 다차원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sup>35)</sup>

### 2. 디지털 포퓰리즘(Digital Populism)<sup>36)</sup> 방지 대책

현재 한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사소통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인터넷의 특성인 쌍방향성과 개방성을 활용한 공론 형성보다는 정보 생산자의 일방적인 선전과 홍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공중이 토론을 통해 공공선에 입각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져 내린 숙의(熟議)가 아니라 선동과 동원이 횡행하는 디지털 포퓰리즘<sup>37)</sup>

35)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문화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미래사회전략팀, p.125 참조

36) 일반 대중의 인기ye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이다. 네이버 백과사전(검색어 : 포퓰리즘)

37) 2000년대 초에 국내 인터넷 매체와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토론 공간을 분석한 자료에는 일반인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며, 이는 사이버 공론장의 의제 설정을 국가, 시장, 매스미디어가 좌우할 공산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방향 탐색”, 이종구(200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pp.11-12 참조



의 결과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규제와 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양적으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sup>38)</sup>

## V. 결 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 내부의 이견과 갈등은 남북관계 발전과 정비례하여 현재화하고 있다. 퍼주기 논쟁 속의 대북 지원이 상징하듯 남북관계는 정쟁화의 구도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보·혁 진영간 대립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북 정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초래함과 아울러 대북 정책의 추진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sup>39)</sup>. 사회적 갈등은 좁혀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주장 글 가득한 인터넷 토론장을 통해서도 그 깊은 골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통일 문제 토론은 플레이밍, 근거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는 통일부의 의견 수렴 인프라가 홈페이지에 구성되어 있었지만 네티즌들에게 제대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 담론에 뛰어 드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시민들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인터넷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들은 그것들이 모이면, 창발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통일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잡계 원리를 적용시킨 조직학습 메커니즘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복잡도를 혼돈의 가장자리로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중재자, 북한 지식 정보 아카이브, 전문가

38) 초기 포털 다음의 아고라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의 장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수가 논의를 주도했다. 인터넷 시장조사기관 메트릭스의 분석 결과 3.3%가 쓴 글이 전체 게시물 50%를 차지했을 정도였다. “[춧불100일] 톨레랑스 부재, 디지털 폭력만 남아”, 머니투데이, 2008년 8월 13일

39) 조한범(2006),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p.3 참조

시스템, 온라인 공중 자문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렇게 인터넷 토론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배치시킨다면 통일관, 북한관의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국민들이 건전한 통일관을 공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북한을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이 같은 노력은 이 시대 한반도가 안고 있는 숙명적인 과제인 통일을 향한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사회통합을 얻을 것이다.

##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갑식(2002), “햇볕정책과 지식인 : 신문 기고문 내용분석”, 『統一問題研究』 제14권 제2호 통권38호 (2002. 1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287-310
- 김갑식(2007), “한국사회 남남갈등 :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제2호 통권 제57호(2007년 여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31-59
- 김국신 외(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 2』, 한울
- 김문조(2005), 『IT와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은미 외(2004),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과 합의 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나경애(2006), “인터넷 게시판 토론에서 익명성 여부가 토론 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현(2008), “복잡계 속 웹기반 지식생태계 창조를 통한 지식의 생산성 향상 방안”,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제2회 생산성혁신 대학(원)생 논문 공모 당선작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7), 『제12기 정책건의 종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박철정(2006),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성격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2005), 『네트워크 사회의 인간관계와 사회심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변중현(2006),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國民倫理研究』 제 61호 (2006. 4), 韓國國民倫理學會, pp.343-366
- 서문기 외(2006),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성다야 외(2006),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조직학습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제1회 복잡계 컨퍼런스 발표 논문
- 성다야(2008), “복잡계 원리를 적용한 자생적 조직학습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만(2006), “‘단순한’ 학습의 ‘복잡성’: 복잡성 과학에 비추어 본 학습복잡계 구성과 원리”, 『Andragogy Today :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vol.9 no.2 (2006. 5), 한국성인교육학회, pp.53-96
- 유재연(2004), 『차이의 경영으로의 초대』, 삼성경제연구소
- 이재열 외(2005), 『새로운 조직 패러다임의 특성과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종구(2007),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방향 탐색』,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장수덕(2008), “조직학습, 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성과간의 관계”, 『인적자원관리 연구』, 제15권 제1호 (2008년 3월),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pp.153-172
- 전병유 외(2007),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현 외(1999), “복잡성이론의 조직환경연구에 대한 적용가능성”, 『한국행정논집』, 한국정부학회 (구 대구경북행정학회)
- 조한범(2006),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추병완(2007),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 한국전산원(2004), 『e-Governance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전략』,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문화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미래사회전략팀
- 현아영(2002), “붉은 악마 군단의 통일 의식 조사”, 통일부 제21회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통일부
- 홍윤기(2005),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국가와 민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영문 자료]

- Albrecht, Steffen(2006), “Whose Voice is Heard in Online Deliberation? : A Study of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political debates on the internet.”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9(1) : 62-82.
- Arthur, W. B.(1999). Complexity and economy. Science.
- Coleman, Stephen and Gotze, John(2001), Bowling Together : Online Public Engagement for Policy Deliberation. London : Handard Society.
- Crossan, M. M., Lane, H. W. & White, R. E(1999), An organizational learning framework : from intuition to institu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 Espejo, R., Schuhmann, W., Schwaninger, M., & Biello, U(1996),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and learning : cybernetic approach to management. New York, NY : John Wiley & Sons.
- Fishkin, J. S.(2003), “Deliberative polling : Toward a better-informed democracy” <http://cdd.stanford.edu/polls/docs/summary>
- Fishkin, J. S., & Luskin, R. C(1999), “Bring Deliberation to the democratic dialogue.” in Maxwell McCombs and Amy Reynolds, (eds.), The poll with a Human face : The National Issues Convention Experiment in Political Communication. pp.3-38. Mahwah, N.J. : Lawrence E. Erlbaum.
- Fishkin, J. S., & Luskin, R. C.(2005), “Experimenting with a Democratic Ideal :

- Deliberative Polling and public opinion” ub *Acta politica* 40 : 284—98
- Kauffman, S(1993), *The origin of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 Mainzer, K(2005), *Thinking in Complexity : The Complex Dynamics of Matter, Mind, and Mankind*, 4th edn., Berlin : Springer.
- Noveck, Beth(2004), “Unchat : Democratic Solution for a Wired World.” pp.21—34 in *Democracy Online : The prospects for Political Renewal Though the Internet*. edited by p.Shane. New York : Routledge.
- Waldrop.M(1992), *Complexity : the emerging science at the edge of chaos*. NY : Simon & Schuster.

[인터넷 등 기타]

[www.nis.go.kr](http://www.nis.go.kr)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www.daum.net](http://www.daum.net)

[www.naver.com](http://www.naver.com)

[www.dailynk.com](http://www.dailynk.com)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81211045023207&outlink=1>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130240>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8/e2008081917085070100.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104684>

〈 장 려 〉

#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검토

- 경제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화학과 4학년 김홍근

##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 III. 남북 경제협력의 경제모델
- IV. 실증분석 및 검토
- V.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 【요약문】

##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검토 - 경제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

‘7.7’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20년째이다. 그 동안 남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교류를 행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의 교류는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3대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경협사업의 추진 등을 시도하며 활기를 띄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주성환(2002, 2007), 주성환·김진수(2006), 김진수(2007) 등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간단한 경제모델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역(또는 무역)에 관계된 기존의 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교역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 교역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으로 헉셔-오린 모형과 Polachek 모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헉셔-오린 모형은 이국간의 자유무역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고, Polachek 모형은 양국간의 무역이 분쟁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모형들은 적용에 부적합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모델은 기본적으로 Polachek 모형을 확대·응용한 형태이다. 남한의 사회후생 함수를 총소비수준, 갈등수준, 통일비용수준의 함수로 놓고 남북간의 교역이 갈등수준과 통일비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이국경제 및 자유무역, 합리성, 정치의 불변성 등을 가정하고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갈등수준과 통일비용수준의 방정식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 식을 각각 반출량과 반입량을 변수로 하여

전미분하여 연립방정식을 풀이함으로써 반출입량과 갈등수준, 반출입량과 통일비용수준이 각각 역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그 후 이러한 이론적 경제모델의 적합성과 도출한 결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행한다. 실증분석은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2000년 이후의 분기별 자료를 기점으로 하여, 분기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정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경제모델의 적합성은 총소비수준과 사회후생수준의 관계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이지만,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과 사회후생수준의 관계는 유의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출입량과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의 관계의 경우에는 반출량과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의 관계는 이론적 결과와 일치하며 상당한 정도의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입량과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의 관계는 이론적 결과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유의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는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의 실증분석의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자료의 문제에 의한 요인과 모형의 문제에 의한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자료의 문제의 경우는 주로 사회후생수준, 갈등수준, 통일비용수준을 추정함에 있어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 데이터의 부족으로 추정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모형의 문제의 경우는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에서 나타나는 점들을 지적하는데, 자유로운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입량과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결과의 근거로, 합리성의 원칙과 정치 불변성 가정의 파괴는 경제모델의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지적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장차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후행 연구는 본 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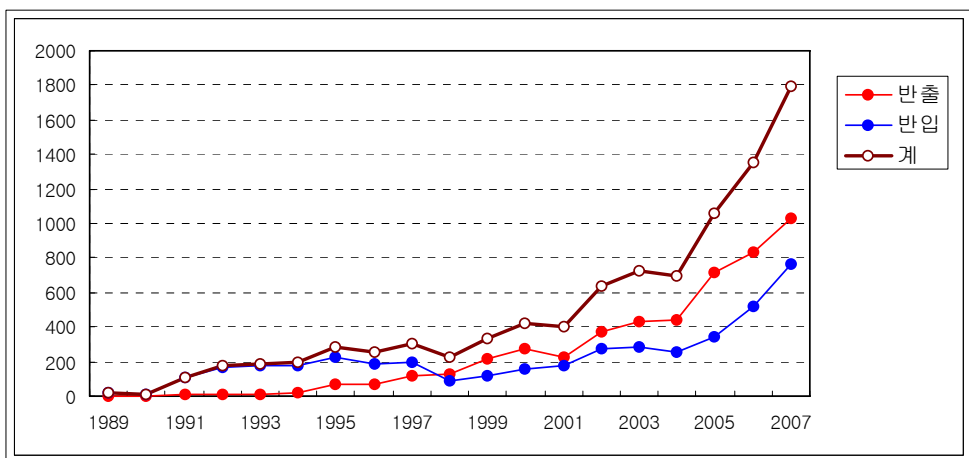
## I. 서론

분단을 넘어 남한과 북한이 모든 부분에 걸쳐 교류할 것을 선언한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20년째이다. 20년의 시간 동안 북한 핵문제, 서해교전 사건 및 최근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같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특히 남북 경제협력의 뚜렷한 증가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의 남북교역은 반출이 약 10억 3,200만 달러, 반입이 약 7억 6,500만 달러로 총계 약 17억 9,700만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는 ‘7.7선언’의 이듬해인 1989년의 교역 규모 1,900만 달러의 약 95배에 이르는 수치로서 실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비약적인 남북교역 규모의 증가는 점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림 1] 남북교역 규모의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통일부, “2008 통일백서”, 2008, p.116

이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 3대 경제협업의 영향력을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는 실질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하여, 정부는 이것이 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병행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산가족과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기반 조성을 이루고자 한다.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은 ‘사실상의 통일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논의의 이론적 타당성 검토 및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III장에서 남북 경제협력도 일종의 무역행위라는 전제하에 그 편익을 검토하는 경제학적 모형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현실에 적합한 간단한 경제모형을 세워 이론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타당성을 증명할 것이다. IV장에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이론적 모형의 활용 가능성 및 보완점 등을 제시하고, V장에서는 향후과제 및 시사점을 논한다.

## II.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 1. 남북 경제협력의 개관

#### 1) 정 의

이석기(2006)는 남북 경제협력을 민간기업의 상업적 베이스의 물자교역,

임가공, 투자사업,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 그리고 정부와 비정부 단체의 인도적 지원사업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인도적 지원 사업은 주고 받는다는 경제적 계산이 배제된 일방적인 지원으로 ‘경제협력’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약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자원 이동이 수반된다는 점, 북한경제 및 남북간의 정치·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영훈(2006)은 남북 경제협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그 정의와 포괄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남북 경제협력의 구성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혼동과 오해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남북간의 무역, 투자 및 지원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이 세 가지 범주의 물자 이동을 남북교역으로 정의하였다. 즉 물자 이동 및 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남북 경제협력과 물자 이동만 의미하는 남북교역의 의미를 구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남북간의 무역, 투자, 지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남북한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반드시 정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남북 경제협력은 단순한 교역 및 교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정치·경제적 수렴(convergence)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목적 의식을 가진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남북교역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경제협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유·무형의 자원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역의 결과가 필요하며,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교역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2) 의 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경제협력은 분단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활동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역활동(또는 무역활동)이

갖는 의의와 함께 특별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첫째, 남북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교역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무역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우선 남한의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외국의 투자 유치, 신용 등급 향상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생산 및 관리 노하우를 전수받음으로써 경제 회생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전적 경제학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해 상생(Win-Win)하는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들은 북한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 사업 추진을 위해 직통 육로 및 해로가 개통되어 제3국을 통한 입국을 필요없게 만들었다는 점, 비무장지대의 일부를 남북 양측의 관리에 들어가게 하여 부분적이거나 안보 문제를 민족화시켰다는 점 등에서 정치·군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 경제협력은 정치·군사적인 대립 완화라는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셋째,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 인프라 재건 지출, 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지출, 사회보장성 지출, 임의 기부금 지출, 기타 지출<sup>1)</sup> 등의 비용을 통일 후에 지불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은 구동독의 비효율성 잔존, 노동 생산성 차이로 인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파괴, 구서독의 발전된 사회보장제도의 평등한 적용 등으로 인해 당

1) 독일 통일 비용의 각 부분별 내역

- 인프라 재건 지출 : 도로·철로·수로 개선, 자치단체 교통, 주택, 도시건설 개선 등 지원
- 경제 활성화 지원 지출 :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구조 및 해안 보전, 투자보조, 이자보조, 전철 등 근거리 교통 보조
- 사회보장성 지출 : 연금, 노동시장 보조, 육아보조, 교육보조
- 임의기부금 지출 : 독일 통일기금, 판매세 보조, 주 재정 균형 조정, 연방 보조 지급금
- 기타 지출 : 인건비 및 국방비 지출

(김창권, “독일 통일 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2005년 겨울호, 현대경제연구원, 2005, p.69)

초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독일의 통일비용 증폭사례는 잘못된 경제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sup>2)</sup> 하지만 통일 전 서독보다 현재 남한의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돕고 북한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을 늘리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미래의 통일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후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 활력 감소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통일비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는 측면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 과정<sup>3)</sup>

### 1) 1단계(1989년~1999년)

이 시기 남북 경제협력의 특징은 민간차원의 교역, 소규모 투자로 정리할 수 있다.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으므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했지만, 동구권의 급격한 변혁 등으로 인해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끼던 북한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남북 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변명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과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같은 해 10월에 발표한 ‘남북 경제개방조치’를 통해 시작되었다. 1990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북한과의 교역 및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합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1991년 12월에는 남북한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서명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이 공

2) 김창권, “독일 통일 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2005년 겨울호, 현대경제연구원, 2005, pp.74~75

3) 추진 과정은 통일부에서 발간한 “2005 남북교류협력 동향” 종합보고서의 기준에 따라 “2008 통일문제이해”(통일부),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통일부 통일연구원) 각 연차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분류·정리하였다.

고히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sup>4)</sup>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일시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같은 해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제1차)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소규모의 시범적인 경제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4월에 대기업 총수의 방북 허용, 1회 100만 달러까지의 생산설비 반출 제한 폐지, 대북 투자규모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제2차)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11월에는 금강산 관광 등 민간부분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1999년 10월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대북 투자, 반출입, 위탁가공 교역에 대한 기금 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유상 대출 지원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남북 경제협력은 이후의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 2) 2단계(2000년~2005년)

이 시기의 남북 경제협력은 3대 경협사업(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추진 및 인도적 지원의 본격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은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쌍방의 의지와 비전을 공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다.

이 시기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2000년 6월에 발표된 『6.15 남북공동 선언』이다. 남북 관계에 평화와 공존의 기틀을 마련한 이 합의문은 제4항에서 경제협력 및 교류의 활성화를 약속하여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한 다짐을 확고히 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각종 당국간 회담에서 남북한 경제

4) 제3장(제15조~제23조)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이러한 제3장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현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이후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들은 2002년 7월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2002년 7월부터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착공 및 노반 공사가 이루어졌다. 북한도 ‘개성공업지구’ 지정 및 ‘개성공업지구법’의 채택,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및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채택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2003년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등 북한 핵문제로 전반적인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증가했으며,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식과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가 이루어져, 남북 경제협력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6자회담의 성과 미약, 김일성 10주기 조문 문제, 북한 인권법 미 하원 통과, 탈북자 대규모 입국 등의 악재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3대 경협사업을 제외한 새로운 사업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였고 기존의 사업 운영조차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2005년 5월에 개정하여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일부 교류협력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개성공단에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를 개소하였고, 11월에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진전 못지않게 실질적 진전도 나타났는데, 상업적 거래와 대북 관계 개선에 따른 대북 지원 확대 증가 등이 그것이다.

### 3) 3단계(2006년~)

이 시기의 남북 경제협력의 특징은 3대 경협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발전, 신경협사업 추진 및 SOC 협력 모색을 통한 발전적인 남북관계 형성을 들 수 있다. 3대 경협사업의 경우 2006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의 정치적 악재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

는 개성공단의 1단계 2차 단지를 분양하였고, 열차 시험운행과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정기운행이 성사되었으며, 내금강 관광 코스가 확대되는 등 3대 경협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2007년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최근에는 신경협사업의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사업 실시를 합의하였고, 하반기에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남북경협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추후 남북 경제협력은 발전적 관계 형성을 위한 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3.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

앞서 [그림 1]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남북교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교역 유형별로 분류하면 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공업 협력 등을 포함하는 경제협력, 정부와 민간의 지원, 사회문화협력, 경수로사업을 포함하는 비상업적 거래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 1] 유형별 남북 교역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남북교역 유형	2004	2005	2006	2007
반입	일반교역·위탁가공	258	320	441	645
	경제협력	0	20	77	120
	비상업적 거래	0	0	1	0
	반입 합계	258	340	520	765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89	100	116	145
	경제협력	89	250	294	520
	비상업적 거래	261	366	421	367
	반출 합계	439	715	830	1032
남북간 실질교역 수지 (경제협력, 비상업적 거래 제외)		-168	-221	-326	-500

\*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종합), 2007, p.169



[표 1]을 살펴보면 남북교역 유형 중 상업적 거래에 해당하는 일반교역·위탁가공, 경제협력은 반입과 반출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역액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기준으로 79.6%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일반교역 부분의 반입은 섬유류 24.9%, 농림·수산물 24.1%, 철강·금속 제품 21.7%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반출은 섬유류 20.7%, 화학공업제품 19.7%, 농림·수산물 13.3% 등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2007년 현재 89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섬유류의 위탁가공이 8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역 품목의 수는 개성공단에서 657개, 일반교역이 293개, 위탁가공교역이 166개로 총 853개이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2005년 11개 기업이 입주하여 1,491만 달러의 생산을 보였으나, 2007년에는 65개 기업이 1억 8,478만 달러를 생산하여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북측근로자 고용에 있어서도 2005년 7,621명에 비해 2007년에는 약 3배정도 늘어난 22,804명을 고용하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4년 정상화된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북 지원은 정부차원의 무상지원과 식량차관, 민간차원의 무상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6년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일시적으로 유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02년 이후 매년 3,000억원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분야별 무상지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정부 차원	무상지원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96	2,159	11,318
	식량차관	1,057	—	1,510	1,510	1,359	1,787	—	1,649	8,872
	계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96	3,808	20,190
민간차원(무상)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20	6,477
총액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3,005	4,728	26,667

\* 주 : 1) 민간에 대한 기금 지원액(814억원)은 정부차원 지원액에 포함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 (종합), 2007, p.172

## 4.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경제협력은 1989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와 중요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영향으로 전술한 것과 같은 한반도 긴장 완화, 통일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길 것이다. 이하에서는 실증 분석에 교역활동에 관계된 기존의 경제학적 모형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여 그 이론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한다.

# Ⅲ. 남북 경제협력의 경제모델

## 1. 기존의 연구

남북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이국간의 무역’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역의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헉셔-오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과 Polachek 모형을 통해 무역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 1) 헉셔-오린 모형<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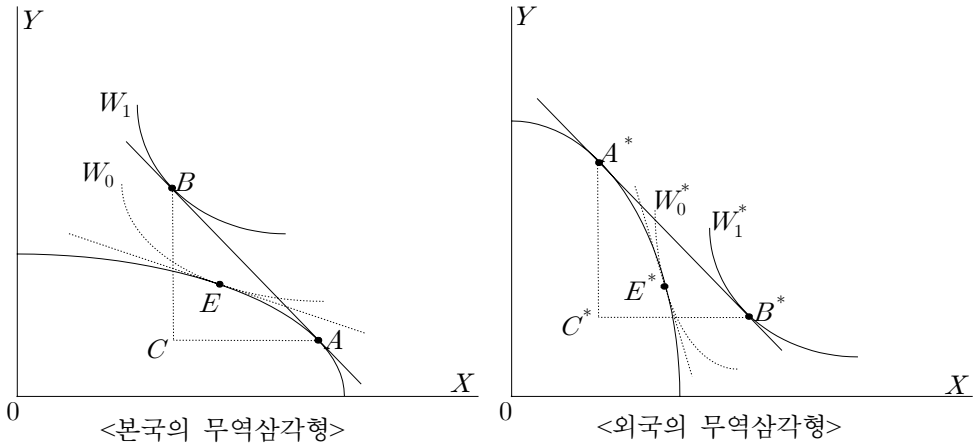
#### 가. 모형의 전개

헉셔-오린 모형은 ① 2국 2생산요소 2재화의 완전경쟁시장경제, ② 생산 기술의 동일성 및 1차 동차성, ③ 상이한 요소 부존량, ④ 국가내 생산요소 이동의 완전 자유성, ⑤ 국가간 생산요소 이동의 불가능성, ⑥ 사회후생함수의 동일성 및 동조성을 가정한다. 이를 이용하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니게 되어 무역이 발생한다는 헉셔-오린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

---

5) 김인준·이영섭, 『국제경제론』(제5판), 다산출판사, 2007, pp.460~474

[그림 2] 자유무역의 효과



헷서-오린 모형하에서 자유무역이 일어날 경우의 국제균형상대가격은 양국의 무역 전 상대가격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교환경제모형이나 리카도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오퍼곡선의 교점과 원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이제 본국은 노동이 풍부하여 헷서-오린 정리에 의해 노동집약적인 X재 생산에 특화되어 있고, 외국은 자본이 풍부하여 자본집약적인 Y재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유무역이 일어나게 되면 본국에서는 X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고 외국에서는 X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그림 2]와 같이 실직선의 동일한 국제균형상대가격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본국은 A점에서 생산하여 B점에서 소비를 할 것이므로 AC만큼 X재를 수출하고, BC만큼 Y재를 수입하여야 한다. 동일하게 외국도 A\*점에서 생산하여 B\*점에서 소비를 하므로 A\*C\*만큼 Y재를 수출하고, B\*C\*만큼 X재를 수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국경제를 가정하였으므로 본국의 수출량은 외국의 수입량과, 본국의 수입량은 외국의 수출량과 일치하여 양국의 무역 삼각형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triangle ABC \equiv \triangle A^*B^*C^*$$

사회후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국의 경우 자유무역 이전에는  $W_0$ 의 사회후생을 누렸으나 자유무역 이후에는  $W_1$ 의 사회후생을 누리므로 사회후생수준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경우에도  $W_0^*$ 에서  $W_1^*$ 으로 사회후생수준이 증가한다.<sup>6)</sup>

이와 같이 핵서-오린 모형은 자유무역의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게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 나. 적용과 한계

그러나 핵서-오린 모형을 남북 경제협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첫째, 핵서-오린 모형에서 가정하는 자유무역이 남북 경제협력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현재 남북 경제협력의 양상은 남북한의 비대칭적인 자본축적 정도, 교육 및 기술 수준, 노동생산성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남북 경제협력이 진전되면서 점차 일방적인 지원은 완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무역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핵서-오린 모형에서 가정하는 사회후생에는 긴장 상태 완화, 통일비용의 감소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자유무역의 이익을 무역에 의한 경제적인 측면의 이익으로만 판단하고 있을 뿐, 정치적·사회적인 측면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적 후생의 증가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 통일비용 감소 등의 목적을 가지는 남북 경제협력은 핵서-오린 모형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셋째, 만약에 남북 경제협력이 핵서-오린 모형에 의해 잘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무역이 후생 증가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잘 실시되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 정책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며, 최근

6) 무역에 의한 후생증가는 크게 교환효과와 생산효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교환효과는 상대가격 변화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을 의미하며, 생산효과는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교환효과는 다시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나눌 수 있으므로, 후생 증가의 정도는 이 세 가지 효과의 영향에 좌우된다.

4년간(2003년~2007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sup>7)</sup> 추이는 오히려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증가 및 위화감 조성, 사회통합 저해 등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소들이 크게 부각되는 바 사회후생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2) Polachek 모형<sup>8)</sup>

### 가. 모형의 전개

Polachek의 무역과 분쟁에 관한 기대 모형은 ①합리적인 국가, ②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의 불변, ③분쟁과 협력은 동일한 효용함수에서 도출을 가정한 모형이다. 이 이론은 앞서 설명한 핵서-오린 모형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 자발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무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각 국가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실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 실시에 앞서 기대효용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 때 기대효용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실되는 사회후생(잠재적 무역 손실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이 포함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국가는 중요한 무역상대국과의 분쟁 발생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W$ 를 사회후생,  $Z$ 를 분쟁수준,  $C$ 를 총재화 소비수준,  $x_i$ 를  $i$ 국가로의 수출 재화,  $m_i$ 를  $i$ 국가로부터의 수입재화,  $P_{x_i}$ 를  $x_i$ 의 수출 재화가격,  $P_{m_i}$ 를  $m_i$ 의 수입 재화가격이라고 하면 행위국가(actor country)의 사회후생 극대화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underset{Z}{Max} \quad W = W(Z, C) \quad s.t. \quad \sum P_{x_i} \cdot x_i - \sum P_{m_i} \cdot m_i = 0$$

7) 지니계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불평등 지수로서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되면 0,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어 완전 불균등 분배가 이루어지면 1이 된다. 지니계수의 도출은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G = \frac{\Delta}{2\mu} \quad (\text{단, } \Delta = \frac{1}{n(n-1)} \sum \sum |y_i - y_j|, \quad \mu = \text{평균소득, } n = \text{전체인구})$$

8) Polachek 모형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Polachek 모형을 바탕으로 주성환(2007)이 재구성한 모형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성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교역의 이론적 조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7’ 참고

행위국가의 총재화 소비 수준은 국내에서 생산된 소비( $q$ )와 교역국가로부터의 수입 재화의 합( $\Sigma m_i$ )에서 교역국가로의 수출 재화의 합( $\Sigma x_i$ )을 빼면 된다. 여기에 사회후생함수의 일반적인 원칙인 한계효용체감(diminishing marginal utility)의 가정을 추가한다. 그리고  $i$ 국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i$ 국가로 수출하는 재화의 수출가격은 떨어지고,  $i$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가격은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무역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을 더한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다음의 여섯 개의 부등식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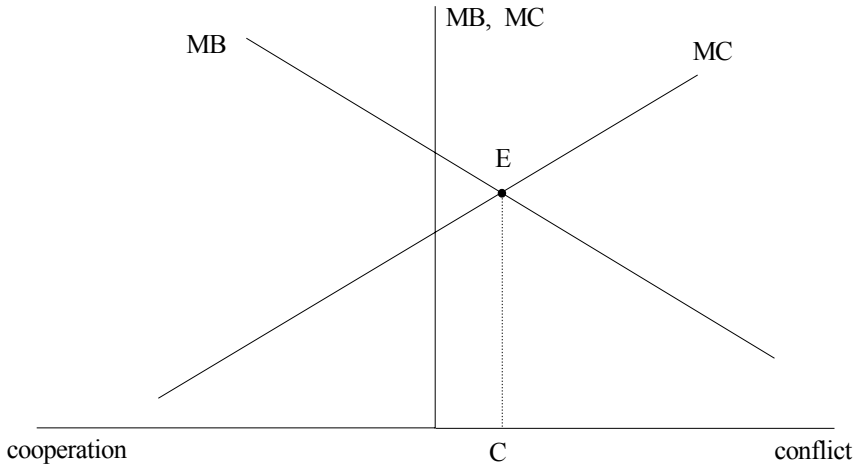
$$\begin{aligned} W_C &> 0, W_{CC} < 0 \\ W_Z &> 0, W_{ZZ} < 0^9) \\ P_{x_i}'(Z) &< 0, P_{m_i}'(Z) > 0 \end{aligned}$$

이 조건을 이용하여 위의 효용극대화식을 풀면  $\frac{\partial Z_i}{\partial x_i} < 0$ ,  $\frac{\partial Z_i}{\partial m_i} < 0$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역과 분쟁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행위국가의 사회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위국가의 최적분쟁수준은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분쟁으로부터 얻는 한계편익(MB)과 한계비용(MC)을 통해 얻어진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행위국가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교점인 C에서 최적분쟁수준을 결정한다.

9)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쟁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 하면 행위국가의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면 합리적인 국가가 분쟁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과 같이 높은 수준의 분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W_Z < 0$ 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나, 모형에서는 이러한 요소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 최적분쟁수준의 결정



#### 나. 적용과 한계

주성환(2007)은 그의 연구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Polachek 모형이 다음의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남북교역 수준의 증가는 북한의 대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상당한 수준의 교역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대남 분쟁 증가에 대해서는 교역비용 증가를, 북한의 대남 분쟁 감소에 대해서는 교역비용의 감소를 유인하는 조건부 교역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은 현시점에서의 교역수준과 분쟁수준의 최적화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Polachek 모형을 남북한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전술한 것과 같이 남북교역은 일반적인 교역활동과 달리 장기적인 시각에서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시점에서 분단비용 및 통일비용 등을 감소시켜서 사회후생 손실을 막는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Polachek 모형은 그러한 요인은 고려 대상에 넣고 있지 않으므로 남북관계를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서도 Polachek 모형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무

역의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이라는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현실 설명력을 높인 점에서는 분명히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국가가 미래를 고려하는 경우 분쟁이 사회후생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왜냐 하면 분쟁이 단기적으로는 행위국가의 사회후생수준을 증가시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무역상대국과의 신뢰 손실로 인한 사회후생수준의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10)</sup> 즉, 분쟁 수준의 정도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국가는  $W_{\frac{1}{2}} < 0$ 을 현실적으로 고려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새로운 경제모델의 도입

### 1) 모형의 설정

이와 같이 핵서-오린 모형과 Polachek 모형은 남북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가정에 기초한다.<sup>11)</sup>

- (가정 1) 남북한만 존재하고 두 재화를 자유롭게 거래(2국 2재화)하며 남북한은 합리적인 경제주체이다.
- (가정 2) 남북한의 정치 및 국제정치를 비롯한 나머지 요소는 불변이다.
- (가정 3) 분쟁과 협력은 동일한 효용함수에서 도출된다.
- (가정 4) 남한의 사회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총소비 수준과 갈등수준, 동일비용 수준은 독립적으로 사회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10) 예를 들어 행위국가가 분쟁을 통해  $T-1$ 기까지 매기  $P$ 의 이익을 얻고,  $T$ 기부터는 매기  $D$ 의 손해를 영원히 입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일정한 이자율  $r$ 에 의해 이익과 손해가 할인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행위국가의 사회후생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P \cdot \frac{1 - \left(\frac{1}{1+r}\right)^T}{1 - \frac{1}{1+r}} < D \cdot \frac{\left(\frac{1}{1+r}\right)^T}{1 - \frac{1}{1+r}}$$

11) 새로운 모형은 기본적으로 Polachek 모형에 변수를 추가하여 확대·적용한 모형이다. 그러므로 Polachek 모형의 기본 가정이 기초가 될 것이다((가정 1)부터 (가정 3)).



(가정 5) 반출가격 및 반입가격은 각각 갈등수준과 통일비용수준의 일차함수이며 그 선형 결합(linear combination)으로 나타난다.

남북한과 같이 분단국가에 있어서 본국의 사회후생수준은 그 국가가 누리는 총소비수준( $C$ )과 갈등수준( $Z$ ), 그리고 통일비용수준( $U$ )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다음의 (식 1)과 같은 사회후생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식 1) \quad W = W(C, Z, U)$$

$$(식 2-1) \quad \text{First-order} \quad : W_C > 0, W_Z < 0, W_U < 0$$

$$(식 2-2) \quad \text{Second-order} \quad : W_{CC} < 0, W_{ZZ} < 0, W_{UU} < 0$$

$$(식 2-3) \quad \text{Cross factor} \quad : W_{CZ} < 0, W_{ZU} > 0, W_{UC} < 0$$

위의 (식 2-1)부터 (식 2-3)은 사회후생함수가 갖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아래 첨자는 각 요인에 의한 편미분을 의미한다. 먼저 (식 2-1)은 일계조건(First-order condition)으로서 각 요인이 사회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총소비 수준의 증가는 사회후생수준을 증가시키지만 갈등수준과 통일비용수준의 증가는 사회후생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2-2)는 이계조건(Second-order condition)으로서 사회후생함수의 한계효용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요소에 대해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식 2-3)은 각 요인에 의해 교차되어 미분된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가정 4)에 의해 각 요인은 독립적으로 사회후생함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계조건의 곱과 동일한 부호가 됨을 알 수 있다.<sup>12)</sup>

총소비수준  $C$ 는 국내에서 생산된 총소비  $q$ , 반출량  $X$ , 반입량  $M$ 에 의해 결정되며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2) 상황에 따라서 각 변수가 독립적이라는 말은 교차미분의 값이 0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등이 존재하여 편미분시 다른 변수에 대해서 전미분을 행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독립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식 3) \quad C = q + M - X$$

$$\left( \frac{\partial C}{\partial M} = 1, \frac{\partial C}{\partial X} = -1 \right)$$

사회후생함수 극대화를 위한 남한의 제약식(constraint)은 장기무역수지의 균형조건으로서 (식 4)와 같이 쓸 수 있다.

$$(식 4) \quad XP^X - MP^M = 0$$

이때 갈등수준이 증가하면 남한의 반출가격은 낮아지고 반입가격은 높아져서 경제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통일비용수준이 증가하면 합리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한 남한은 통일비용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를 남북 경제협력의 과정에 적용하면, 반출가격은 높이고 반입가격은 낮추어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 통일비용수준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갈등수준과 마찬가지로 통일비용수준이 증가하면 반출가격은 낮아지고 반입가격은 높아진다. 또한 (가정 5)에 의해 반출가격 및 반입가격에 대한 일계미분의 값은 상수가 됨을 알 수 있고,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므로 이계미분 및 교차미분의 값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식 5-1) \quad P_Z^X < 0, P_U^X < 0$$

$$P_{ZZ}^M = P_{UU}^M = P_{ZU}^M = 0$$

$$(식 5-2) \quad P_Z^M > 0, P_U^M > 0$$

$$P_{ZZ}^X = P_{UU}^X = P_{ZU}^X = 0$$

## 2) 모형의 전개

남한은 사회후생수준의 극대화를 위해 (식 1)의 사회후생함수를 (식 4)의 제약조건하에서 최적의  $Z$ ,  $U$ 를 도출하려고 할 것이다.

$$(식 6) \quad \underset{Z, U}{Max} \quad W = W(C, Z, U) \quad s.t. \quad XP^X - MP^M = 0$$

13) 예를 들어 반출가격은  $P^X = -Z - U$ , 반입가격은  $P^M = Z + U$ 와 같이 표현하면 (가정 5)와 주어진 서술에 맞는 가격함수가 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회후생함수 극대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라그랑제 승수법(The Method of Lagrange Multiplier)을 사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Lagrangian을 작성하면 다음의 (식 7)과 같다.

$$(식 7) \quad L = W(C, Z, U) + \lambda(XP^X - MP^M)$$

목표변수를  $Z$ 와  $U$ 로 설정하였으므로, (식 7)을 각각  $Z$ ,  $U$ ,  $\lambda$ 로 편미분하여 일계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식 8) \quad \frac{\partial L}{\partial Z} = W_Z + \lambda(XP_Z^X - MP_Z^M) = 0$$

$$(식 9) \quad \frac{\partial L}{\partial U} = W_U + \lambda(XP_U^X - MP_U^M) = 0$$

$$(식 10) \quad \frac{\partial L}{\partial \lambda} = XP_Z^X - MP_Z^M = 0$$

이제 (식 8)과 (식 9)를 바탕으로 갈등수준과 반출입량, 통일비용수준과 반출입량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과 반출량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식 8)과 (식 9)를 반출량  $X$ 에 대하여 전미분(total differentiation)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식 8-1) \quad \frac{\partial C}{\partial X} W_{ZC} + \frac{\partial Z}{\partial X} W_{ZZ} + \frac{\partial U}{\partial X} W_{ZU} + \lambda P_Z^X = 0$$

$$(식 9-1) \quad \frac{\partial C}{\partial X} W_{UC} + \frac{\partial Z}{\partial X} W_{UZ} + \frac{\partial U}{\partial X} W_{UU} + \lambda P_U^X = 0$$

위의 식에 (식 3)의 조건식인  $\frac{\partial C}{\partial M} = 1$ 을 대입하고  $\frac{\partial Z}{\partial X}$ 와  $\frac{\partial U}{\partial X}$ 을 풀기 위한 행렬식을 작성하면 다음의 (식 11)과 같다.

$$(식 11) \quad \begin{pmatrix} W_{ZZ} & W_{ZU} \\ W_{UZ} & W_{UU} \end{pmatrix} \begin{pmatrix} \frac{\partial Z}{\partial X} \\ \frac{\partial U}{\partial X} \end{pmatrix} = \begin{pmatrix} -W_{ZC} - \lambda P_Z^X \\ -W_{UC} - \lambda P_U^X \end{pmatrix}$$

이제 (식 11)을 Cramer's rule 또는 역행렬 공식을 이용하여 풀이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R\ 1) \quad \frac{\partial Z}{\partial X} = \frac{-W_{UV}(W_{ZC} + \lambda P_Z^X) + W_{ZU}(W_{UC} + \lambda P_U^X)}{W_{ZZ}W_{UU} - W_{ZU}^2}$$

$$(R\ 2) \quad \frac{\partial U}{\partial X} = \frac{W_{UZ}(W_{ZC} + \lambda P_Z^X) - W_{ZZ}(W_{UC} + \lambda P_U^X)}{W_{ZZ}W_{UU} - W_{ZU}^2}$$

위의 (R 1)과 (R 2)의 분자의 부호를 조사하기 위해서 (식 2-1)~(식 2-3), (식 5-1)과  $\lambda > 0$ 을 이용하면 각각의 분자는 음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록>에서 증명). 또한 (R 1)과 (R 2)의 분모는 사회후생함수 극대화의 이계충분조건(SOSC)에 해당하므로 양수가 된다.<sup>14)</sup> 따라서 (R 1)과 (R 2)의 부호는 음수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반출량과 갈등수준, 반출량과 통일비용수준이 역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frac{\partial Z}{\partial X} < 0, \frac{\partial U}{\partial X} < 0$$

동일한 방법으로 반입량과 갈등수준, 반입량과 통일비용수준의 관계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번에는 (식 8)과 (식 9)를 반입량  $M$ 에 대하여 전미분을 하여 (식 8-2)와 (식 9-2)를 얻는다. 그리고 두 식을 연립하여 정리하면 (식 12)와 같은 행렬식을 작성할 수 있다.

$$(식\ 8-2) \quad \frac{\partial C}{\partial M} W_{ZC} + \frac{\partial Z}{\partial M} W_{ZZ} + \frac{\partial U}{\partial M} W_{ZU} - \lambda P_Z^M = 0$$

$$(식\ 9-2) \quad \frac{\partial C}{\partial M} W_{UC} + \frac{\partial Z}{\partial M} W_{UZ} + \frac{\partial U}{\partial M} W_{UU} - \lambda P_U^M = 0$$

$$(식\ 12) \quad \begin{pmatrix} W_{ZZ} & W_{ZU} \\ W_{UZ} & W_{UU} \end{pmatrix} \begin{pmatrix} \frac{\partial Z}{\partial M} \\ \frac{\partial U}{\partial M} \end{pmatrix} = \begin{pmatrix} -W_{ZC} + \lambda P_Z^M \\ -W_{UC} + \lambda P_U^M \end{pmatrix}$$

마찬가지로 Cramer's rule 또는 역행렬 공식을 이용하여 풀이하면 다음의 (R 3)와 (R 4)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4)  $f = f(x_1, x_2)$ 와 같은 이변수 함수의 극대화를 가정하자.

— 일계필요조건(FONC ; First-Order Needed Condition) :  $f_1 = 0, f_2 = 0$

— 이계충분조건(SOSC ; Second-Order Sufficient Condition) :

$f_{11} < 0, f_{11} < 0, f_{11}f_{22} - f_{12}^2 > 0$

$$(R\ 3) \quad \frac{\partial Z}{\partial M} = \frac{W_{UU}(-W_{ZC} + \lambda P_Z^M) + W_{ZU}(W_{UC} - \lambda P_U^M)}{W_{ZZ}W_{UU} - W_{ZU}^2}$$

$$(R\ 4) \quad \frac{\partial U}{\partial M} = \frac{-W_{UZ}(-W_{ZC} + \lambda P_Z^M) - W_{ZZ}(W_{UC} - \lambda P_U^M)}{W_{ZZ}W_{UU} - W_{ZU}^2}$$

위 식의 분자 부호는 앞서 반출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 2-1)~(식 2-3)과 (식 5-2),  $\lambda > 0$ 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데, 그 결과 모두 음수가 나온다(<부록>에서 증명). 분모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후생함수 극대화의 이계충분조건에 해당하여 양수가 되므로 (R 3)와 (R 4)는 음수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입량 역시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과 역의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로, 반입량의 증가로 인해 갈등수준과 통일비용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frac{\partial Z}{\partial M} < 0, \frac{\partial U}{\partial M} < 0$$

이와 같이 간단한 경제모델을 통해 이론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남북간의 갈등수준과 통일비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반출량의 증가는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을 감소시키며, 반입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과 역의 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이 긴장 완화, 통일비용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II. 1장의 논의를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 3. 소 결

본 장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기본적으로 교역활동이라 가정하고, 교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모형들은 남북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존재하여 남북한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도입하여 보았다. 그 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비용의 감소를 위해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가 이론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 IV. 실증분석 및 검토

### 1. 실증분석

#### 1) 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 범위는 본격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8년 1/4분기까지이다. 각각의 자료의 시간 범위는 분기별 자료인데, 이처럼 분기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연도별 자료로 분석할 경우 데이터의 수가 작아 정밀한 분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후생수준 추정을 위해서 계절 조정된 실질 GNI(Real Gross National Income), 지니계수, 인구 10만명당 의료인 수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지니계수와 인구 10만명당 의료인 수의 경우에는 분기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연도별 자료의 수치를 분기별 자료로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2008년 1/4분기는 추세선을 이용한 추정치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실질 GNI와 인구 10만명당 의료인 수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사회후생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지니계수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상황의 악화를 의미하므로 사회후생수준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남한과 같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따라서 사회후생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니계수에는 가중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100을 곱하고 그 값을 제공하는 보정 과정을 거친 뒤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사회후생수준을 추정하였다.

$$W = \frac{Real\ GNI \times Med}{(Gini \times 100)^2}$$

$W$	: 사회후생수준
$Real\ GNI$	: 계절 조정 실질 GNI
$Med$	: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
$Gini$	: 지니계수

총소비 수준의 추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총소비의 대리변수로는 계절 조정된 실질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합을 사용하였다. 반출량과 반입량은 남북교역 자료의 분기별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것이나, 달러화 단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화 단위로 바꾸어주기 위하여 환율을 1,000₩/\$로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갈등 수준은 주성환·김진수(2006), 김진수(2007)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특히 김진수의 연구는 남북한 사이에 일어난 주요사건의 점수화한 표를 부록으로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갈등수준의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러나 김진수가 평화상태(cooperation)일 때는 양수, 분쟁상태(conflict) 상태일 때는 음수로 -10에서 10까지 숫자를 부여하여 데이터를 처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10을 기준으로 남북한 사이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0보다 작은 숫자를,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0보다 큰 숫자를 부여하여 데이터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 범위는 1~20이 되게 하고 이를 ‘갈등지수(conflict index)’라 명명하여, 갈등지수가 높을수록 남북한 긴장 상태가 조성됨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통일비용은 장차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완벽한 통일을 이루는 시점은 각 추정 시점으로부터 20년 뒤로 가정하였고, 그 규모는 20년 뒤의 남북한 명목 일인당 GNI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의 크기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계산을 위해서는 분기별 남북한의 명목 GNI 및 명목 GNI 증가율, 인구 및 인구 증가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는 분기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 자료가, 북한의 경우에는 인구 및 명목 GNI에 관련된 분기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 연중 분기별로 동일한 인구증가율 및 명목 GNI 증가율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분기별 인구 및 명목 GNI, 그리고 각각의 증가율을 추정하여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20년 뒤의 통일비용을 추정한 뒤, 각 추정 시점의 이자율을 이용하여 각 추정시점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환산한 값을 통일비용으로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t$ 라는 추정시점에서 남한의 명목 GNI를  $sGNI_t$ , 명목 GNI 증가

율을  $sg_t$ , 인구를  $sN_t$ , 인구증가율을  $sn_t$ 이라고 하고, 북한의 명목 GNI를  $nGNI_t$ , 명목 GNI 증가율을  $ng_t$ , 인구를  $nN_t$ , 인구증가율을  $nn_t$ 이라고 하자. 이때 모든 자료는 분기별 자료이며 각각의 증가율은 그 기간동안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t$ 시점에서 20년 뒤의 남북한의 1인당 명목 GNI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U_p = \frac{sGNI_t(1+sg_t)^{80}}{sN_t(1+sn_t)^{80}} - \frac{nGNI_t(1+ng_t)^{80}}{nN_t(1+nn_t)^{80}}$$

따라서 20년 뒤에 필요한 통일비용은  $U_p$ 와 추정된 20년 뒤의 북한 인구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이를 추정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추정시점에서 분기별 이자율( $r$ )을 할인율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된다.

$$U = U_p \times nN_t(1+nn_t)^{80} \times (1+r)^{80}$$

## 2) 계량분석 결과

계량분석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경제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 2-1) 조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경제모델의 결과인 (R 1)~(R 4)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과정이다.

### 가. 경제모델의 적합성 검정

사회후생수준과 총소비수준 및 갈등수준, 통일비용수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중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W = \alpha_0 + \alpha_1 C + \alpha_2 Z + \alpha_3 U + \epsilon$$

위의 계량모형과 앞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GAU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LS(Ordinary Least Square)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

	$\alpha_0$	$\alpha_1$	$\alpha_2$	$\alpha_3$
<i>a</i>	-63604.2	1.26154	-204.752	-1.59093
<i>s.e.</i>	12334.9	0.075352	206.296	2.95466
<i>t-statistic</i>	-5.15642	16.7420	-0.992519	-0.538447
<i>p-value</i>	0.000008	0.000000	0.164577	0.297189
$R^2$	0.909631			
$\overline{R}^2$	0.900282			

[표 3]의 각 추정량의 부호를 통해 총소비수준의 증가는 사회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갈등수준과 통일비용수준의 증가는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도 (식 2-1)에서 가정한 사회후생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및 수정결정계수(adjusted-R)의 값도 0.9 근방의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회귀식의 적합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alpha_1$ 의 추정량이 매우 높은 t-통계량을 가져 유의성이 높은 것에 반해,  $\alpha_2$ 와  $\alpha_3$ 의 추정량의 경우에는 t-통계량이 매우 작고 p-value는 매우 크다. 따라서 5%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에서 각각의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을 기각할 수 없어,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이 사회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내릴 것이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표면적으로는 사회후생함수의 적합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총소비수준이 사회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매우 높은 유의성 수준에서만 (식 2-1)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유의수준 5% 또는 1%) 내에서는 갈등수준과 통일비용수준이 사회후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나. 반출입량과 갈등수준의 관계 검정

반출량과 갈등수준, 통일비용수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다.

$$Z = \beta_0 + \beta_1 \frac{X}{GNI} + \beta_2 \frac{M}{GNI} + \epsilon$$

이때 반출입량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GNI로 나누어주는 이유는 남한의 경제 상황이 반출입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이때 나누어주는 GNI는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명목 GNI의 분기별 자료인데, 이는 반출입량의 분기별 자료는 명목 자료이며 계절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표 4] 반출입량과 갈등수준의 관계 검정 결과

	$\beta_0$	$\beta_1$	$\beta_2$
<i>b</i>	12.1398	-5.41790	2.30916
<i>s.e.</i>	1.94515	3.016562	4.97986
<i>t-statistic</i>	6.24104	-1.70655	0.463699
<i>p-value</i>	0.000000	0.049120	0.323105
$R^2$	0.111828		
$\overline{R^2}$	0.052617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수준에 대한 반출량의 계수 추정량 부호는 (R 1)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고, 갈등수준에 대한 반입량의 계수 추정량 부호는 (R 3)의 결과와 상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계수와 수정결정계수가 매우 작은 값을 보이고 있어 회귀식의 적합성도 앞선 분석에서보다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때 각 추정량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beta_1$ 의 추정량은 t-통계량이 크고 p-value가 낮은 편이어서 5% 유의성 검정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eta_2$ 의 추정량은 작은 t-통계량과 큰 p-value를 가지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회귀식의 적합성은 앞선 경제모델의 적합성 검정 결과보다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갈등수준에 대한 반입량의 계수 추정량은 통계적 유의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갈등수준에 대한 반출량 계수 추정량은 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다. 반출입량과 통일비용수준의 관계 검정

반출입량과 통일비용수준의 회귀모형 설정도 위의 갈등수준의 경우와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Z = \gamma_0 + \gamma_1 \frac{X}{GNI} + \gamma_2 \frac{M}{GNI} + \epsilon$$

이러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OLS한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반출입량과 통일비용수준의 관계 검정 결과

	$\gamma_0$	$\gamma_1$	$\gamma_2$
<i>c</i>	259.367	-287.891	252.201
<i>s.e.</i>	140.762	218.295	360.370
<i>t-statistic</i>	1.84259	-1.31882	0.699839
<i>p-value</i>	0.037646	0.098605	0.244710
$R^2$	0.056752		
$\overline{R}^2$	-0.006132		

[표 4]의 c 항목과 t-statistic, p-value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출입량과 통일비용수준의 관계는 앞선 반출입량과 갈등수준의 회귀분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통일비용수준과 반출량의 관계에 대한 계수 추정량의 부호는 (R 2)를 잘 따르고, 통일비용수준과 반입량의 관계에 대한 계수 추정량의 부호는 (R 4)와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유의성 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gamma_1$ 의 추정량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gamma_2$ 의 추정량은 25% 이상의 높은 유의성을 요구하여 사실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회귀식의 적합성은 앞선 경우보다 더욱 낮아 5% 내외의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이론과 실제

실증분석 결과 10% 유의수준을 가정할 경우 경제모델의 적합성 검토에 서는 총소비수준과 사회후생수준의 관계가, 반출입량과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의 관계 분석에서는 반출량과 갈등수준 및 통일비용수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적합성은 경제모델의 적합성 검토를 제외한 두 가지 분석에는 매우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증분석의 결과가 이론적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1) 자료의 문제

앞에서도 밝혔듯이 수집한 자료들의 상당수는 분기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추정량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이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수집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잠시 뒤로 미루고 자료 가공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후생수준을 추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후생은 그 개념이 복잡하고 다양한데, 크게 국민소득의 높낮이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관점, 국민들의 영양상태 및 발육상태, 평균 수명과 기대수명, 불평등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수량화가 쉬워 분석에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연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수준만 높다고 해서 후생이 증진되었는가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후자의 과점은 소득뿐만 아니라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평등성(equality)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은

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등 일반성을 상실할 우려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비롯하여 인구 10만명당 의료인 수,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후자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불평등도 지수인 지니계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후생수준을 측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후생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공 과정에서 변수 영향력의 과대 계상, 관련 변수의 누락(exclusion of relative variable)이 나타나 남한의 사회후생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둘째, 갈등지수의 추정은 사회후생수준 추정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하게 자의성 개입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갈등수준은 수량화가 불가능한 질적 자료(qualitative data)이기 때문에 그 추정에 자의성이 개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료의 객관성 확보는 연구의 핵심요소로서 자의성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 중에서 분쟁지수를 자료로 사용하였던 연구들을 살펴보자. 우선 Polachek(1980)과 Pollins(1989)은 그들의 연구에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 자료를 사용하였고, Azar(1980)는 WEIS(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최근 10여 년 동안의 연구에서는 MIDs(military interstates disputes)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MIDs는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행위를 관찰하여 만든 자료들이다. 이 중에서 COPDAB의 경우에는 1948년부터 1978년까지 30년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약 50만 가지 사건의 국가간 갈등을 계량화하기 위해 개발한 분석방법론으로, 자료의 객관화·수량화에 어느 정도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갈등지수 방법론이

15) 주성환·김진수, “남북한 간 교역이 분쟁에 미치는 효과 -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6, pp. 501~502

필요하다. 하지만 김진수(2007)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자의적인 갈등지수 설정으로 인한 오차가 경제모델의 적합성을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통일비용 추정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통일비용의 정의에 대하여 조동호(1997)는 광의의 개념으로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 협의의 개념으로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북한지역에 지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남한지역의 경제적 손실’로 정의하였다. 한편 조민(1997)은 통일비용을 체제 통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경제적 통합을 위한 유형의 통일비용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통합을 위한 무형의 통일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부담의 범위와 예상 통일시기, 통일국가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된다. 만약 이러한 요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추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 환경의 변화나 외부적인 요인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당장 본 연구에서도 2002년 1/4분기 추정량인 약 1,881.6조원부터 2001년 4/4분기 추정량인 약 10.2조원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그 분포 범위가 1,870조를 넘나들어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계절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일비용의 추정 기준이 합리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통일비용의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모형의 문제

앞서 경제모델의 전개는 5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경제협력은 특히 (가정 1)과 (가정 2)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여 실증분석 결과와 이론적 예측의 결과가 어긋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우선 남북 경제협력에서는 (가정 1)의 ‘자유로운 교역’의 가정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표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남북교역의 반출 부분이 상업적인 거래보다 비상업적인 거래의 양이 훨씬 많은 점, 이에 비해 반입 부분은 비상업적 거래가 거의 없는 비대칭적인 교역 구조를 보인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교역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의 원리에 의한 균형이 달성되지 않으므로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 이론적 결과와 불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R 3), (R 4)의 이론적 결과와 불일치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반출의 경우에는 자료수집 기간 내내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입의 경우에는 비대칭적인 유형별 비중구조를 가지며, 최근에 와서야 일반교역·위탁가공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반입량과 갈증수준, 반입량과 통일비용수준의 관계에서는 유의성이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가정 1)의 ‘합리적인 주체’라는 가정의 경우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흔히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합리성(rationality)은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사고와 결정을 해야 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대칭적인 정보 분포(perfect & symmetric information)를 가정하여 정책 시차(policy lag)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도 포함한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신중한 입장은 상황에 따라 알맞은 즉각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정책 시차가 나타난다.

정책 시차는 크게 내부 시차(inside lag)와 외부 시차(outside lag)로 나누어 나타난다. 내부 시차는 정부 내에서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의미하고, 외부 시차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차를 의미한다. 남북 경제협력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정치적·사회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실제로 정책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

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적인 변수가 개입되는 경우 그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양상도 나타난다. 즉,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가 모두 매우 큰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전기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에서는 정책 시차로 인해 합리성의 가정이 파괴되므로 실증분석의 결과와 이론적 예측의 결과가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

셋째, (가정 2)의 남북관계에서는 국내 및 국제정치가 불변이라는 가정도 파괴되고 있다.<sup>16)</sup>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되어 있는 이상 남북 경제협력은 국내 및 국제정치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되어 그 효과 또한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란 요인에 오차를 보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및 국제정치의 변화가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와 갈등수준에 관한 인과성을 전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앞서 경제모델의 결론은 반출입량의 증가가 갈등 수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요인의 변화는 남북간의 갈등 수준을 먼저 상승시키고, 뒤이어 교역 감소에 따른 반출입량의 감소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과성 전도는 기본적으로 갈등 지수가 반출입량의 후행 지수(lagging index)가 될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 및 예측을 파괴하여 선행 지수(leading index)가 되기도 하는 등의 양상을 보여,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갈등 지수와 반출입량의 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도록 만들 것이다. 따라서 (가정 2)의 파괴는 근본적으로 경제모델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실증분석 결과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

16) 물론 남북관계가 아니더라도 국내 및 국제정치가 불변이라는 가정은 지켜지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제정치의 변화가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수의 내생성(endogenousness) 및 외생성(exogenousness)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바, (가정 2)의 파괴를 중요한 오차요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 3. 소 결

이상에서 실증분석의 결과 경제모델의 적합성은 총소비수준과 사회후생 수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고, 반출량과 분쟁수준 및 통일비용수준의 관계만 이론적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자료의 문제와 모형의 문제로 나누어 고려하였는데, 검토 결과 자료의 문제는 실증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의 문제는 주로 가정 파괴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자유로운 교역의 가정 파괴는 반입량과 분쟁수준 및 통일비용수준의 관계의 유의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합리성의 가정 파괴와 국내 및 국제정치의 불변 가정 파괴는 경제모델의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V. 결 론

남북 경제협력은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대 경협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고, 새로운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통해 북한 경제개발을 가속화시키려는 시도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이석기(2006)는 남북 경제협력은 일방적인 대북 지원사업이라는 성격과 일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문제나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조명철(2007)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불안정성, 경협에 대한 인식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이 남북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7)</sup> 이처럼 지금 남북 경제협력은

17) 이외에도 북한 현지 관리의 어려움,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흡 및 추진 자금 등의 정부 지원 부족, 남북한간의 경제력 및 기술력 격차로 인한 구매력 부족,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의 한계를 남북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다. (조명철, “북한 경제 현황과 남북경협”(세미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76)

현재 기회와 위기(opportunity & threat)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경제모형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남북 경제협력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제거하는 방안 마련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자료수집 및 가공의 어려움 등으로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선 적절한 사회후생 및 통일비용, 갈등수준의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 시차 및 정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엄밀한 경제모형을 설정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sup>18)</sup>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좀 더 현실적인 남북 경제협력 모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경우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 관련 정책 형성 및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므로,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

18)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인과성이 파괴되는 경우 갈등수준을 내생변수(endogeneous variable)로 설정하고, 반출입량을 외생변수(exogeneous variable)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과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 및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분석의 복잡성이 증대할 것이다.

## 〈부 록〉

### 1. (R 1)~(R 4)의 분자 부호 조사

#### 1) (R 1)의 분자

$$\begin{array}{ccccccc}
 - & W_{UV} & ( & W_{ZC} & + & \lambda P_Z^X & ) & + & W_{ZU} & ( & W_{UC} & + & \lambda P_U^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nd{array}$$

이처럼 식의 전반부는 양수와 음수의 곱으로 음수가 되고, 후반부는 양수와 음수의 곱으로 음수가 된다. 따라서 음수의 합이 되므로 음수이다.

#### 2) (R 2)의 분자

$$\begin{array}{ccccccc}
 W_{UZ} & ( & W_{ZC} & + & \lambda P_Z^X & ) & - & W_{ZZ} & ( & W_{UC} & + & \lambda P_U^X & ) \\
 & & + & & - & + & - & & - & & - & & + & -
 \end{array}$$

식의 전반부는 양수와 음수의 곱으로 음수, 후반부는 음수와 음수의 곱으로 양수이다. 그런데 음수에서 양수를 빼주고 있으므로 음수가 된다.

#### 3) (R 3)의 분자

$$\begin{array}{ccccccc}
 W_{UV} & ( & -W_{ZC} & + & \lambda P_Z^M & ) & + & W_{ZU} & ( & W_{UC} & - & \lambda P_U^M & ) \\
 & & - & & - & + & + & & + & & - & & + & +
 \end{array}$$

식의 전반부는 음수와 양수의 곱으로 음수, 후반부는 양수와 음수의 곱으로 음수이다. 따라서 음수의 합은 음수가 된다.

#### 4) (R 4)의 분자

$$\begin{array}{ccccccc}
 - & W_{UZ} & ( & -W_{ZC} & + & \lambda P_Z^M & ) & - & W_{ZZ} & ( & W_{UC} & - & \lambda P_U^M & ) \\
 & & & + & & - & + & & - & & - & & + & +
 \end{array}$$

식의 전반부는 음수와 양수의 곱으로 음수, 후반부는 음수와 음수의 곱으로 양수이다. 그런데 음수에서 양수를 빼주고 있으므로 음수가 된다.

## 2. 조사 통계자료(계속, 1/3)

통계표 단위	rGNI 십억 원	Gini <sup>1)</sup>	Med <sup>2)</sup> 명	q 십억 원	X 백만 \$	M 백만 \$	Z
2000 1	145008	0.272	578	139418	39.625	36.342	7
2000 2	143102	0.272	578	140794	98.683	28.145	1
2000 3	145766	0.272	578	140699	86.407	40.791	3
2000 4	142284	0.272	578	140901	48.06	47.095	7
2001 1	146494	0.286	605	140498	45.789	30.776	10
2001 2	146875	0.286	605	142931	88.235	32.49	13
2001 3	149449	0.286	605	146355	47.113	46.704	10
2001 4	149591	0.286	605	150742	45.65	66.2	10
2002 1	156333	0.284	636	152116	36.756	51.262	18
2002 2	156787	0.284	636	154961	82.171	44.748	17
2002 3	160088	0.284	636	157079	81.739	46.395	13
2002 4	160635	0.284	636	157226	169.489	129.17	17
2003 1	158035	0.282	664	157229	70.75	57.43	20
2003 2	159109	0.282	664	154359	86.098	54.878	13
2003 3	162929	0.282	664	156125	156.964	79.539	10
2003 4	165713	0.282	664	156944	121.153	97.405	10
2004 1	166135	0.285	681	156348	43.045	61.667	7
2004 2	167627	0.285	681	158708	166.278	54.525	5
2004 3	168510	0.285	681	158959	106.667	60.448	12
2004 4	168766	0.285	681	161807	123.003	81.378	10
2005 1	167192	0.286	711	159627	89.172	76.977	7
2005 2	168392	0.286	711	164695	222.524	65.444	8
2005 3	169107	0.286	711	165395	247.673	86.794	7
2005 4	170968	0.286	711	167202	156.104	111.366	7
2006 1	170620	0.292	742	169587	164.103	96.495	10
2006 2	171954	0.292	742	170604	194.721	102.762	8
2006 3	173237	0.292	742	172789	354.748	175.659	8
2006 4	177531	0.292	742	173422	116.628	144.625	20
2007 1	176129	0.3	778	175340	119.48	158.648	3
2007 2	179661	0.3	778	179110	273.229	166.811	7
2007 3	1823/01	0.3	778	178400	306.173	202.864	8
2007 4	182614	0.3	778	181198	333.668	237.023	3
2008 1	180416	0.299*	799*	181651	209.141	208.144	8

- \* 주 : rGNI=생산 국민총소득(실질, 계절조정, 분기), Gini=지니계수  
Med=인구 10만명당 의료인 수, q=최종소비지출+총자본형성(실질, 계절조정, 분기)  
X, M=반출량, 반입량, Z=갈등지수  
1) Gini 추세식  $y=0.0028x+0.2733$ ,  $R^2=0.7323$   
2) Med 추세식  $y=27.702x+549.71$ ,  $R^2=0.9955$   
(\* 표시는 추세식을 이용한 추정치)

(계속, 2/3)

통계표	r	sGNI	nGNI	sN	nN	sn	nn
단위	%	십억 원	십억 원	천 명	천 명	%	%
2000 1	4.84	141696	4722	46714	22105	0.209	0.105
2000 2	4.99	142298	4737	46812	22128	0.209	0.105
2000 3	5	145754	4752	46910	22152	0.209	0.105
2000 4	5.13	146413	4767	47008	22175	0.209	0.105
2001 1	5.01	152217	4946	47092	22195	0.178	0.088
2001 2	4.93	155108	5029	47175	22214	0.178	0.088
2001 3	4.49	156880	5114	47259	22234	0.178	0.088
2001 4	3.92	156822	5120	47343	22253	0.178	0.088
2002 1	3.97	166304	5233	47417	22282	0.156	0.13
2002 2	4.15	170410	5299	47491	22311	0.156	0.13
2002 3	4.26	172485	5366	47565	22340	0.156	0.13
2002 4	4.26	175870	5434	47640	22369	0.156	0.13
2003 1	4.25	177552	5429	47692	22407	0.109	0.171
2003 2	4.13	178883	5468	47744	22446	0.109	0.171
2003 3	3.82	181577	5507	47796	22484	0.109	0.171
2003 4	3.83	187408	5546	47849	22522	0.109	0.171
2004 1	3.82	191849	5765	47907	22569	0.122	0.207
2004 2	3.77	194274	5881	47966	22615	0.122	0.207
2004 3	3.68	196865	5999	48024	22662	0.122	0.207
2004 4	3.44	198187	6120	48082	22709	0.122	0.207
2005 1	3.3	197839	6100	48096	22764	0.029	0.24
2005 2	3.32	200271	6165	48110	22818	0.029	0.24
2005 3	3.32	203726	6230	48124	22873	0.029	0.24
2005 4	3.49	207465	6296	48138	22928	0.029	0.24
2006 1	3.82	208208	6157	48177	22966	0.082	0.164
2006 2	3.99	210742	6134	48217	23003	0.082	0.164
2006 3	4.34	214321	6112	48257	23041	0.082	0.164
2006 4	4.46	215889	6089	48297	23079	0.082	0.164
2007 1	4.53	218821	6169	48337	23109	0.082	0.131
2007 2	4.57	224460	6194	48376	23140	0.082	0.131
2007 3	4.81	228347	6219	48416	23170	0.082	0.131
2007 4	5.02	230913	6244	48456	2,200	0.082	0.131
2008 1	4.99	235911	6270	48496	23230	0.082	0.131

\* 주 : r=무담보 콜금리(1일물, 은행간 직거래, 분기, 연리%)

sGNI=남한 GNI(명목, 계절조정, 분기), nGNI=북한 GNI(명목)

sN=남한 인구, nN = 북한 인구, sn=남한 인구증가율(전기대비, 분기%)

nn=북한 인구증가율(전기대비, 분기%)

\* nGNI, sN, nN, sn, nn의 각 년도 분기자료는 추정치

통계표 단위	sg %	ng %	W	C 십억 원	$\Delta U_p$ 만원	U 조 원
2000 1	2.839	0.3	113288	139414	2385.507	251.590
2000 2	0.425	0.318	111799	140724	335.606	39.725
2000 3	2.429	0.317	113880	140653	1767.585	211.057
2000 4	0.452	0.316	111159	140900	352.620	46.533
2001 1	3.964	3.755	108354	140483	5891.799	700.675
2001 2	1.899	1.678	108635	142875	1204.921	134.934
2001 3	1.143	1.690	110539	146354	632.570	50.660
2001 4	-0.0369	1.682	110644	150762	197.538	10.222
2002 1	6.046	2.207	123274	152131	33790.96	1881.636
2002 2	2.469	1.261	123631	154923	2171.115	139.021
2002 3	1.217	1.264	126234	157043	783.491	54.660
2002 4	1.963	1.267	126666	157186	1483.366	103.622
2003 1	0.956	-0.0920	131954	157216	711.059	51.019
2003 2	0.749	0.718	132851	154327	586.381	38.437
2003 3	1.506	0.713	136041	156047	1113.401	57.593
2003 4	3.212	0.708	138366	156920	4463.385	233.056
2004 1	2.370	3.949	139289	156366	1885.409	100.750
2004 2	1.264	2.012	140540	158596	895.008	46.112
2004 3	1.334	2.007	141281	158913	963.199	46.394
2004 4	0.671	2.017	141495	161765	525.771	21.082
2005 1	-0.176	-0.327	145329	159615	332.170	12.300
2005 2	1.229	1.066	146373	164538	1028.82	38.784
2005 3	1.725	1.054	146994	165234	1573.011	59.442
2005 4	1.836	1.060	148611	167157	1751.685	75.679
2006 1	0.358	-2.208	148480	169519	534.910	28.105
2006 2	1.217	-0.374	149641	170512	1059.791	63.572
2006 3	1.699	-0.359	150758	172610	1583.078	124.452
2006 4	0.731	-0.376	154494	173450	732.803	63.261
2007 1	1.358	1.314	152253	175380	1179.153	104.740
2007 2	2.577	0.405	155307	179004	3293.609	302.057
2007 3	1.732	0.404	157589	178296	1710.874	188.732
2007 4	1.123	0.402	157859	181102	1057.432	137.084
2008 1	2.165	0.417	161243	181650	2493.477	316.354

- \* 주 : **sg**=남한의 명목 GNI증가율(전기대비, 분기%)  
**ng**=북한의 명목 GNI증가율(전기대비, 분기%), **W**=사회후생  
**C**=총소비액,  $\Delta U_p$ =20년 뒤 일인당 명목 GNI 격차  
**U**=통일비용  
\* ng의 각 년도 분기자료는 추정치  
\*\* 굵은 실선 이후 자료는 계산한 수치

### 3. 남북관계 주요일지 및 갈등지수

시 기	남북관계 주요사건	갈등지수
2000 1/4	-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3.9) - 남북 특사 접촉(중국 상해, 북경) (3.17~4.8)	7
2000 2/4	- 남북 정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4.10) - 북한 평양교예단 서울 방문, 공연 (5.29~6.10) - 남북정상회담 개최(평양),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6.13~6.15)	1
2000 3/4	-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장,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 (8.8) -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8.15~18) - 경의선 기공식(임진각) (9.18)	3
2000 4/4	- 미·북 공동선언 발표 (10.12) -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평양 개최 (12.27~30)	7
2001 1/4		10
2001 2/4	- 북 상선 NNL 및 제주해협 무단 통과 (6.2~6.6)	13
2001 3/4		10
2001 4/4		10
2002 1/4	- 부시 미대통령, 2002년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 (1.29)	18
2002 2/4	- 미국, 북한을 포함한 7개 테러지원국 재지정 (5.21) -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교전 (6.29)	17
2002 3/4	- 북 서해교전 관련 유감표명 및 당국간 회담 제의 (7.25) - 남북 군 당국간 직통전화 개통 (9.24)	13
2002 4/4	- 북한,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 선언 (12.12) - IAEA 사찰관 2명 전원, 북한의 추방 통보에 따라 베이징을 통해 북한 철수 (12.31)	17
2003 1/4	- 북한, NPT 탈퇴 선언(정부성명) (1.10) - 북한, 미사일 1기 동해상으로 발사 (2.24)	20
2003 2/4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유엔 안보리의 북한 NPT 탈퇴문제 회의 관련, 유엔의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 (4.6)	13
2003 3/4		10
2003 4/4		10

시 기	남북관계 주요사건	갈등지수
2004 1/4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1.29) -육군,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재개 (3.2~3.5)	7
2004 2/4	-평북 용천참사 관련, 남측의 첫 구호물자(약 100만 달러) 남포에 도착 (4.29) -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 8천평에 대한 준공식 개최 (6.30)	5
2004 3/4	-북한 경비정, 어선, 선박의 NNL 침범 (7월중)	12
2004 4/4		10
2005 1/4	-2004년도 대북 식량차관 쌀 40만톤 인도 완료 (2.8)	7
2005 2/4	-6·15 통일대축전 참가 대표단 방북 (6.14~6.17)	8
2005 3/4	-대북 비료 추가지원분 15만톤 전달 완료 (7.25) -8.15 남북공동행사 (8.14~8.17)	7
2005 4/4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개성) (10.2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개성) (11.23~11.24)	7
2006 1/4		10
2006 2/4	-대북 추가 20만톤 비료지원 시작 (5.15)	8
2006 3/4	-6.15 공동선언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에 수해 복구지원 공식 요청 (8.9)	8
2006 4/4	-북한, 핵실험 강행 (10.9) -정부, 대북제재 이행계획 발표 (11.13)	20
2007 1/4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베이징),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 발표 (2.8~2.13) -비료 30만톤 대북지원 착수 (3.27)	3
2007 2/4	-남북 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문산-개성, 제진-금강산) (5.17) -금강산 내금강 관광 개시 (6.1)	7
2007 3/4	-개성공단 총생산액 2억불 달성 (9.30)	8
2007 4/4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0.3합의, 발표 (10.3) -제1차 남북총리회담(서울) (11.14~11.16) -각 분과위원회 개최 (12월 중)	3
2008 1/4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3.17)	8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논문]

- 김영윤·조동호·조민,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진수, “남북교역과 대북 경제지원이 남북한 분쟁 완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7
- 김창권, “독일 통일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2005, 현대경제연구원, 2005
- 이석기,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과제”, 『KIET 산업경제』 2006년 10월호, 산업연구원, 2006
- \_\_\_\_\_, “개성공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2007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7
- 이영훈,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금융경제연구원, 2006
- 조명철, “북한경제 현황과 남북경협”(세미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주성환,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과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동북아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2
- \_\_\_\_\_,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교역의 이론적 조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7
- 주성환·김진수, “남북한간 교역이 분쟁에 미치는 효과 -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6
- 통일부,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전망”(연간),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0~2007
- \_\_\_\_\_, “남북교류협력 동향”(월간), 통일부, 2005.1~2008.3
- \_\_\_\_\_, “2008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 \_\_\_\_\_, “통일문제이해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 홍익표,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 Johnston, Jack & DiNardo, John, 『Econometric Methods』, 4th ed, McGraw-Hill, 1997
- Polachek, Solomon William, "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4, No.1, 1980
- Varian, Hal R., 『Intermediate Microeconomics : A modern approach』, 7th ed, W.W. Norton & Co, 2006

[웹사이트(Web Site)]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남북관계 주요일지’, ‘보도자료’, ‘통계자료’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정보, <http://interkoreatrade.kita.net/>

한국은행 경제통계, <http://ecos.bok.or.kr/>

〈 장 려 〉

##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대남 비난 태도 분석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2학기 김지혜

### 《 목 차 》

**[요약문]**

**[본 문]**

I. 서 론

II. 북한 대남 비난 기사의 유형과 특성

III.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 대한 비난 비교 분석

IV.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대남 비난 태도 분석

###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을 중심으로 -

2008년 2월 ‘실용’과 ‘비핵·개방·3000’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내걸었던 기조와는 다른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한 달 여간 침묵을 지켰던 북한은 4월 1일자 「로동신문」에서 ‘론평원’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 비난 기사를 실었다. 이 글에서는 ‘리명박’이라는 대통령의 실명이 ‘역도’, ‘패거리’ 등의 표현과 함께 48회나 언급되었다. 북한은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8년만에 다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북한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노무현정부 때와는 다른 감정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제, 두 정부에 대한 북한의 대남 비난 기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정부에 대한 대남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대남 비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연구대상의 범위를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 안에 「로동신문」 5면에 실린 북한 내 단체의 성명과 담화문 등의 비난 기사를 분석한다.

북한 신문 기사의 유형은 크게 보도적 기사, ‘사론설’, 교양적 기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대남 비난 기사의 대부분은 ‘사론설’에 실린다. ‘사론설’은 다시 ‘사설’, ‘론설’, ‘론평’, ‘정론’, ‘관평’ 등으로 나누어진다. ‘사설’과 ‘론평’은 대남 비난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설’은 당과 국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해주고, ‘론평’은 예리한 비평과 폭로를 본질적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북한 신문에 나타나는 ‘사설’과 ‘론평’ 등을 통해 우리는 당의 입장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북한 신문에 나타나는 대남 비난 기사는 주민을 선전·선동하는 동시에 남한의 각종 발언과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대남 정책을 드러내는 기능도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 논평에서는 속어나 비어, 각종 욕설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한 관계의 경직성을 파악할 수 있다.

『로동신문』에 실린 대남 비난 기사를 두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분석해 본 결과, 이명박정부 시기 비난 기사가 총 160건, 노무현정부 시기가 총 69건으로 약 2.4배가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다시 대상별, 분야별, 필자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남 비난 기사에서 비난을 받는 대상인 인물이나 단체를 크게 9가지(경찰·검찰·공안당국, 군부, 남조선당국, 대통령 실명 포함 표현, 보수 언론, 친미·보수 세력, 한나라당, 호전 세력, 기타)로 구분하여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시기 비난 대상 언급이 129건인 것에 반해 이명박정부 시기 437건으로 약 3.4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무현정부 때는 ‘남조선당국’이라는 표현이 전체 기사의 24.8%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정부 때는 대통령의 실명이 전체 기사의 38.9%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노무현정부 시기 대남 비난 기사에서는 대통령의 실명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의 실명을 170번이나 거론하였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실로 강력한 것임을 느낄 수 있다.

분야별로는 7가지(경제, 군사, 남북문제, 외교, 인권, 사회, 핵문제 분야) 분류를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시기 총 69건의 비난이 있었던 것에 반해 이명박정부 시기 총 233건의 비난이 있었는데 이는 약 3.4배 증가한 수치이다. 두 정부 모두 군사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난이 있었고, 한미 합동군사훈련, 북핵문제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그 분야의 비난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필자별 분석은 필자별로 그 무게와 위력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의 중요성이 크다. 『로동신문』 대남 비난 기사의 주요 필자는 ‘론평원’, 개인, ‘조평통’

등이다. 특히 ‘론평원’은 북한에서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직접 대변한다는 측면 때문에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보다 더 권위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이러한 ‘론평원’의 글이 한 건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명박정부 때는 ‘론평원’의 글이 무려 5건이나 있었다. 또한 노무현정부 시기 약 16%를 차지했던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성명이 이명박정부 시기 단 한건도 실리지 않았고 대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변인 성명의 비난이 크게 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로동신문』이라는 공식화된 창구를 통해 북한이 내놓은 대남 비난 기사는 남북관계의 경직성을 파악하게 한다. 따라서 2008년 현재 보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2배 이상 증가한 비난 횟수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밝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비난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비난 사항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불이행’이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I. 서론

이 연구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북한의 『로동신문』에 나타난 비난 기사를 노무현정부 100일간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보로서 노동당의 입장을 대변한다. 따라서 『로동신문』의 비난 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 비난 태도를 분석하는 지름길이다.

2008년 4월 1일자 『로동신문』 2면에는 “남조선당국이 반복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논평이 실렸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 후 한 달 여간 침묵을 지켰던 북한이 처음으로 새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었다. ‘론평원’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48회 거론하였고, ‘리명박역도’, ‘리명박폐거리’, ‘리명박폐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비난은 처음이 아니었다.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거의 모든 대통령에게 같은 표현을 쓰고는 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이후 ‘역도’라는 표현을 삼갔던 북한이 8년만에 다시 이 같은 표현을 썼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sup>1)</sup>

‘론평원’의 글은 본질상 당의 입장이나 목소리를 대변한다. 따라서 이는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대적 ‘언론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sup>2)</sup> 또한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보다는 다소 비공식적인 입장이기에 거칠고 비속적인 표현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한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오늘날, 신문을 만드는 사람은 복화술사가 자기의 인형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신문을 생각하고 있다. 즉 그것으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게 하는가는 전적으로 그가 마음먹는 것에 달려 있다”<sup>3)</sup>라고 말하고 있다.

1) 연합뉴스, 2008.4.1자 “北, 南대통령 실명 직접 비난, 8년만의 일”.

2) 김영주·이범주, 『현대 북한 언론의 이해』(한울, 1999), p.55.

북한의 모든 매체가 그렇듯이 북한 언론의 남한 관련 기사는 당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 발표되는데, 이로써 그들의 생각과 인식을 담아내게 된다.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기자가 글을 쓰는 경우와 통일전선부 산하 각종 유명단체들이 담화문을 내놓는 경우, 남한 내 친북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등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내놓은 글들을 보고 비난의 대상과 주제, 필자의 공식·비공식성 정도를 분석한다면 북한의 대남 기조와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로동신문』에 실린 대남 비난<sup>4)</sup>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남한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남 동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동신문』은 당 기관지로서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 따라서 『로동신문』은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제때에 가장 정확하게 해설 선전할 뿐 아니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과 견해를 천명한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의 의도대로 분석 평가하고 처리함으로써 그에 대한 당의 입장과 견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로동신문』은 북한의 대남 인식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sup>5)</sup>

또한 본 논문은 대남 비난 분석을 위해 5면의 기사를 대상으로 삼는다. 5면은 특히 남한 사회 내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과 남한의 실상, 통일논조 등 대남 관계 기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sup>6)</sup> 단, 4면과 2면, 6면에서도 대남 비난 관련 기사가 실리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남 비난 분석이기 때문에 남한의 단체가 발표한

3) 마샬 맥루한, 박정규 역, 『미디어의 이해』(커뮤니케이션 북스, 2002), pp.304-305.

4) 비방(誹謗)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난(非難)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을 뜻한다. 강현두의 글에 따르면 “논평은 사태의 본질을 똑똑히 밝혀야 하지만 그에 대한 주장이 명백해야 한다. 또한 적을 규탄하는 글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욕설이나 퍼붓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연한 논리와 움직일 수 없는 논증으로 써 나가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남한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어떠한 사안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비난(非難)’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5) 전미영,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통일연구원, 2006), p.8.

6) 『로동신문』은 총 6면으로, 1면은 정치면, 2면은 정치교양면, 3면은 경제면, 4면은 공산주의 교양면, 5면은 남조선정세면, 6면은 국제정세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난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이나 론평원이 쓴 기사와 북한 내 단체의 담화문만 대상으로 삼는다. 단, ‘한국 민족민주전선’은 남한 내에 조직되어 있는 지하당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당 직속의 위장 단체이므로 이 역시 포함할 것이다.<sup>7)</sup>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본 논문은 ‘대북 포용정책’을 펴온 노무현정부와 ‘비핵·개방·3000’을 내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남 비난 내용을 파악, 대북 정책방향에 따른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인, 2003년 2월 25일부터 6월 3일, 2008년 2월 25일부터 6월 3일로 한정한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은 내각이나 그 정부의 초기 정책이 정착되는 기간이므로 100일 동안만 살펴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 비난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북한에서 대남 비난 기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와 역할, 대남 비난 기사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각각의 100일간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어떤 대상을 비난하는지, 무엇에 관해 비난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북한이 남한의 비난 대상인 인물과 기관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로 감정적이고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발췌해 볼 것이다. 그리고 7가지 분야를 나누어 비난 주체가 무엇인지 그 범주를 나누어 보고 빈도수를 도출해낼 것이고, 비난 기사를 쓴 필자도 분석해 그 기사 내용의 공식성도 볼 것이다. 또한 월별 분석을 통해 어떠한 정향성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정부 간 나타난 대남 비난의 비교는 남한 정부 기조 변화에 따른 북한의 인식 변화를 가늠하게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

7) 전현준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박영사, 2005), pp.333-340.

## II. 북한 대남 비난 기사의 유형과 특성

### 1. 대남 비난 기사의 유형

북한의 신문 기사의 종류는 신문학개론서별로 그 분류가 다르지만, 가장 최근에 발행된 『조선대백과사전』(1996)과 『신문학개론』(1989)에서 분류한 신문기사 분류체계에 따르면 북한의 신문 기사는 보도적 기사(일반기사), ‘사론설’, 교양적 기사(연문기사) 등으로 나누어진다.<sup>8)</sup>

이 중 ‘사론설’은 남한에 대한 비난 기사가 가장 많이 실린다. 북한 신문에서 ‘사론설’은 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해설·선전하며 국내외의 중요 사실이나 사건, 현상들에 대하여 정치사상적 분석을 행하는 정론성이 강한 글이다. 때문에 여러 기사 중에서 ‘가장 위력한 선전·선동무기’로 기능한다.<sup>9)</sup>

‘사론설’류의 주요 기사형태는 ‘사설’, ‘론설’, ‘정론’, ‘론평’, ‘관평’ 등이다. 사설은 당의 노선과 정책, 매 시기 당의 방침과 의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내외 문제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한다.<sup>10)</sup> 『신문리론』에서 ‘론설’은 새것의 불가극복성, 낡은 것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므로 그 주제는 대부분 국제 생활 및 남조선 정세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시사론평’은 ‘론설’의 형태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정치적 큰 사건과 관련하여 ‘소여대상’의 본질을 밝혀주는 동시에 그에 대한 당과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천명한다. ‘시사론평’의 취급 대상은 주로 국제적 사건으로, 대남 문제로 되는 것이 특징이다.

‘론평’의 본질적 특성은 예리한 비평과 폭로에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만행과 허위를 무자비하게 폭로하는 예리한 논조, 풍자적 수법이 없이는 적극성도 살릴 수 없고 결국 글의 전투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8) 김영주·이범수, 『현대 북한 언론의 이해』(한울, 1999), pp.40-42.

9) 김영주·이범수, 『현대 북한 언론의 이해』(한울, 1999), p.47.

10) 김영주·이범수, 『김정일 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한울, 1994). p.184.

날카로운 표현 수법을 강조하고 있다.<sup>11)</sup> ‘론평’은 ‘언론전’, ‘선전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이며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사회 여론을 조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수단이다. 대남 비난을 위한 ‘론평’은 주로 적을 폭로 규탄하는 논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체로 대적투쟁의 예리한 언론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높게 평가된다. 김일성은 ‘론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자들이 쓰는 모든 기사, 평론, 정론들은 미제를 역사의 심판대에 제소하는 힘 있는 고소장으로, 인민대중을 반미구국항쟁에 불려일으키는 위력한 전투적 기치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sup>12)</sup>

‘론평’은 국제여론 조성과 대적투쟁에서 인민들에게 정세의 본질과 그 발전추세를 알려주는 데서 다른 어떤 기사 종류보다도 위력한 무기로 인식된다. 대남 논평의 특성은 우선적으로 정치적 분석과 예리한 비평에 있다. 이는 사회여론을 강력하게 불려일으키기 위해 사태의 본질을 직접적,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데 생명이 있다.<sup>13)</sup>

북한은 이러한 ‘사론설’의 ‘사설’, ‘론평’ 등을 통해 대남 비난을 논리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이는 주민 교양을 담당하는 동시에 당의 입장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나타내어 남한이 북한 당국의 생각을 읽어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 2. 대남 비난 기사의 특성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 비난 기사는 북한의 통일관에 따른 대남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신문리론』에서는 신문의 본질을 ‘근로자들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교양의 강력한 수단’, ‘계급투쟁의 사상적 무기 가운데서도 가장 예리하고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무기’라고 규정함으로써 신문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보고 있다.<sup>14)</sup> 북한은 이처럼 신문을 이용하여 북한주민의

11) 배순재·라두림, 『신문리론』(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1967), pp.111-114.

12)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나남출판, 1997), p.119.

13)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나남출판, 1997), p.120.

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남한의 각종 발언과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천명하기도 한다. 특히 남한 정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승리를 내보인다.

북한의 통일방식과 통일목표는 북한사회의 최고규범인 「조선로동당규약」 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sup>15)</sup>

이러한 통일관에 맞추어 북한은 시기별 국제적, 국내적 환경변화 요인에 따른 대남정책을 펴게 된다. 시기별 북한의 대남정책을 살펴보면 70년대초까지 무력 통일을 추구했던 북한은 70년대초부터 90년대말까지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따른다. 이 시기 고려연방제 전략에 의해 통일전선사업부를 신설, 이들의 주요 전략과업은 남한 내 민주화 운동을 부추기는 한편 적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고려연방제 전략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통일전선사업부의 기본 공작 형태는 한국민족민주전선<sup>16)</sup> 중심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 후 90년대 말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으로 변화하면서 6.15 정상회담 이후에는 민족공조를 더욱 부각시키며 ‘우리민족끼리’로 북한의 대외적 통일전략을 공식화하였다.

최근에는 남한의 대선구도를 ‘친북평화세력 대 반북전쟁세력’으로 구분 지으려는 노력이 보인다.<sup>17)</sup> 이러한 대남전략은 분명 북한의 언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 기관지로서 당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로동신문』은 대남 정책을 그대로 투영하는 매체가 되었다. 1982년 『신문학』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1989년 『신문학개론』에서는

14) 조오현 외, 『북한 언어문화의 이해』(경진문화사, 2005), p.179.

15) 「조선로동당규약」 전문, 『통일문제 이해』(통일교육원, 2007), p.73.

16)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초기 월북 출신들로 조직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후속 기관으로서, 노동당 적화 통일정책의 전위부대라고 할 수 있다.

17) 정영태 외,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통일연구원, 2007. 7), p.12.

“우리 신문에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적극 해설·선전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각성 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잘 취급하는 것과 함께 남조선 정세자료들을 제때에 반영하는 것을 자기의 주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신문의 일반적 기능’이라는 항목에서는 북한 신문의 일반적 기능으로 ‘시대의 선전자’로서의 기능과 ‘진정한 여론의 조직자’로서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sup>18)</sup> 이에 더 나아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사상적 무기’인 당적 신문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도 들고 있다.<sup>19)</sup>

따라서 로동신문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하고,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노동당의 조직 강화와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 또한 로동신문은 김일성부자의 개인 신문이라 할 만큼 그들의 대내외 활동과 발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선전하는 매체로도 이용되어 왔을 것이기에 비록 개인 필명을 쓴다하더라도 결국 김정일과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로동신문의 5~6면에서는 한국 실상 및 통일 논조 등 대남 관계 기사와 국제 뉴스를 실고 있다. 특히 5면은 주로 남한사회 내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 남한 사람들의 주체사상 우월성 인정, 남한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규탄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남한 사회의 혼란상은 북한 내 주민들의 사상교양과 체제결속에 간접 이용된다. 또한 개인 필명으로 장문의 논평을 실음으로써 남한의 대북정책 전반과 각개 사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대남 논평에서 특징적인 것은 속어나 비어, 각종 욕설 등 강한 논조의 단어들 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sup>20)</sup> 이는 북한이 언론 정책에서 보도성보다 정론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문리론』에서는 신문의 속성을 보도성과 정론성으로 구별하고 있다.<sup>21)</sup> 특히 국제

18) 엄기영, 『신문학개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참조.

19)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나남출판, 1997), p.81.

20) 조오현 외, 『북한 언어문화의 이해』(경진문화사, 2005), p.189.

21) 보도성은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새로운 소식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광범한 사람들에게

및 대남 문제 - ‘계급적 원썩’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섬멸적인 공격, 불타는 증오, 무자비한 조소, 신랄한 풍자 등 적들의 멸망의 불가피성, 말로의 정론적인 확인에서 정론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sup>22)</sup> 조소하는 듯한 비유와 욕설 등은 남한의 대북한 정책이나 발언에 대한 북한의 감정과 입장을 여실히 나타내어 한반도의 평화 상태도 전망케 할 수 있다.

### Ⅲ.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 대한 비난 비교 분석

이명박정부 100일간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 비난 기사는 총 160건으로, 노무현정부 대남 비난 기사가 총 67건이었던 것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 남한의 단체가 발표하는 비난을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비난한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이나 론평원, 북한 내 단체의 담화문만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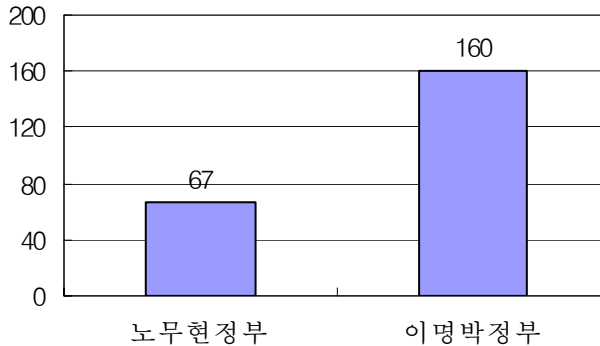
하나의 제목에 담긴 글을 기사 한 건으로 생각한 후, 두 정부 출범 100일간의 비난 기사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속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문의 기본 속성이다. 정론성은 초미의 사회정치적 문제를 논하며 그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천명하고 대중을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신문의 기본 속성이다. 엄기영, 『신문학 개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pp.10-12.

22) 배순재·라두림, 『신문리론』(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1967), p.70.

[표 1] 두 정부의 총 비난 기사수 비교



[표 1]에서 보듯 이명박정부의 비난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은 새 정부가 그 동안의 노무현정부와는 다른 보수적인 대북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친미사대당’으로 치부하는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 정권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이처럼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대남 비난 기사의 빈도수만으로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에 나타난 두 정부에 대한 비난 기사를 대상별, 분야별, 필자별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비교해 본다면 북한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1. 대상별 분석

북한의 대남 비난 기사에는 보통 비난을 받는 인물이나, 단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 대상별로 대남 비난 기사를 나눠봤을 때 크게 경찰·검찰·공안당국, 군부, 남조선당국, 보수언론, 대통령 및 정부, 친미·보수세력, 한나라당, 호전세력, 기타 등 9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위의 9가지 분류를 통틀어 언급 횟수를 살펴보면, 노무현정부 시기 비난 대상 언급이 129건인 것에 반해 이명박정부 시기는 437건으로 약 3.4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는 분석의 과정에서 하나의 기사에 비난 대상인 인물이나 단체가 여러 명일 경우 이를 별도로 취급한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의 제목에 담긴 글을 하나의 비난 기사로 본 총 횟수와는 상이한 수치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대상별 비난을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노무현정부 비난 대상별 빈도수 및 비율

	경찰·검찰 ·공안당국	군 부	남조선 당국	대통령 실명포함	보수 언론	친미· 보수세력	한나 라당	호전 세력	기타	계
횟수	4	11	32	0	7	11	16	19	29	129
비율(%)	3.1	8.5	24.8	0.0	5.4	8.5	12.4	14.7	22.5	100

[표 3] 이명박정부 비난 대상별 빈도수 및 비율

	경찰·검찰 ·공안당국	군 부	남조선 당국	대통령 실명포함	보수 언론	친미· 보수세력	한나라 당	호전 세력	기타	계
횟수	18	59	26	170	7	64	18	28	47	437
비율(%)	4.1	13.5	5.9	38.9	1.6	14.6	4.1	6.4	10.8	1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대상별로 『로동신문』의 비난 기사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대상은 바로 ‘남조선당국’이었다. 이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경험한 북한으로서는 노무현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의 계승 발전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그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도’, ‘사기꾼’, ‘간상배’ 등의 인신 공격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두 정권에 대한 북한의 생각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22.5%를 차지한 기타 비난 대상에는 국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교육부 등이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발표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강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로동신문』 5월 1일자에는 ‘북남청년학생대표자회의’가 남한 정부의 반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민화협’<sup>23)</sup>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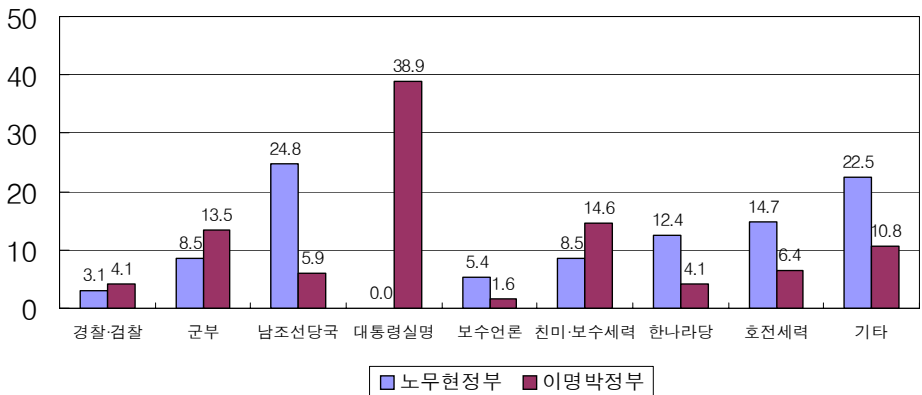
23) 약칭 민화협으로 정식 명칭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다. 이는 북한의 민화협과 파트너 기구인 것처럼 오해되는 일이 많으나, 성격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 남한의 민화협은 남한 내부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보수, 진보 진영의 단합을 위해 200여 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참여 만든 통일운동 상설협의체이다. 반면 북한의 민화협은 북한 당국이 남한의 민간단체,



호전세력은 비난 언급 대상 중 세 번째인 14.7%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부분 군사 분야 관련 기사에서 등장한다. 특히 3월과 4월에 실시된 ‘독수리연습’과 ‘연합전시증원연습’에 대한 비난이 많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로는 북의 도발에 대비한 ‘데프콘-2’ 조기 경계 태세에 대해 비난하고 있었다.<sup>24)</sup>

군부 역시 호전세력과 마찬가지로 군사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 보수언론은 꾸준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경찰, 검찰,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통일애국인사’를 탄압하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표 4] 비난 대상별 비교표(%)



반면 [표 4]에서 보듯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대남 비난 기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대상은 바로 이명박 정권 측근 인사들과 새 정부에 대한 것이었다. ‘리명박’이라는 실명이 포함된 표현은 대상별 총 언급 수 437번 중 총 170번이나 등장하였으며, 그 중 이명박 대통령만을 지칭하여 비난한 것은 69번, ‘리명박 일당·폐당·정권·정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 전체에 대한 비난은 170번으로 나타났다. 새로 들어선

사업체와 교류 협력을 위해 만든 대남기구이다.

24) 2003년 3월 24일자 『로동신문』의 “사대매국적인 망동”이라는 논평에서는 “《데프콘-2》 태세는 전쟁 전야에만 취해지는 것”으로서 이는 “조선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그것은 사실상 전시체제를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외세 공조와 관련한 비난과 동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주로 ‘반역 《정권》’, ‘사대매국정권’, ‘반통일대결 정권’, ‘호전정권’, ‘파쑈정권’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명박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리명박패당’, ‘리명박일당’, ‘패거리’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정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패거리들’, ‘우익보수정당 리회창역도의 자유선진당패거리들’, ‘반역도당’, ‘반역도당’, ‘파쑈도당’ 등의 표현이 쓰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은 69건 등장, 대상별 비난 언급 횟수의 약 16%를 차지한다. 이는 북한의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에 대한 입장을 엿보게끔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표현은 ‘리명박역도’로서 ‘리명박’이라는 표현, ‘역도’라는 표현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관해서는 ‘기업이나 하던’ 사람, 미국과 일본에 가서 ‘구걸 행각’을 하고 온 사람으로 인신 공격적 표현을 하고 있으며, 등록금 문제에 관해 비난을 하면서 ‘고려대’가 가장 등록금이 비싸다는 내용으로 고려대학교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간접 비난도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남한 내 사회문제에 관해서도 그 본질적인 원인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리는 다소 억지스러운 모습도 보인다.<sup>25)</sup>

친미·보수 세력에 관한 표현들은 외교·경제·사회·군사분야 모두에 주로 사용되었다.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는 주로 ‘한·미·일 삼각동맹’ 등 동맹 강화에 대해 비난하였고, 사회 분야에서는 역사교과서 발간과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비난하였다.

다음으로 13.5%를 차지한 군부에 대한 비난은 주로 한미 동맹 강화와 합동군사연습, ‘선제타격’ 발언 등에 관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괴뢰군부’가 북한에 ‘빼라살포행위’를 하였다는 기사도 있었다.<sup>26)</sup> 한 가지 특징적인

25) 2008년 5월 15일자 『로동신문』은 “주체성,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송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원인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또한 2008년 5월 19일자 『로동신문』에 실린 “늘어나는 자살현상—누구의 탓인가”라는 사설에서도 높아가는 자살율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대선 공약 때문이라며 비난하였다.

26) 2008년 5월 31일자 『로동신문』에서는 ‘리명박패당이 괴뢰군부와 남조선의 우익반공단체들을 내세워 각종 형태의 반공화국빼라살포행위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을 위한 모든 쌍방 군사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새로운

것은 노무현정부 시기 비난 기사에서 군부를 지칭할 때는 ‘남조선군부’, ‘군당국’ 등의 공식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반해 이명박정부 시기 비난 기사에서는 ‘괴뢰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 정부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에 대한 표현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난하고 있었고, 대대적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과 ‘백골단’ 부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기타 언급된 대상을 살펴보면 ‘력대 남조선 통치배’, ‘독재자’, ‘역대반동 통치배’ 등의 표현으로 지난 대통령들도 지칭하고 있다. 주로 ‘김영삼역도’, ‘유신독재자’, ‘5공6공군부깡패들’, ‘리승만역도’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특징적이다.

[표 4]를 보면 가장 먼저 ‘남조선당국’이라는 표현이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확연하게 줄어든 대신 대통령 실명이 포함된 비난이 크게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노무현정부 시기 ‘남조선당국’이라는 표현이 24.8%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이명박정부 시기는 5.9%로 약 4배가 감소하였다. 반면 노무현정부 시기 대통령의 실명이 단 한 건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명박정부는 약 38.9%를 차지해 엄청난 증가폭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할 때 ‘남조선당국’이나 ‘남측’이라는 공식적 용어보다는 감정이 실린 ‘남조선괴뢰당국’이나 ‘리명박패거리’ 등으로 남한의 지칭을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 대한 언급도 이명박정부 시기 약 4%로 노무현정부 약 12%에 비해 3배 감소하였다. 또한 ‘호전세력’, ‘기타’에 대한 비율도 약 2배씩 감소하였다. 이 역시 한나라당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한나라당이라는 표현대신 ‘리명박패당’, ‘리명박일당’, ‘보수집권세력’ 등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당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남한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

---

도발행위’라며 비난하였다.

가면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줄곧 요구해 오고 있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것이기 보다 남한정부를 압박하여 10·4선언의 이행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즉 북한당국의 대남 비난 및 경색국면 조성이 남한과의 관계 악화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10·4 선언에 대한 담보를 얻어 그동안 형성되어 온 남북간 평화 공존의 기초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7)</sup>

이렇듯 6.15와 10.4 선언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민족공조’를 부르짖는 것은 결국 남한정부로부터의 대북지원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으로 보인다.

---

27) 전미영, 『남한 비난 고조 6.15와 10.4 선언 이행 촉구』, 『통일한국』, 통권 제295호(평화문제연구소, 2008.7), pp. 76-77.

## 2. 분야별 분석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 비난 기사는 그 사안의 주제별로 크게 경제, 군사, 남북문제, 외교, 인권, 사회, 핵문제 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분야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각각의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비난을 다룬다. 군사분야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공중정탐, 국방부의 정책, 군 관련 인사의 발언, 무력도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맹 강화 등을 포함한다. 남북문제 분야는 통일과 대북정책 등을 말하고, 외교분야는 한미관계, 한일관계에 대한 비난을 말한다. 사회분야는 남한 내의 문제에 관한 비난을 주로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나 진보인사 탄압, 법(法)과 검찰에 대한 비난, 대학 등록금 문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국가정보원, 교육정책, 역사교과서 문제 등이다. 인권문제는 외교분야와 남북관계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핵문제는 외교분야와 군사분야, 남북관계분야를 아우른다. 따라서 그 분류가 모호한 핵 문제와 인권문제는 따로 떼어 하나의 분야로 구분했다.

단, 분야별 비난 기사 분석의 과정에서 하나의 기사 중 복한이 비난을 하고 있는 사안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이를 별개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제목에 담긴 글을 하나의 비난 기사로 본 총 횟수와는 상이한 수치를 보일 수 있다.

[표 5] 노무현정부 분야별 비난 빈도수 및 비율

	경제분야	군사분야	남북문제분야	외교분야	인권	사회분야	핵	계
횟수	0	27	8	8	0	15	11	69
비율(%)	0.0	39.1	11.6	11.6	0.0	21.7	15.9	100

[표 6] 이명박정부 분야별 비난 빈도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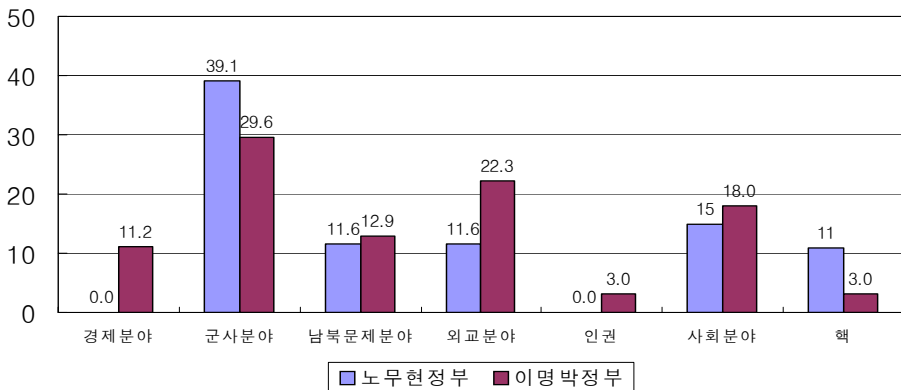
	경제분야	군사분야	남북문제분야	외교분야	인권	사회분야	핵	계
횟수	26	69	30	52	7	42	7	233
비율(%)	11.2	29.6	12.9	22.3	3.0	18.0	3.0	100

[표 5]와 [표 6]을 보면 가장 먼저 노무현정부 시기 분야별 총 69건의 비난이 있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233건의 비난이 있었는데, 이는 약 3.4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두 정부의 분야별 비난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면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군사분야 27건, 사회분야 15건, 핵문제 11건, 남북문제분야 8건, 외교분야 8건, 경제분야와 인권분야 각각 0건 순으로 군사분야의 높은 비율이 눈에 띈다. 한편 [표 6]에서 보듯 이명박정부 시기 역시 군사분야가 69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분야에서는 노무현정부에 비해 이명박정부가 약 2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인한 ‘한미공조’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더불어 진행되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로 비난 횟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 비난 분야별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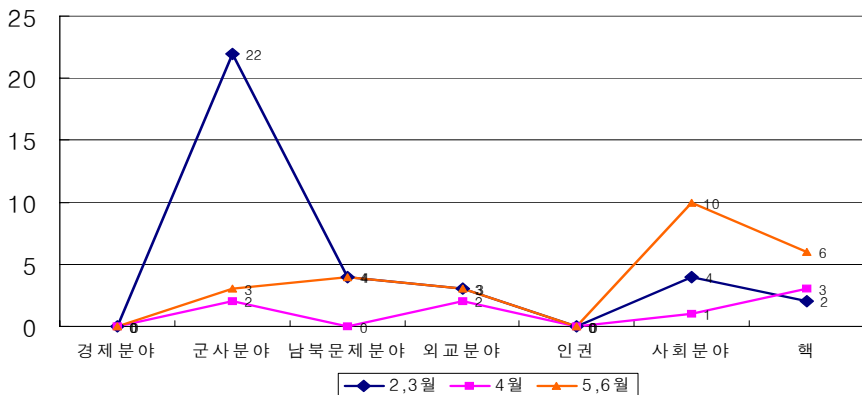


[표 7]을 보면, 군사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명박정부의 수치가 높지만 핵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노무현정부에 대한 비난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노무현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따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야별 분석은 정부 출범 100일간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비난 분야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 100일을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4월 30일,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분기로 나누어 분야별 비난 횟수를 나타낸다면 월별 주요 남북 현안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월별 대남 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분야별 월별 비난 빈도수(건)



[표 8]을 보면 가장 먼저 노무현정부 시기 4월과 5~6월에 비해 2~3월의 군사분야 비난 기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월말 독수리훈련과 연합전시증원연습 실시 예정 언급부터 시작하여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된 독수리훈련과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연합전시증원훈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 30일에는 남한의 이라크파병 결정과 관련하여 장문의 비난 기사를 신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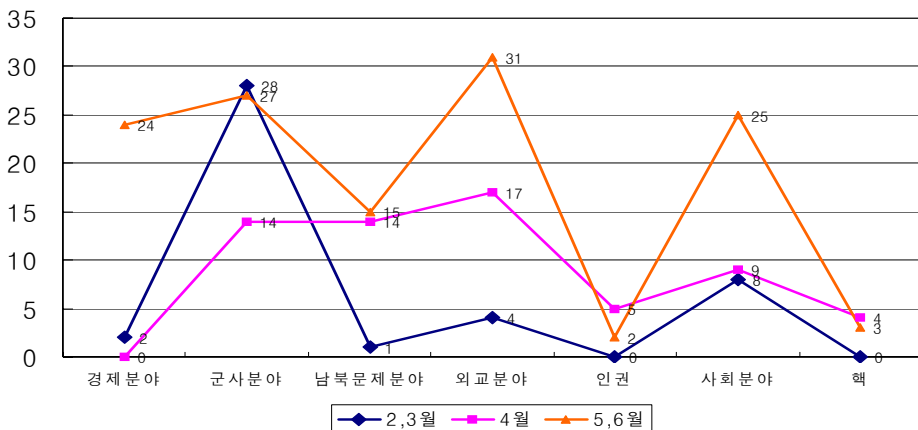
사회분야에서는 5~6월에 빈도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5월 내내 한나라당의 ‘세풍’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실시 관련 비난이 많았기 때문이고, 5월초 ‘전교조’의 반전평화교육에 대해 반미적이라 하면서 반전평화교육을 탄압한 것에 대한 비난 때문이었다.

5~6월에는 핵문제와 관련한 비난 기사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2003년 5월 14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남한은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미국과의 공조를 확실히 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북한은 평화과외 행동시 ‘추가적 조치 고려’와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sup>28)</sup>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상당했다. 6월 2일자 『로동신문』에서는 개인필명으로 비난 기사를 실었는데, 외교통상부 운영관 전 장관에 대해 ‘누구의 꿀머슴노릇이나 하기 좋은 비굴한 아침쟁이 기질을 가진 추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남북문제분야에서는 북한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 당국자에 대한 비난이 정부 초기에 비해 강해진 측면도 살펴볼 수 있다. 2~3월에는 대북 송금사건으로 주로 한나라당을 비난하였지만, 5~6월에는 ‘북의 체제와 주민을 구분해야 된다’는 남한의 발언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의 친미 변신 행위’라는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당초 기대했던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민족공조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분야별 월별 비난 빈도수(건)



28) 전현준, 『대남 비난 강화한 북한 속사정』, 『통일한국』, 통권 제235호(평화문제연구소, 2003. 7), p.34.



[표 9]를 보면 가장 먼저 5~6월의 비난 기사 수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진행된 쇠고기 수입에 관한 사항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여파로 경제분야에서 2~3월에는 2건, 4월에는 0건에 불과했던 비난이 5~6월에는 2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진행된 쇠고기 수입과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남한 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비난도 더불어 상승한 것이다. 또한 그와 함께 촛불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경 진압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논란도 커지면서 사회분야 비난도 25건으로 5~6월이 2~4월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남북문제분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한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음으로써 <비핵·개방·3000> 기조 사용을 자제하면서 5~6월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듯하다.

한편 군사분야는 꾸준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지만 2~3월에 눈에 띄게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2~3월 기사 전체에서 군사분야의 비난이 차지하는 비율은 65%나 된다. 이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군사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리명박’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한 것은 4월 1일자 『로동신문』 2면에 실린 “남조선 당국이 반복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논평에서였다.<sup>29)</sup>

### 3. 필자별 분석

『로동신문』에 나타나는 대남 비난 기사는 크게 논평과 단평, 보도기사, 담화문, 통지문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논평에는 기자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논평과 논평원을 대표하는 글, 그리고 편집국의 논평이 있다. 이러한

29) 대남 비난 기사가 주로 『로동신문』 5면에 실리는 것에 비해 2면에 장문의 기사가 실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세 가지 형태에 따라 논평의 무게와 위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논평원의 글은 본질상 당의 입장,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논평 일반과 구분하여 특별한 의의를 부여할 때에만 이름 없이 논평원의 글로 내보내게 된다.

당의 목소리,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직접 대변하는 논평원의 글은 시사문제 취급에 있어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논평을 쓰는 기자는 대적 언론전의 최전방에서 적과 직접 맞서 글로써의 전쟁, 말로써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원의 심정으로 글을 써야 한다고 한다.<sup>30)</sup>

북한 보도기사는 주로 조선중앙통신의 이름으로 신문에 실린다. 남한과 다른 북한 보도기사의 중요한 특성은 보도기사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사실과 사건의 맹목적인 복사 또는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새로운 사실과 사건은 기자들의 사상 관점에 의해 선택, 평가되고 체현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즉, 기자들의 정치 사상적 입장과 수준에 따라 현실의 끝없이 다양한 사실, 사건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소개해야 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이다.<sup>31)</sup>

북한은 신문 기사 우측 하단에 그 기사의 정보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신문의 정보원으로는 당, 중앙통신, 본사기자, 독자와 통신원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원이 당인 경우는 위와 같은 정보원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데, 이는 기사의 대부분이 당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이나 행정기관이 남한에 보내는 통지와 같은 기사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sup>32)</sup>

위에서 언급한 기사의 종류에 따라 필자를 구분하여 보면, 논평과 단평은 주로 론평원, 군사론평원, 개인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보도기사는 조선중앙통신이, 담화문은 각종 위원회가 맡고 있다. 통지문은 대개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는 형식으로, 대변인이나 군 수장이 필자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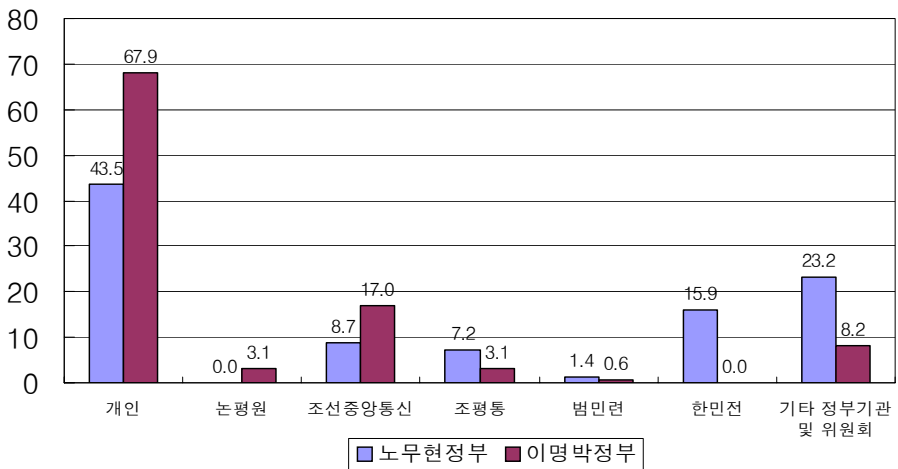
30)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나남출판, 1997), p.120.

31)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나남출판, 1997), p.121.

32)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나남출판, 1997), p.131.

다음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필자별 비난을 분석한 표이다. 단, 이는 분석의 과정에서 하나의 기사에 비난을 하는 필자나 성명을 내놓은 대변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이를 별도로 취급한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의 제목에 담긴 글을 하나의 비난 기사로 본 총 횟수와는 상이한 수치를 보일 수 있다.

[표 9] 비난 필자별 비교표(%)



[표 10] 노무현정부 필자별 비난 빈도수 및 비율

	개인	논평원	조선중앙통신	조평통	범민련	한민전	기타 정부기관 및 위원회	계
횟수	30	0	6	5	1	11	16	69
비율(%)	43.5	0.0	8.7	7.2	1.4	15.9	23.2	100

[표 11] 이명박정부 필자별 비난 빈도수 및 비율

	개인	논평원	조선중앙통신	조평통	범민련	한민전	기타 정부기관 및 위원회	계
횟수	108	5	27	5	1	0	13	159
비율(%)	67.9	3.1	17.0	3.1	0.6	0.0	8.2	100

[표 10]에서 보면 노무현정부 대남 비난 기사의 약 44%가 개인 필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논평은 개인 필명으로 게재되며 이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개인의 이름으로 실린 비난 기사는 장문인 경우가 많으며, 각각의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부문별로 비난을 하는 경향을 가진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필자로는 각종 정부기관과 위원회였다. 이를 살펴보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sup>33)</sup>, 농근맹중앙위원회,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대변인 등이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은 15.9%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민전은 북한이 남한 내에 조직되어 있는 지하당이라 주장하고 있는 노동당 직속의 위장 단체이다. 한민전은 산하에 칠보산 연락소와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sup>34)</sup> ‘구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이 남한 내 실존하는 한민전 산하 방송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 남한식 억양과 발음으로 훈련된 아나운서들을 내세워 민주화 운동을 호소, 유언비어 유포,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왜곡 등 전과 침투를 하는 통일전선사업부 밑의 26연락소이다.<sup>35)</sup>

실제로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100일간 「로동신문」에는 한민전의 이름으로 ‘대북송금’사건과 ‘세풍’ 사건 등의 남한 내 문제와 북한 당국의 입장을 실은 군사분야 관련 비난도 있었다. 또한 한민전 중앙위원회 기관지 ‘구국전선’도 ‘세풍’ 사건과 관련해 ‘리회창’이라는 실명을 거론하며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한편, 대남 비난 기사 필자의 7.2%를 차지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 대변인과 서기국 역시 노동당의 전위기구로 4.19 혁명 직후 국내 학생·재야 등으로부터 통일 논의가 분출되자 이를 대남혁명전략에 활용하기

33) 남북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건물도 구성원도 없는 통전부 산하 유명조직이다. ‘아태’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나 동조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 관계와 국제우호관계를 강조한다.

34) 중앙일보사, 『멀티미디어 북한백과』(중앙일보사, 1997) 참조

35) 통일전선사업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북한 통전부 간부 출신 탈북자 장철현의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참조

위해 1961년 5월 만들어진 기구이다. 조평통의 기능은 노동당의 통일문제 및 남북대화와 관련한 입장을 대변 또는 옹호하고, 남북 관련 주요 문제 발생시 ‘조평통 서기국 보도’나 대변인 성명 또는 담화 등 문건을 통해 반정부 모략 및 비난여론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것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의 등장이다. 최근의 한민전 활동에 강조할 것은 이전의 한민전 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범민련 활동을 더 추가하였다는 것이다. 범민련 역시 통일전선사업부의 조정을 받는 한민전 소속 하부 기관이다.<sup>36)</sup>

[표 11]을 보면 노무현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 시기에도 개인이 6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남한의 신문처럼 개인이나 본사 기자가 많은 기사를 쓰고 있지만, 이는 개인 자신의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개인 필자의 기사가 당의 입장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약 11%나 차지했던 한민전의 성명이나 담화가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신 범민련의 등장이 눈에 띈다. 물론 비율로서는 1%도 되지 않는 적은 수치이지만 사실 2008년 『로동신문』 대남 기사의 많은 수는 범민련 남측 본부의 성명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범민련의 북측 본부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범민련 남측 본부의 비난 빈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고 판단하였을 때 실제로 최근 한민전의 활동이 축소되고 범민련의 활동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한편 2008년 3월 26일 김태영 합동참모본부장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행한 ‘선제타격’ 발언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다. 북한의 ‘선제타격’에 관한 비난은 ‘군사론평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북남장령급 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기사가 실리고 있어 그 비난의 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은 노무현정부 시기 0건에 불과했던 논평원의 글이

36)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참조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5건이나 나타난 점이다. 논평원의 명의로 글을 실는 것은 상당한 무게와 위력을 가지는 일이다. 논평원의 이름으로 실린 기사를 살펴보면, ‘론평원’의 글이 2건, ‘군사론평원’ 2건, ‘시사론평원’ 1건으로 총 5건이다. 논평원의 이름으로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다.

[표 13] 논평원 기사

날 짜	제 목	필 자	주 제
08.3.31	남조선당국자들은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군사론평원	군사분야
08.4. 1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	론평원	남북문제분야
08.5. 2	사대매국과 반북대결의 수치스러운 범죄행각	시사론평원	전분야
08.5. 9	리명박역도의 군사적대결소동진상을 밝힌다	군사론평원	군사분야
08.5.30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인 <실용주의>를 단죄함	론평원	남북문제분야

## IV. 결 론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과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로동신문』에 실린 대남 비난 기사를 대상별, 분야별, 필자별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노무현정부 시기 69건이었던 비난 기사가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160건으로 약 2.4배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대상별로 보면, 대북포용정책을 지향했던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남조선당국’, ‘남측’, ‘군당국’, ‘귀측’ 등 다소 공식적 표현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리명박역도’, ‘리명박일당’, ‘리명박패당’ 등 대통령의 실명이 포함된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 또한 노무현정부에 비해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는 비난 내용이 ‘기업이나 하던 자’, ‘간상배’, ‘정치 문외한’ 등 대통령 개인에 대한 표현에 비난 강도가 집중되고 있다. 물론 역대 대통령에 대한 표현에서도 ‘이승만역도’, ‘유신독재자’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무현정부 시기를 대상별로 분석해 본 결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칭은 ‘당국자’로 단 한번 거론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남조선 당국자의 친미 변신 행위’라는 표현은 대북포용정책과 민족공조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무너졌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분야별로는 특정 사안에 따라 비난의 표현이나 강도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모두 군사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난이 있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핵문제에 따른 남한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분야별 비난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경제분야와 외교분야가 이명박정부 시기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이명박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함께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남한 내 여론을 조장하고 친북세력의 동조를 위해 비난을 강화하면서 사회분야의 비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필자별로 비난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무현정부 시기 약 16%나 차지했던 한민전의 기사가 이명박정부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비록 이명박정부 시기 대남 비난 기사에서 0.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측본부의 이름으로 『로동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범민련의 성장은 범민련이 과거 한민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또한 당의 공식입장을 더욱 강하게 천명하는 논평원의 글이 노무현정부 시기 0건이었던 것에 반해 이명박정부 때에는 5건이나 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이 내놓은 대남 비난 기사는 남북관계의 경직성을 파악하게 한다. 따라서 2008년 현재 보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2배 이상 증가한 비난 횟수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밝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비난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비난 사항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불이행’이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 서울 : 나남출판, 1997.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남북한 관계론』, 서울 : 한울, 2005.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 방법론』, 서울 : 한울, 2003.
-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1990.
- 김영주 · 이범수, 『김정일 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 서울 : 한울, 1994.
- 김영주 · 이범주, 『현대 북한 언론의 이해』, 서울 : 한울, 1999.
-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 역, 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2.
- 유동열,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분석』, 『북한학보』 29, 북한학회, 2004. 12.
- 장용훈, 『대선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 남한 정권교체에 병어리 냉가슴된 북한』, 『통일한국』, 통권 제290호, 평화문제연구소, 2008. 2.
-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전미영, 『남한 비난 고조 6.15와 10.4 선언 이행 촉구』, 『통일한국』, 통권 제295호, 평화문제연구소, 2008. 7.
- 전미영,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 『로동신문』(1994.7.4~2001. 11.31) 사설 · 정론 · 논설을 중심으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1.
- 전현준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 박영사, 2005.
- 전현준, 『대남 비난 강화한 북한 속사정』, 『통일한국』, 통권 제235호, 평화문제연구소, 2003. 7.
-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 : 지속성과 변화, 1948~2004』, 서울 : 한울, 2005.
- 정영태 외,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7.
- 『조선로동당규약』 전문,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조오현 외, 『북한 언어문화의 이해』, 서울 : 경진문화사, 2005.
- 중앙일보사, 『멀티미디어 북한백과』, 중앙일보사, 1997.



[북한 문헌]

『조선말대사전(증보판)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7.

배순재 · 라두림, 『신문리론』,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1967.

엄기영, 『신문학개론』,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신문]

『연합뉴스』

『로동신문』

## 대학(원)생 통일논문집

〈비매품〉

---

인쇄일 2008년 12월 26일

발행일 2008년 12월 26일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소 14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전화 02) 901-7122 / 팩스 02) 901-7024

편집·인쇄 맥향커뮤니케이션

전화 02) 2272-7890 / 팩스 02) 2274-7560

---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이 책자는 통일부([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또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08

제27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 대학(원)생 통일논문집